

열린충남

2017
SUMMER Vol.79

특집

새정부 출범과 충남의 국정과제 역제안

1.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의 도입과 향후 과제
2.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와 건강
3.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4.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생태 복원
5. 내포혁신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6. 차별화된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

충남논단

충남 공공체육시설의 적정 운영 방안
세계유산,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충남의 섬

매력 넘치는 섬 여행의 진수, 원산도(元山島)

열린충남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남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연구원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한태평양의 중심 지역으로
세계 속의 충청남도를 꿈꾸는 곳

충청남도의 미래와 210만 도민의 행복을 연구하는
우리는 충남연구원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 「열린충남」 2017년 통권 79호
국제연속표준간행물 [ISSN] 1226-637X 비매품

© 2017 충남연구원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우리 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17년 7월 31일 창간일 1995년 9월 1일 발행인 강현수 발행처 충남연구원, 충남공공갈등연구팀
주소 우)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금흥동) 전화 041. 840. 1114 팩스 041. 840. 1129 홈페이지 http://www.cni.re.kr
편집위원장 권영현 편집위원 김양중, 김종화, 오병찬, 유학열, 이상준, 정종관, 정지은 에디터 정봉희, 이유나
문의사항은 magazine@humanrights.go.kr로 연락바랍니다 기획·디자인·제작 (주)승일미디어그룹

Summer, 2017 vol.79

CONTENTS

04. 권두언

새로운 국가를 위한 충남의 역할과 기대

06. 특집

새정부 출범과 충남의 국정과제 역제안

1.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의 도입과 향후 과제
2.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와 건강
3.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4.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생태 복원
5. 내포혁신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6. 차별화된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

38. 충남논단

충남 공공체육시설의 적정 운영 방안
세계유산,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52. 충남마을 기행

사과꽃 향기 가득한 청정마을, 금산 바리실마을

56. 충남의 섬

매력 넘치는 섬 여행의 진수, 원산도(元山島)

62. 열린마당

홍성, 오리농법의 부활을 꿈꾼다
충남인터뷰_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
충남의 미래를 함께 나누다

80. 해외리포트

베트남 지역 환경 현황과 미래
런던 도시 디자인 정책

92. 상생과 협력

평화 문제, 강정해군기지 갈등을 통해 보다
생활계·플라스틱계 SRF제조산업 현황

104. 오피니언

우리에게 농촌은, 무너진 삶의 원형을 기억하는 기회의 공간이다
멀미 체질의 해외여행 마니아

109. 충남 소식

올 여름 ‘만리포 가는 길’ 편리해진다 외

112. 연구원 소식

충남도,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 머리 맞대” 외

115. 충남 문화유산

청송선생유묵(聽松先生遺墨)





새로운 국가를 위한 충남의 역할과 기대

안정선 충남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공주대학교 교수)

길고 긴 시간 동안의 국가적 혼란 속에서 전 세계가 주목했던 촛불 혁명이 가능할 것인지가 초유의 관심사였던 가운데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함께하는 국정의를 성공시켜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게 되었다. 새로운 정부가 국정 의 동력을 얻는 지점을 다양하게 구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련의 일들-광화문 일 번가,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국민 여론의 반영, 제2국무회의 신설 계획 등-을 통해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충남도의 역량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는 충남도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 대응과 국정 의 공동 참여자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새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여!

충남의 제안

충남은 우리나라 국가 지형 요소의 축소판이며 서해안 벨트의 중요한 거점일 뿐 아니라,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정치·사회적 문제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내재된 가치, 정책 집행 구조 등의 양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충남의 성공적 사례를 공유하여 국정과제로 끌어올릴 때 정부 운영의 가치를 전환하고 정책 집행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하는 정부를 위한 충남도의 노력은 민선 5, 6기를 관통하는 가치를 점검하여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충남도의 제안 사업이 국가적 과제로 확대·재구성이 가능한지를 다시 점검하고, 과제 제안의 당위성을 확보할 논리를 다듬는 일도 매우 중요해 보인다.

이미 충청남도도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국정기획위를 통해 제출한 바 있다. 이 과제

들은 전국 공통과제와 충청남도 지역과제라는 틀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에너지부터 복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현황의 분석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법률의 개정과 정책 기조의 전환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제안의 구체성을 만들어 낸 충청남도의 부단한 노력과 충남연구원의 원장과 함께 분, 초를 아끼며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한 연구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도의회 의 제안으로 대통령 공약 실행 민관협의회가 출범하기에 이르자 기대치는 더욱 높아졌다. 그간의 노력이 제안으로만 끝나면 안된다는 도민의 염원이 무게감 있게 실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얼마나,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임감도 커지는 게 현실이다.

정부의 실패가 어떤 아픔과 고통을 주는 지를 충분히 학습한 국민들, 그리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키는 힘을 발휘하고 국가 의제를 직접 디자인하고 제안해 내는 과정에 참여한 국민

들을 견인해 내고 성과를 내려면 그간의 방식을 바꾸어야만 한다. 잠재되어 있던 국민의 욕구를 가장 민주적인 절차와 문화적 감수성을 통해 수렴하는 직접민주주의 훈련을 경험한 국민들이 현 정부의 정책고객이자 주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정책의 점검을 통해 우리가 각 정책들이 국정운영 권력의 배분을 지방정부, 국민과 함께하도록 견인해내는 구조인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의 명목적 수준에서 실질적인 분권형으로 가는 정책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다. 시민 영역의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약한 지방정부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충남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분권형 자치를 잘 실행해 오고 있고, 낮은 시민 영역의 인프라 구축과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 및 권한 부여를 통해 민관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낸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영역별, 개별 제안된 정책들을 재점검하여 적극적 국정운영의 기본 틀을 '자치분권형 정책'으로 견인해 낼 것을 제안한다.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중요하다. 어느 정부이든 출범 시 국민의 보편적 권리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중요하게 두지만 결국은 효율성에 매몰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충남의 제안은 특히, 정책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 제출된 충남의 제안이 동력을 갖기 위해 충남도민만을 위한 정책보다 전 국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제안을 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정책이 지방정부 사이의 견제와 밥그릇 싸움 정도로 치부되어 배제되는 일들을 충분히 경험했기에 이를 재점검하는 일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충남의 역할

의 보편성에서 윤리적 정당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도정 전반에 걸쳐 인권, 젠더, 소수자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검토의 방향과 제안의 구체성에 담길 수 있는 기초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물 통합 관리, 3농 혁신, 일자리,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뛰어넘어 충남의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정책이 되어 전 국민들을 설득한다면 하는 상상이 현실이 되길 기대한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배는 전혀 새롭지만 가장 기본에 충실한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 항해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도는 대한민국호의 항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참여하고 견인해내는 역할을 자임하며 적극적인 제안을 마다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 상태이다.

충청남도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 되고 충남도민의 행복이 전 국민의 행복이 되길 기원한다.

새정부 출범과 충남의 국정과제 역제안

FOCUS 01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의 도입과 향후 과제

FOCUS 02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와 건강

FOCUS 03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FOCUS 04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and 생태 복원

FOCUS 05 내포혁신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FOCUS 06 차별화된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의 도입과 향후 과제

이관률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장

1 추진배경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형 직불제의 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9개 직불제를 공익성이 강조된 형태로 개편하기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친환경농업직불, 농지관리직불, 그리고 청년농업인 직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직불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은 의미가 크다. 이 시점에서 당초 지역차원에서 최초로 제기된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의 추진내용과 의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농산물 가격보전을 목적으로 한 기존의 농업직불금 제도는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논리적 근거가 낮아지고 있다 (Tangerman, S. 2011). 많은 선진국들이 농업·농촌이 갖는 공공적·다원적 기능에 근거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최근 농가소득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공적자금이 등장하고 있어,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공적자금의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충남도는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방안(2014)”을 관련 기관에 제안한 적이 있다. 당시 제안된 방안에 대한 공감은 있었지만, 실행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당시 개선 방안으로 제안했던 농업직불금 제도는 제1축 희망농업직불(식량자금 프로그램과 젊은농부 프로그램), 제2축 생태경관직불(농업생태 프로그램, 농촌경관 프로그램), 제3축 행복농촌직불(농촌공동체 프로그램, 농촌안전망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충청남도도 사업의 실행가능성과 사업성과 검증을 위해 2016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현재 진행 중이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충남도는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2016년 3월부터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은행으로 유명한 보령시 장현마을과 1980년대부터 친환경농업을 추진해 온 청양군 화암마을에서 시행되고 있다.

충남도는 시범사업의 실패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격적 사업 추진 이전인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차례의 농민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마을별로 총 7회의 농민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였다. 충남도와 개별 시군, 그리고 개별농가가 1:1 컨설팅을 통해 협약내용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16년 4월 20일 충남도, 보령시, 청양군, 장현마을, 화암마을 관계자가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 실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2016년 협약한 내용에 대한 농민들의 실천과 충남도의 모니터링이 이어졌고, 같은 해 12월, 수행결과에 대한 중간평가와 주민교육이 이루어졌다. 2017년 2월에는 2017년 농가별 협약이 체결되었고, 4월에는 마을에서 추진하는 농촌경관사업에 대한 별도의 협약이 체결되었다. 2016년의 경우 총 126농가(장현마을 68호, 화암마을 58호)가, 2017년에는 총 136농가(장현마을 77호, 화암마을 59호)가 협약을 체결하였다.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은 농가가 협약 사업을 실천하면 1농가당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식량자금 최고 150만 원, 농업생태 최고 200만 원, 농촌경관 최고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세부프로그램과 프로그램별 단가는 7회의 농민교육 및 프로그램개발을 통해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농민교육 및 프로그램개발 과정에서 총 25개의 사업이 도출되었는데, 이중 실제 농민들이 선택한 것은 14개 사업이다. 당초 제시한 사업의 농민 수용률은 56%로 나타났다.

2016년 농민들과 협약한 총 금액은 24,335만 원이고, 1인당 평균 193.1만 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식량자금 프로그램 12,647만 원(1인당 평균 100.4만 원), 농업생태 프로그램 13,734만 원(1인당 평균 109.0만 원)이다. 2017년 농민들과 협약한 총 금액은 29,131만 원이고, 1인당 평균 214.2만 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식량자금 프로그램 14,626만 원(1인당 평균 107.5만 원), 농업생태 프로그램 17,812만 원(1인당 평균 131.0만 원)이다. 농촌경관 프로그램은 마을과 협약 후 추진되기 때문에 협약금액에서 제외되었다.

2016년과 2017년 신청 프로그램 협약금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을 환경친화적 논농업(벼짚환원, 논두렁 풀 안 베기, 환경친화적 농업실천), 밭 농업의 다양화(토종씨앗 재배 및 채종, 작물다양화), 농업생태환경 관리(둠병 조성 및 관리), 겨울철 생태환경 유지(논휴경, 겨울철 논습지 유지, 이모작)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 시범사업 농가의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식량자금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농업에 대한 참여의식이 높아졌고 다양한 형태의 작물을 재배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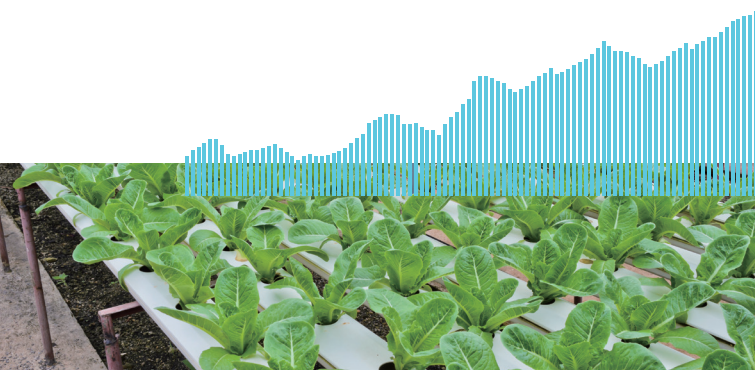
1) 충남지역의 토종종자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토종씨앗이 재배되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 혼작이며, 토종씨앗 재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 비료와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환경친화적 의식의 농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비료사용 절감으로 벼 1묘에서 거두는 수확량은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각종 풍수해로 인한 도복의 위험이 감소하고 밥맛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생협 등과 계약재배 및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수수, 귀리, 녹두 등 마을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다양화해지고 있다. 1960년대 과거 농촌풍경이 되살아나는 효과가 있고, 수숫대를 이용해 빗자루를 만드는 등의 부수적 체험도 가능하다.

둘째, 농업생태 프로그램을 통해 식물계와 동물계의 생태순환 활성화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

1) 논지 내 수목유지로 인해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생태순환이 활성화되며 논외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논을 휴경하고 습지를 조성한 경우 생태환경이 급속히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휴경 논에 다양한 동물 및 곤충들이 서식함에 따라 유기물 함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휴경을 한 경우 미곡의 품질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둠병을 조성하면 각종 동식물이 안정적인 서식지를 유지하게 되어 생태계가 다양해진다. 둠병 조성으로 논외 물을 바로 댈 때 발생하는 냉해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도 있다. 4) 논두렁 풀 안 베기는 농가의 심리적 저항감이 큰 부분이었으나, 노동력 절감과 더불어 논두렁의 생태계를 다양화하는 이중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 논두렁의 풀을 안 베는 경우 곤충의 종류가 많고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충방제 및 유기물 함량 증가도 예상된다. 농작업에 불편을 끼치기도 하지만 풀이 무한정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 자연적인 천이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논두렁에 유실수 중심의 식재를 하였으나, 대부분 유목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셋째, 농촌경관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을 가꾸겠다는 의식이 증가하고 있다.

1) 쓰레기 분리수거 및 소각 감소로 마을 내부가 과거에 비해 깨끗해지고 있다. 2) 마을경관 정비를 통해 개별 마을에서 반별로 마을안길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꽃길 조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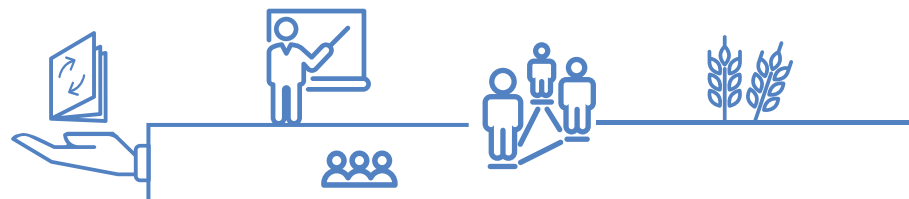


넷째,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공동체 형성가능성과 농업과 생태계의 공생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막연하게 친환경농업은 안 된다는 인식이 점차 사라지고, 부분적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을 도입할 수 있겠다는 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최소한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농민의 자발적 의식이 형성되고 있다. 2) 마을주민 간의 소통이 활발해졌고, 공동체 의식이 복원되고 있다. 3) 확연하게 새의 서식빈도가 증가하였고, 고라니의 개체수도 증가하였다.

3

기본 전제 및 향후 과제



현재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은 국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형 직불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향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보상을 위해 새로운 농업농촌정책이 도입될 경우,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전제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 전제

첫째, 사전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

사업을 시작하기 전, 농민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과정에 컨설팅이 지속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조직체 구성

사업내용의 효과적인 전달과 마을 인력을 활용한 모니터링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의 마을조직체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사업내용에 대한 지역 및 농민 의견 반영

사업의 일방적 추진을 지양하고 사전교육을 통한 농민 의견 반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재설계해야 한다.

넷째, 직불금 용어 미사용 혹은 폐지

직불금은 정책 목적이 아니라 정책의 집행 수단이다. 따라서 농민에게 현금지불의 형태로 집행되는 각종 사업의 명칭을 해당 정책 목적에 맞게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2) 일반화의 과제

첫째, 농가당 사업규모 및 사업단가 적정화

농가당 총 사업규모를 300만 원(식량자급과 농업생태 200만 원, 농촌경관 100만 원) 정도로 설정하고, 단가를 현재 기준보다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작물다양화 및 토종씨앗 재배/재종의 경우 사업단가가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요구된다.

둘째, 프로그램의 단계적 구성과 전환 유도

많은 사업내용을 평면적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기초(최초 2년), 전환(기초 이후 3년), 심화(전환 이후 계속) 등으로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초 및 전환 단계가 지난 이후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으면 더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심화 단계의 경우는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유형화

시범사업 12개를 4개 유형으로 분류한 것처럼 사업내용 간 연관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패키지 형태로 설정·추진해 사업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유형화된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업내용이 단순화될 수 있고, 농민들의 사업선정 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농촌경관 부문 추진방식에 대한 재검토

시범사업의 경우 농촌경관 부문 협약 체결을 마을단위로 추진하였으나, 이는 책임소재에 문제가 있다. 반면 농가 단위 혹은 모임 단위로 추진할 경우 사업효과가 낮을 수 있고, 마을공동체 훼손 우려가 있다

다섯째, 모니터링 및 사업관리의 방안 마련

현재 시범사업 단계로 아직 모니터링 체제가 정비되지 않았으나, 관련조직 및 지방정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단체가 조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사업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시범사업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및 본 사업 추진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효과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일곱째, 예산의 확보 및 사업 확대

위해 사업시행 주체가 시행하는 사업효과 측정은 물론 논문현상공모 등을 통한 객관적 평가도 이루어져야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 소모성/일회성 농정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기존의 9개 직불금 제도를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충남도는 2014년부터 농업직불금 제도개선을 지방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 일환으로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 시범사업 중에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어서 그 성과를 정확히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농가와 직접적인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정책방향 설정에 대한 공감성이 4.24(5점 만점)라는 점, 2016년의 이행율이 평균 86.4%이라는 점 등은 향후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의 형태로 직불금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공익이라는 용어는 매우 추상적인 것이고, 직불제는 정책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공익형 직불제는 목적에 맞게끔 정책화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농정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지역실정에 맞게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면밀하게 검토해 새로운 직불금 제도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와 건강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 미세먼지 관련 충남의 주요 이슈



2016년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감사원 및 NASA 자료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가 수도권의 대기질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로 전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다.

충남의 석탄화력 발전량은 100,207 GWh/년(2015년 기준)으로서 전국 석탄화력 발전량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석탄화력 발전소가 집중되어 있고, 철강단지·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의 환경오염시설까지 집중되어 있다. 또한 산업용지 면적은 65,556천 m²로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이익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대기 등의 환경오염과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17년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서 30년 이상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를 일시 가동중단(셧다운) 하였다. 전국의 가동중단(셧다운) 대상시설은 모두 8호기이며, 그 가운데 4호기가 충남에 있다. 6월 한달 동안 일시중단 했다가 7월부터 다시 가동을 시작한 보령화력 1호기·2호기와 6월부터 영구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게 된 서천화력 1호기·2호기가 충남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당진 에코파워 1호기와 2호기가 시설용량 1,160MW(580MWx2기)로 2022년까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

충남의 미세먼지와 관련 질환 현황

2016년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전국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순위를 보면, 충남의 태안화력·보령화력·당진화력이 2위, 3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현대제철까지 전국 7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충남은 네 곳의 사업장이 전국 10위 안에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그림 1)과 같이 충남의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충남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연소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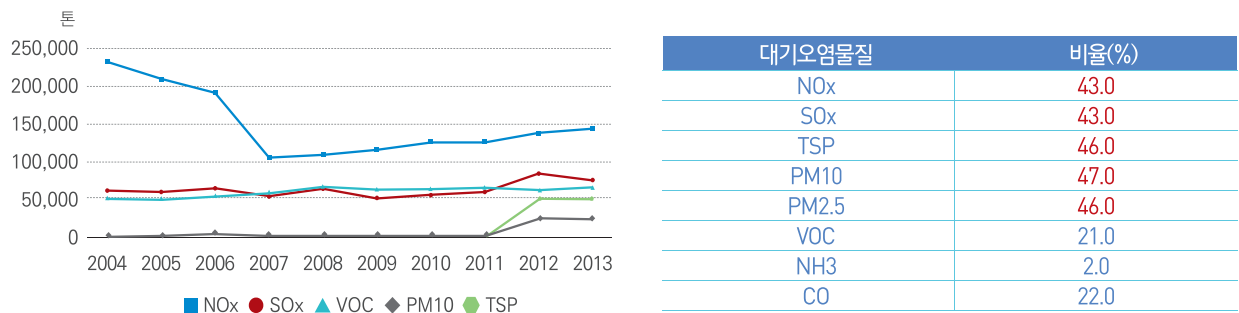


그림 1) 충남의 연도별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04~2013)과 에너지산업 연소 부문의 충남 비중 * 자료 : 충남연구원, 2016

충남 미세먼지 배출량의 지리적 분포를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당진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태안군, 보령시가 지속적으로 높았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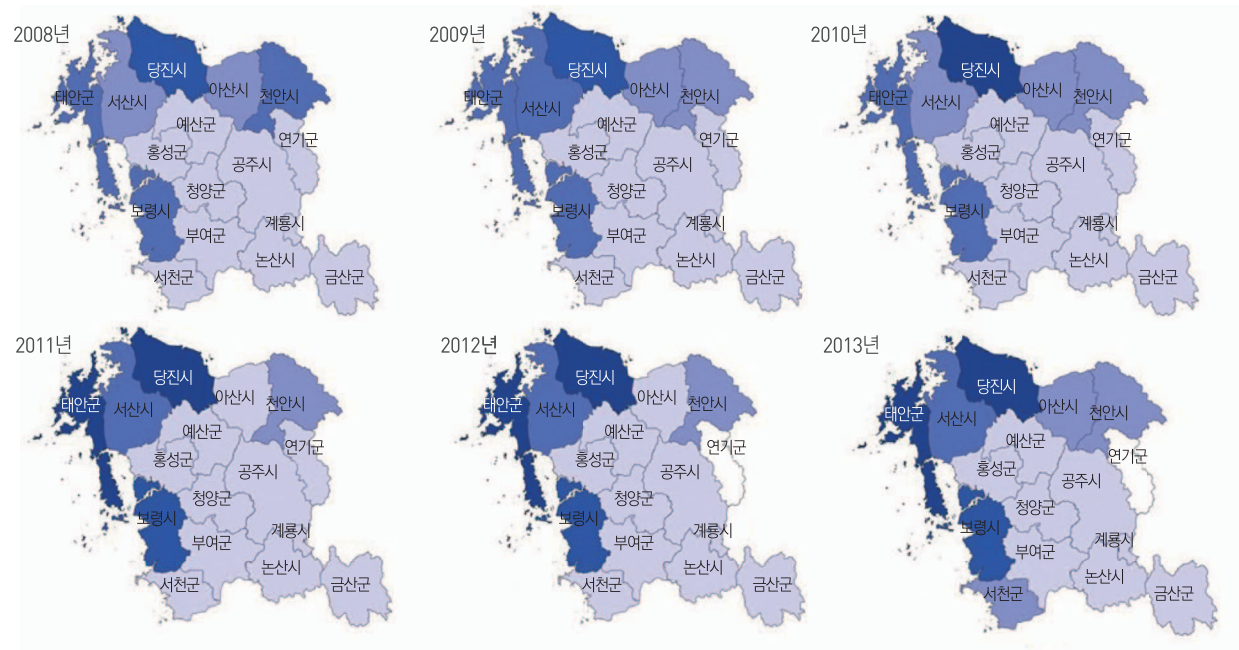


그림 2) 충남 미세먼지(PM₁₀) 배출량의 연도별 지리적 분포 * 자료 : 충남연구원, 2016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충남의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변화를 살펴보면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는 2001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3). 오존은 2001년 이후 감소하다가 2007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충남의 서북부에 위치한 천안시가 서울보다 미세먼지 최고 농도뿐만 아니라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고농도 300 $\mu\text{g}/\text{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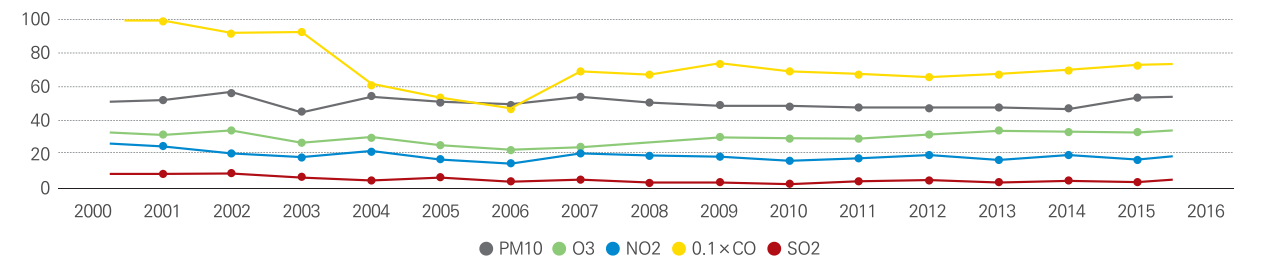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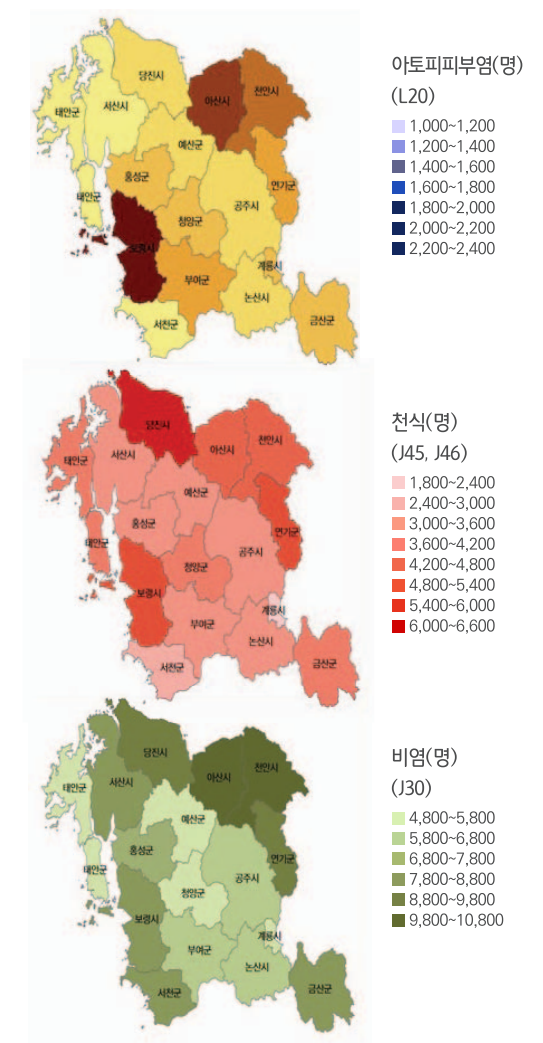


그림 3) 충남의 기준성 대기오염물질 연평균 농도 변화(2011년~2015년) * 자료 : 충남리포트 제231호, 2016

미세먼지와 관련 있는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중에서 천식과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비염의 충남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아토피피부염은 인구 10만 명당 연평균 유병자 수가 2,243 명으로 보령시에서 가장 많았다. 천식은 인구 10만 명당 연 평균 유병자 수가 6,259명인 당진시의 유병률이 가장 높았고 증가율도 가장 급격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알레르기비염 은 인구 10만 명당 연평균 유병자 수가 10,783명으로 천안시 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별로는 충남의 10세 미만의 영유아·어린이들에게서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의 인구 10만 명당 유병자 수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그림 4) 충남 시군별 환경성 질환자의 인구 10만 명당 연평균 유병자 수의 지리적 분포(2004~2013)

* 자료 : 충남연구원, 2016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충남의 환경성질환자 증가에 있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표 1, 표 2). 상관분석 결과, 천식의 경우에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총 부유분진,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증가할수록 천식 인구 10만 명당 유병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1$). 알레르기 질환의 경우도 총 부유분진,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이 증가할수록 알레르기비염 인구 10만 명당 유병자 수가 증가하는 선형관계를 보였다($p<0.01$).

표 1) 대기오염물질과 천식(J45, J46)과의 상관분석 결과 * . $p<0.05$, **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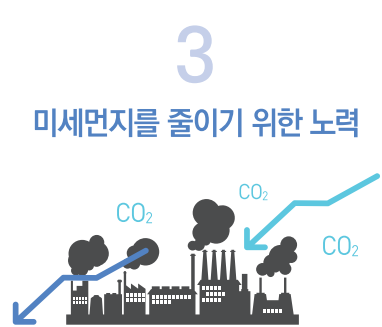
변수	Correlation coefficient
질소산화물(NO _x)	0.364**
황산화물(SO _x)	0.375**
총 부유분진(TSP)	0.302**
미세먼지(PM ₁₀)	0.310**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0.115

*자료 : 충남연구원, 2016

표 2) 대기오염물질과 알레르기 비염(J30)과의 상관분석 결과 * . $p<0.05$, ** . $p<0.01$

변수	Correlation coefficient
질소산화물(NO _x)	0.062
황산화물(SO _x)	0.154
총 부유분진(TSP)	0.178*
미세먼지(PM ₁₀)	0.184*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0.290**

*자료 : 충남연구원, 2016



충남은 석탄수입의 용이성 및 수도권과의 인접성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의 대기질 규제로 인해 많은 산업단지들이 이전해 왔다. 충남지역 주민들은 이에 따른 환경과 건강 피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충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석탄화력발전과 미세먼지’ 이슈가 대두되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시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2017년까지 대기오염** 측

정망 25개~30개를 확충할 예정이다. 조만간 미세먼지 성분 분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배출원도 규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법제도 부문에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배출기준을 점차 수도권 수준으로 강화될 예정이다(2017년 7월1일 시행).

또한 최근에 출범한 새정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탈(脫)석탄’ 에너지 정책이라는 기조 아래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2017년 6월 한 달 동안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시켰는데, 충남지역의 보령화력 1호기·2호기도 일시 가동중단되었다. 나아가 서천화력 1호기·2호기는 영구 가동중단되었다. 2018년도부터는 매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일시 가동중단(셧다운)될 예정이다. 따라서 발전소들도 새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한 발전설비투자과 각종 개선방안을 쏟아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새정부에서 시행하는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셧다운) 정책은 그 전과 후를 비교한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와 주민건강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충남연구원은 이런 점을 고려하여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석탄화력발전 가동중단(3월~6월)에 따른 환경과 건강실태조사의 사전연구(pilot survey)로서 보령화력 1호기·2호기와 서천화력 1호기·2호기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질 변화와 건강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연구 대상이 된 지역은 대기확산예측모델(HYSPLIT)을 통해 추정된 영향권역이다. 이러한 연구들

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되고 축적된다면, 미세먼지와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사실 충남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시키는 부문은 미세먼지 전체 발생량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연소 분야이다. 따라서 충남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업 연소의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대형점 오염원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대책의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원별 배출현황 분석, 시공간 오염현황 분석, 성분과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 등과 같은 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사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이글은 충남리포트 제123호(명형남과 김순태, 2016)와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충남 환경성질환자 실태조사 및 예방관리 방안 연구’(명형남, 2016), 도시환경포럼 발표자료(명형남, 2017)를 중심으로 재정리하여 작성하였다.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신동호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현행 전기요금제는 과연 공정한가?



공정한 전기요금제로의 개편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과연 공정한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공정(公正, fairness)’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평하고 올바름’을 의미하는 바, 현행 전기요금체계가 공정치 못한 두 가지 이유로는 **첫째, 석탄화력 발전·송전에 따른 경제·사회·환경적 피해를 지역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이며, 둘째, 지역별 전력공급의 원가차이가 분명함에도 여전히 전국 단일 전기요금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우려 및 반론 역시 만만치 않은데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경우, 전기요금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며, 해당비용은 현행 법·제도를

통해 내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전기라는 재화의 공익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감안하면 기존 단일전기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제도를 통한 사회적 비용의 내재화 수준은 턱없이 미흡하며, 단일 전기요금은 물가안정에는 기여하나 삶의 질까지 담보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충남도와 충남도민은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의 관점에서 현행 전기요금제를 개편하자는 것이 아닌 지역간 경제적 편익의 공정한 분배와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한 ‘공정한 전기요금제’로의 단계적 개편을 제안하고자 한다.

발전·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스란히 지역에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먼저 석탄화력 발전·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충남지역의 화력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국대비 각각 23.5%, 39.2%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온실가스 피해는 2조 2,370억 원에 이르며, 대기오염물질 피해는 5조 2,43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송전시설 입지에 따른 피해로는 부동산 가치하락 및 토지이용제한에 따른 재산적 피

해, 소음·전파장애 등의 환경적 피해, 그리고 안전사고 및 사고위험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당진시의 경우, 송전선로에 의한 지가하락만으로도 그 피해액이 1,137억 원에 달한다(2014, 충남연구원, 이인희). 여기에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피해까지 고려하면 실로 천문학적인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발전부문의 지역별 이산화탄소(2013)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비용 추정결과(2013)

시도	CO ₂ 배출량 (tCO ₂)	CO ₂ 피해비용 (백만원)	비율(%)	대기오염물질 피해비용 (백만원)	비율 (%)
서울	359,726	14,575	0.2	23,989	0.2
부산	16,841,198	682,338	7.2	134,873	1.0
대구	2,287,082	92,663	1.0	146,735	1.1
인천	33,041,372	1,338,704	14.1	1,132,780.	8.5
광주	179,882	7,288	0.1	17,316	0.1
울산	4,482,783	181,624	1.9	867,370	6.5
경기	12,949,896	524,678	5.5	713,453	5.3
강원	4,505,056	182,527	1.9	532,374	4.0
충남	55,212,716	2,236,998	23.5	5,242,827	39.2
전북	3,428,483	138,908	1.5	246,941	1.8
전남	32,815,934	1,329,570	14.0	779,526	5.8
경북	32,906,521	1,333,241	14.0	242,370	1.8
경남	34,058,052	1,379,896	14.5	3,067,460	22.9
제주	1,386,306	56,168	0.6	238,799	1.8
합계	234,886,905	9,499,178	100.0	13,386,814	100.0

*자료 :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상생방안 연구(2016, 경기연구원).

이처럼 발전·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수준은 1,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송·변전시설주변지역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 이러한 피해를 내재화하고 있으나, 그 수준은 매우 미흡함에 따라 대부분의 피해는 고스란히 충남지역의 몫이나 다름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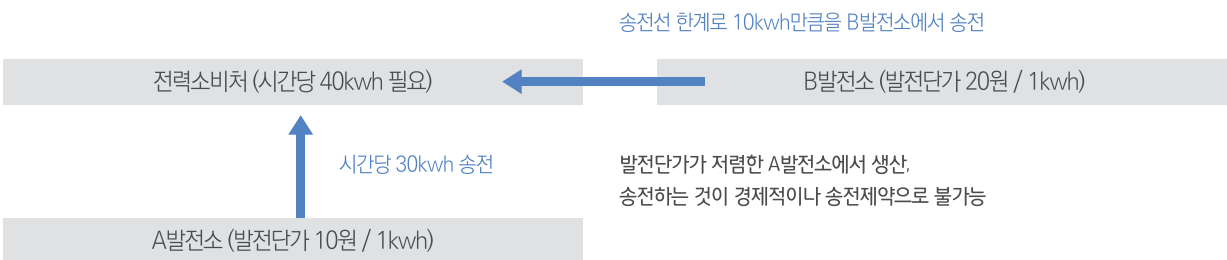
발전·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규모 vs 보상 및 지원수준

온실가스(CO₂) 배출 피해비용 (충남지역) 2조 2370억 원 (2012년 기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피해비용 (충남지역) 5조 2428억 원 (2012년 기준) (경기연구원, 2016년 연구결과, EU 추정방식 적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주지법)	매년 275억 원 지원 (2011~2013) 당진 (120억 원), 태안 (72억 원), 보령 (76억 원), 서천 (7억 원) * 신보령 완공시 24억 원 추가
		건설비의 1.5% (신보령 건설비 2조 8천억 원 고려시 특별지원금은 420억 원)
송전시설에 따른 피해 (당진시) 송전시설에 따른 지가하락 등 경제적 피해, 건강피해 등 1,137억 원 (2014년 기준) (충남연구원, 2015년 연구결과, GIS 분석)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주법)	13개 시·군 193억 원 (2014.7~2015.12) * 송주법 시행 이후~2015년 * 태안·발주법 지역으로 제외 * 서천:345kV 없음
	지역자원 시설세	2014년 165억 원, 2015년 360억 원
온배수 배출 갯벌 및 해역 어패류 패사, 어종 변경 등 피해 * 충남 소재 발전사에서 비정기적으로 어업피해 보상		

거리에 따른 차등 없이 전국 단일의 송전요금 부과는 불공정하다

전력은 송전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송전선로의 저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손실로 전압이 높을수록 거리가 멀수록 손실률은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송전선로의 송전량 한계로 발전단가가 저렴한 발전소에서 소비처로 무한정 송전하는 것이 어려워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이른바 제약발전을 실시하고 있다.

제약 발전 개념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전력수요량이 많아 북상조류의 특성을 띄고 있다. 실제로 충남지역은 국내 총 발전량의 23.5%를 생산하고 있으며, 발전량의 57.5%를 타지역 특히, 수도권으로 송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송전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3.81 원/Kwh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송전에 따른 비용과 제약발전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리와 제약발전에 따른 비용을 고려치 않는 현행 전국 단일의 송전요금 부과는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송전요금을 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불공정함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비용 저감노력과 차등요금 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에서는 화력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화력발전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배출권(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및 대기오염물질(Sox, Nox) 거래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RGGI는 미 북동부 9개주가 참여하는 지역단위 탄소시장으로 동 시장을 운영함으로써 2008~201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3.3%나 저감하였으며, 얻은 수익금 일부를 발전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시설 확충, 전기요금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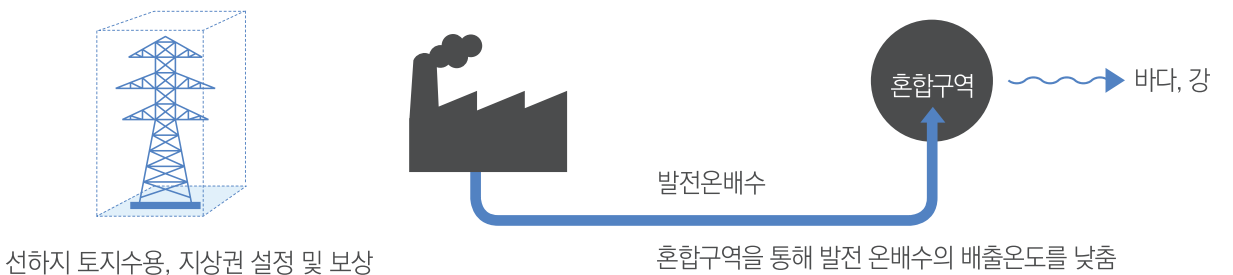
일본의 경우에는 화력발전 연료연소에 따른 CO₂ 발생량을 근거로 발전비용에 CO₂ 대책비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그 규모는 전체발전비용의 1/4수준에 달한다. 실제로 2010년 기준으로 Kwh당 9.5엔의 발전비용(자본비 + 운전유지비 + 연료비 + 사회적 비용) 중 2.5엔을 CO₂대책비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EU의 경우, 화력발전에 따른 환경 및 사회피해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 내재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Extern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고 있는 바, 석탄의 외부비용(EUR/Kwh)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에서는 각각 3~6, 4~7, 3.34~10EUR를 책정하고 있다.

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선하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고 선하지를 수용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송전선로에 대한 지역권을 설정하여 보상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전자계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지역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온배수 배출의 경우에도 혼합구역을 설정하거나 배출온도를 규제하는 등 생태계 파괴에 따른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해외 송전 및 온배수 피해 대응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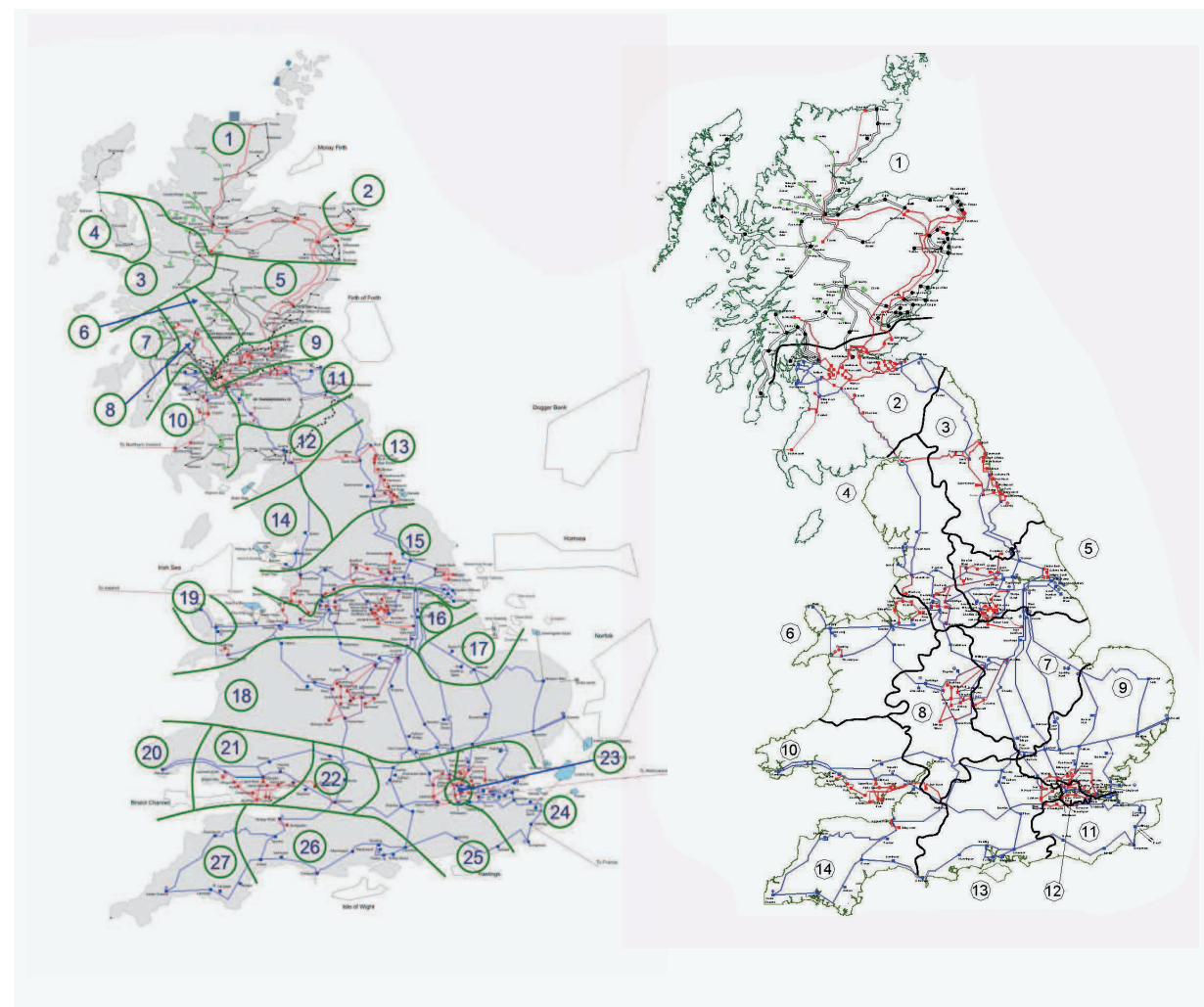


한편, 송전요금 차등 부과 사례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영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전체 전력수요의 50%가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발전원 대부분은 북부에 소재하고 있어 남하조류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측 송전

요금은 27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북부지역은 높게, 남부지역은 낮게 부과하고 있다. 반면, 수요측 송전요금은 14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북부지역은 낮게, 남부지역은 높게 부과하는 차등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발전 부문과 수요 부문의 송전요금 차등 부과 사례(영국)



* 자료 : The Statement of Use of System Charges, Apr. 2016, nationalgr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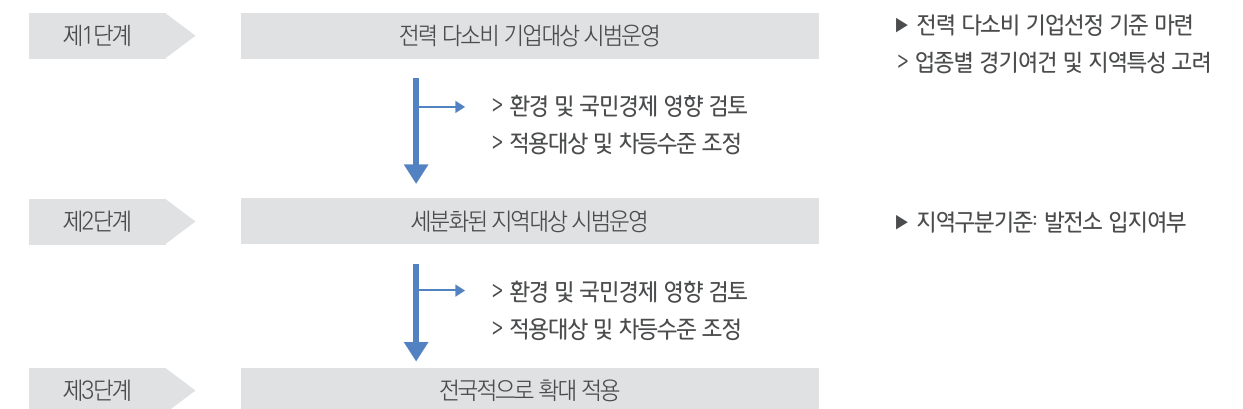
공정한 전기요금제로의 개편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술한 내용을 토대로 제시하고자 하는 공정한 전기요금제로의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다. 해외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화력 발전·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현행 전기요금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상존한다. 따라서 **사회·경제·환경적 피해문제는 해외사례에 준하여 법·제도 및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여 내재화 수준을 현실화하고 전기요금 자체의 불공정 문제는 현행 전기요금체계에 송전요금 차등요인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후자의 문제만으로 국한하자면, 송전요금에 대해서는 거리용량병산제(Megawatt-Mile Rule)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관련하여 현행 전기사업법 제15조에는 송전요금 차등에 대한 실행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미 시행 중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발전측 4개 권역(수도권 북부, 수도권 남부, 비수도권, 제주)과 수요측 3개

권역(수도권, 비수도권, 제주)으로 구분하여 권역간 차등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나, 현재는 발전측에는 부과유예하고 있으며 수요측에만 동일요금(3.81원/Kwh)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송전요금 차등제의 전면적 실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용도별 요금 중 산업용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정부에 건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제1단계에서는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제2단계에서는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범운영하되, 각 단계별로 환경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제 영향 검토 및 적용대상과 차등수준을 조정하여** 중국에는 전국적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공정한 전기요금제로의 단계적 개편 방안



* 자료 :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의 사회적 공론화 연구(2017), 충남연구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생태 복원

조봉운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국가해양정원의 필요성



가로림만 해역 91.237km²은 2016년 7월 29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해역은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멸종위기종 점박이 물범, 붉은발말뚝게, 흰발농게, 거머리말 등과 전어·조피볼락·쥐노래미 등을 포함하여 어류 48종이 서식하여 대형저서동물종(149종)이 우리나라 전체 상위 25%, 염생식물 분포면적은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의 9배에 이르는 곳이다.

가로림만은 조력발전소 개발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갈등과 상처를 입었으나 자연환경의 보호라는 공감대 형성으로 새로운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가로림만권역 자연환경은 잘 보전되어 있으나 일부 이용을 위한 개선 외에는 방치되거나 이용을 규제하며 보존하는 수준에 그쳐 해양

및 연안 환경의 회복과 적극적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로 연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최근 국가해양정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업 개념의 일부 모호함과 적용방법에 대한 이견 등을 종합해 추진 목표에 부합하는 조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해양정원의 개념 정립

국가해양정원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 등)과 수목원(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 정원(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의 관리) 그리고 국민의 숲(국민들에게 개방한 국유림으로 단체의 숲, 체험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사회환원의 숲 등)이 있다.

국가해양정원의 개념은 단어 그대로 국가에서 해양을 중심으로, 해양을 주제로, 해양과 인접하여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해양과 정원이 함께 존립 가능한지 여부와 육역과 해역의 관리주체가 달라 추진과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과 정원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첫째, 산 능선을 중심으로 구분되는 가로림만 유역의 기본 개념을 산 정상에서 시작하여 계곡과 하천을 따라 바다로 모이는 물 흐름의 회복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전시·배치, 재배·가꾸기 등 관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해양정원의 가로림만 적용 방안 모색

가로림만 해안에는 79개소의 방조제가 설치되어 농경지 및 양식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간을 위한 자연 훼손이 있지만 상당기간이 흐른 현재에는 가로림만의 변화를 주민이 직접 느끼고 있다.

최근 순천만국가정원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여러 지자체에서 제2의 순천만국가정원을 꿈꾸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순천만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다. 순천만의 복원이 지역의 경쟁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로림만을 가로림만권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순천만에서와 같이 훼손되고 있는 자연을 다시 복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가로림만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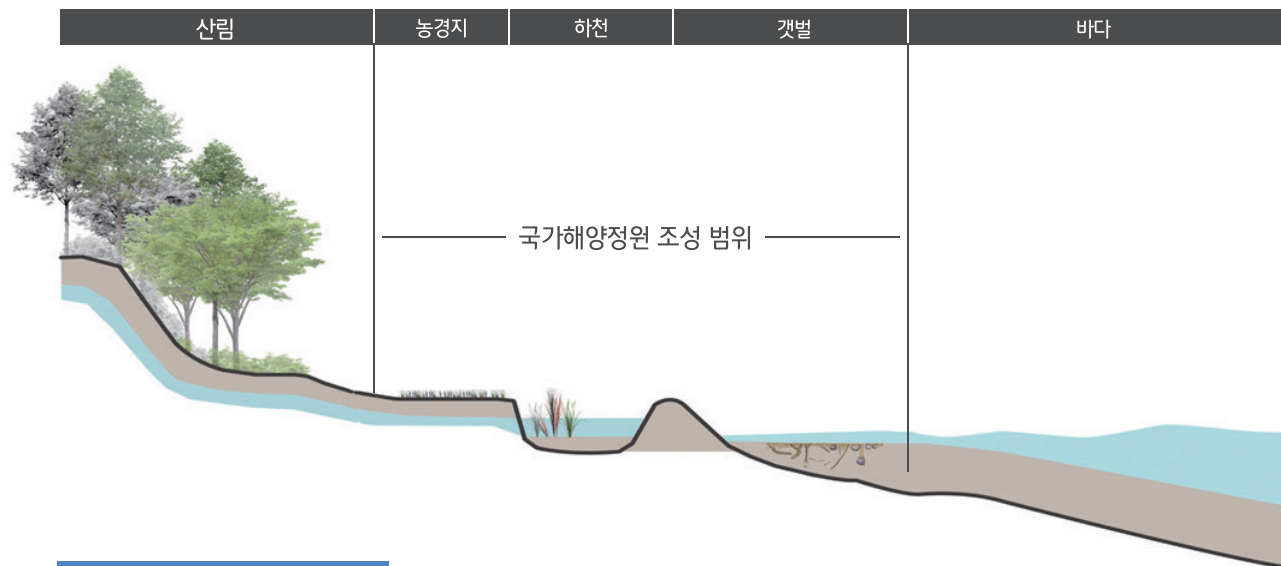
그러면, 어떻게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인가? 순천만의 국가정원과 같이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파괴된 해양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인간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가해양정원의 공간적 범위

국가해양정원은 어디에 조성할 것인가?

국가해양정원은 가로림만에 지정된 해양생물보호구역을 지키고 보호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되돌리고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국가해양정원을 목적이 아닌 해양생물보호구역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순천만국가정원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국가해양정원과 해양생물 보호의 가치가 서로 높아지는 선순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훼손된 과거의 해역, 즉 제방으로 육지화된 농경지와 양식장 등을 가장 우선적인 범위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방으로 인해 갯벌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회복과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기수역에 대한 습지 조성도 필요하다. 따라서 제방으로 만들어진 간척농지 및 양식장 등 공유수면 매립지, 갯벌, 습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해양정원의 내용적 범위

국가해양정원은 지형 및 특성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조성할 수 있다.

첫째, 기수역을 중심으로 습지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기수역은 다양한 생명체의 서식지가 된다. 특히 수생식물과 염분이 있는 해수에서도 자라는 염생식물이 공존하면서 다양한 식생을 형성하여 독특한 경관을 형성한다. 또한, 하천수의 수질정화기능을 높이며, 다양한 형태의 인공적 식물섬을 조성하는 형태도 적용이 가능하다.



신휴저수지 인공습지 ▶

하천수변정화습지 조성 ▶

둘째, 제방으로 농경지나 양식장에 해양생태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적용방법으로는 제방의 높이를 일정수준 이하로 낮추어 만조시 해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간조시 제방으로 인해 해수가 담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규모가 클 경우 다랑이논과 같은 형태로 중간중간에 높이가 다른 보와 같은 형태로 계단식 해양생태 정원을 조성할 수 있다. 해수담수로 인해 염생식물이 성장하는 수생생태 정원의 형태를 보일 수도 있고, 담수안에 어류 등 해양생물이 서식하게 되어 해양생태 관찰을 위한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만조 시에는 모두 바다에 잠기게 되어 사라졌다 나타나는 독특한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다.



▲ 다단계형 해양생태 정원 조성

셋째, 갯벌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아직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갯벌 이용에 관한 법률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는 갯벌의 이용 측면에서 공원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넷째, 위의 여러 정원들을 연결하는 정원탐방로를 조성하는 것이다. 정원탐방로는 자연스럽게 해안산책로가 되어 해안을 따라 가며 가로림만의 경치를 즐길 수 있다. 특히, 가로림만 해안으로 많은 방조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철거 또는 개선하여 정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탐방로로 연결하면 가로림만을 해안에서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국가해양정원 조성방안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방으로 막아 사용하고 있는 농경지 및 양식장 주민의 협조와 접근로 주변의 마을 주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국가해양정원의 생태적, 관광적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역주민과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지역의 자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와 함께, 국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합의 도출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경제수단으로서 농경지를 자연환경으로 되돌리려면 해당 주민의 협조와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생계수단과 연계하여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생태환경 복원측면에서 활용성을 고려한 인공적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해양 특성에 부합되는 기술력과 운영 및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내포혁신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오용준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국가균형발전정책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



참여정부는 2004년 『국토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하였다. 혁신도시 사업은 2030년까지 여의도의 15배 규모(44,889천㎡)에 총 사업비 10조 4,681억 원을 들여 계획인구 27만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당시 노무현정부는 ‘중앙과 지방간 기본협약(2005.05.27)’을 체결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전대상에서 충청남도과 대전광역시를 제외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이 유였다. 수도권 공공기관은 12개 광역시·도에 총 154개 기관(이전인원 49,849명)이 이전하고 있다. 2016년 현재 대상기관 중 89.6%(138개)가 이전 완료했는데, 이전비용만 약 14조 524억 원(청사건축비, 기타 이전비용 포함)에 달한다.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¹⁾는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인구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고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기업 이전도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 2를 기획하며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확대하는 등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국회예산정책처, 2016,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 평가

표 1) 지역별 공공기관 이전 현황

지역	계	소속기관*	지방이전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전체	154(29)	44	16	48(5)	46(24)
혁신도시 계	115(13)	32	13	44(3)	26(10)
부산	13(4)	2	2	5(1)	4(3)
대구	11(1)	2	2	6(1)	1
광주·전남	16	3	1	9	3
울산	9	2	2	4	1
강원	12	1	3	6	2
충북	11	3	-	4	4
전북	12(1)	7	-	3	2(1)
경북	12(2)	6	1	1	4(2)
경남	11(3)	1	2	5(1)	3(2)
제주	8(2)	5	-	1	2(2)
기타 계	39(16)	12	3	4(1)	20(15)
세종	20(15)	-	-	1	19(15)
개별 이전	오송	5	3	1	1
	아산	4	4	-	-
	기타	10(1)	5	2(1)	-

*주 : ()는 임차기관 *자료 : 국토교통부, 2016.07,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정책 도청 이전을 통한 내포신도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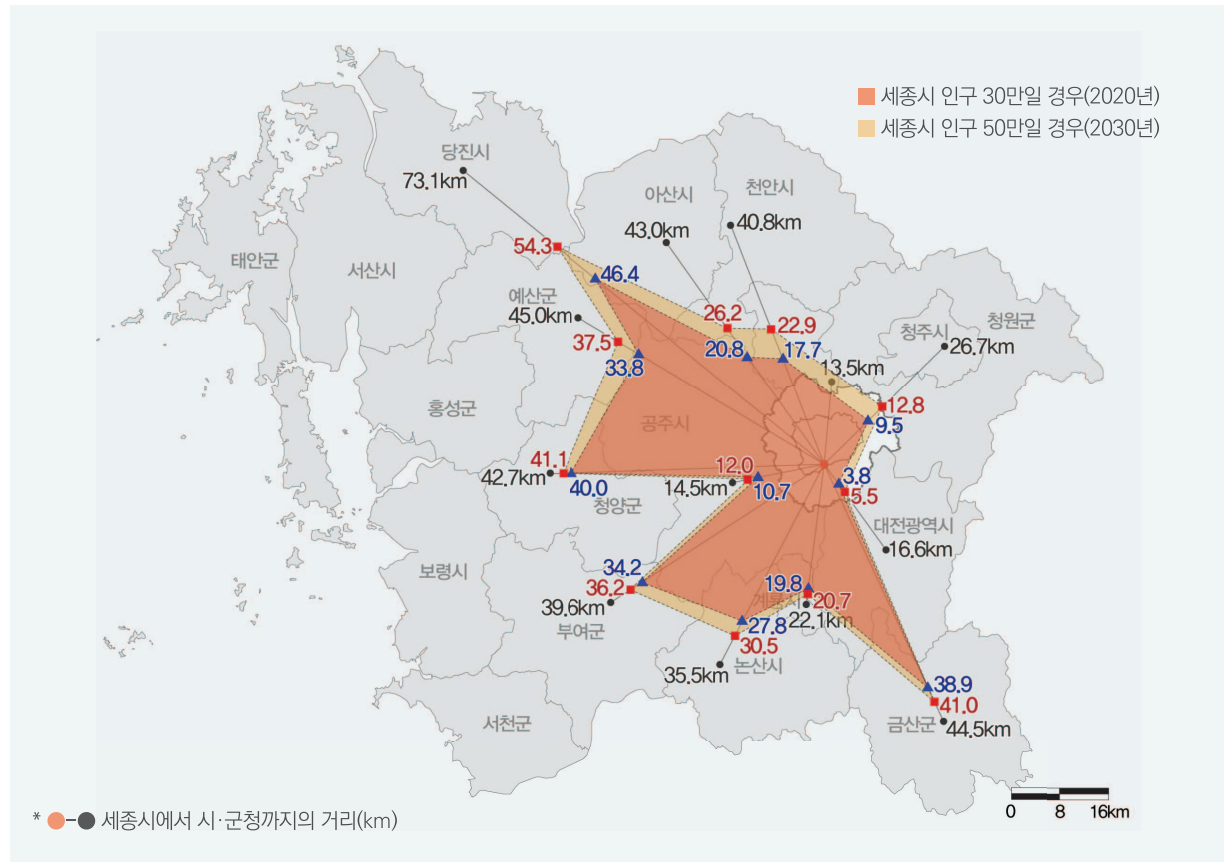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국가중추기 관(10부2처2청)을 이전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 중 (2004~2030년)이다. 공간정의(spatial justice) 관점에서 세 종시를 둘러싼 개발의 기회나 공간적인 흐름들이 대부분 세 종시 동편으로 치우쳐 있고, 세종시 서측에 위치한 지역은 행 정중심복합도시와 시너지효과를 일으킬만한 것이 풍부하지 않다. 공주시가 당초 예상보다 심각한 역류효과(backwash effect)가 발생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충청남도는 공간발 전 위상의 근본적 한계를 지닌 세종시 동서축 발전을 위해 도 청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정책²⁾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주의(regionalism) 관점에서 세종시 법적지위가 특별자 치시로 결정되면서, 충청남도에는 세종시의 긍정적인 효과보 다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2005년 ‘중앙과 지방간 기본협약’을 체결할 당시, 중앙 정부는 세종시 법적지위(특별자치시, 도 직할자치시)가 불확 실한 상태에서 충남을 혁신도시 지정대상에서 배제하였다. 그 러나 충북은 충남과 마찬가지로 세종시 편입지역임에도 불구 하고 진천군의 강력한 정치적 요구로 혁신도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2) 충청남도는 2006년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도청 및 유관기관을 홍성·예산지역으로 이전시키며 세종시 동서축을 강화하는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림1) 세종시 영향권 분석



둘째, 충청남도는 세종시 출범으로 경제적, 재정적 손실도 감수하고 있다. 세종시 편입에 따라 지방세수는 378억원(2.1%) 감소하고 도 소유재산은 1,103억원(5.5%) 줄었으며, 지역 내 총생산은 1조 7,994억원(3.7%)이 감소되었다. 이에 비해 공주시는 세종시 편입에 따라 교부세 및 시세 106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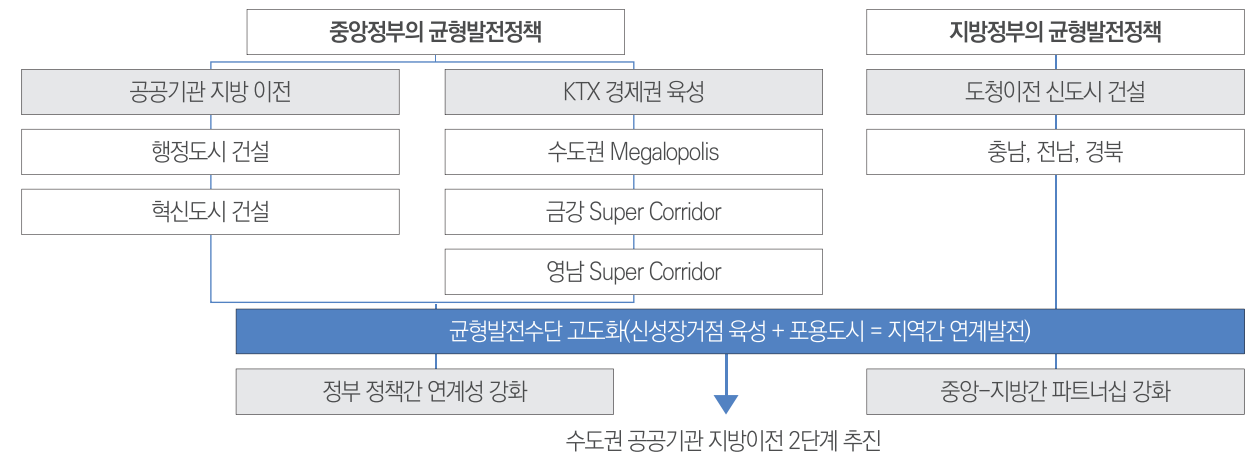
원이 줄고 사유재산은 133억원이 감소했으며, 지역 총생산은 2,252억원 줄었다(충청남도, 2012)³⁾

3) 충청남도, 2012, 충청남도와 세종시 간 상생발전방안 연구

다층적 균형발전정책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내포혁신도시 조성

중앙정부는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충청남도 역시 도청 이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기초를 반영하며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시대 새로운 균형발전정책은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결합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다층적 균형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정하고 세종시와 혁신도시 성과를 극대화하며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그림 2).

그림2)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 모델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도청이전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내포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성장축진지역(저발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균형발전대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내포신도시는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저비용·고효율을 꾀할 수 있는 최적지다.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 이전 가능성 검토

2016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321개 공공기관⁴⁾이 있다. 문제는 아직도 수도권에 전체의 44.2%인 142개소(서울 109개소, 인천7개소, 경기 26개소)가 위치하고 있다는 거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42개소는 소관부처가 이전하지 않거나 관계법에 따라 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 실질적으로 이전이 어려운 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수립이 고시된 2005년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2005년 이전계획을 수립한 이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

중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37개소가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 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요건(이전 제외기관)⁵⁾에 부합하지 않는 19개 기관은 지방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지방이전 제외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충남 이전 가능성도 검토 가능하다. 수도권 공공기관 142개 중에서 2005년 이후에 신설된 공공기관 37개를 제외한 105개소가 그 대상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능성⁶⁾을 분석한 결과, 총 60개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하며, 이 외 (중앙)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업무를 지원하는 ‘소속기관’(예: 대한민국학술원 등) 및 ‘국직기관’(예: 국방대학교 등)은 제외하기로 한다.

표2) 지방 추가 이전 가능 대상 공공기관 규모⁷⁾

구분	수도권 소재		비수도권 소재
	이전 불가능	이전 가능	
2005년 이후 지정	14개소(부처 미이전)	19개소	179개소
	4개소(시행령 해당)		
2005년 이전 지정	23개소(부처 미이전)	60개소	
	17개소(시행령 해당)		
	5개소(국가균형발전위원회·건설교통부 자료)		
계	63개소	79개소	179개소
총계	321개소		

내포혁신도시 지정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 수준(‘14년)인데, 내포신도시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기간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자동차 5.1%, 철강 4.2%, 석유화학 5.2%, 디스플레이 42.3%)은 이를 훨씬 상회한다. 대한민국 주력산업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서해안 기간산업과 전략산업(수소자동차부품, 태양광)간 융·복합이 필요하다. 내포신도시가 미래 국가기간산업의 헤드쿼터(head quarter)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

내포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혁신의 소스를 만드는 것은 충청남도의 생존전략이 될 것이다. 내포신도시는 수요대응형 신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신

도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67개 도단위 기관 및 단체가 이전했고, 올해까지 17개 기관(부지 매입상태)이 추가 입지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실용화기반 구축, 서해안 복선전철 개통 등 도약의 발판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전남 남악신도시와 연대하여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공론화해야 한다. 기존 혁신도시와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새로운 균형발전을 위한 도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되었다.

5)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이전 제외기관' 선정기준
① 중앙행정기관(세종 특별자치시 이전)
②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③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를 매립지에 있는 기관
④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⑤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⑥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⑦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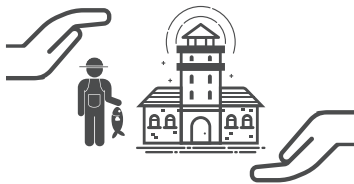
6) 수도권 공공기관 중 지방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기관 45개소는
① 소관부처가 이전하지 않아 수도권 존치가 불가피한 23개 기관(참고자료 II. 2005년 공공기관 잔류 검토결과 참조),
②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7호의 이전 제외기관 선정기준에 해당되는17개 기관,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의 잔류기관 목록에 포함된 5개 기관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7) ① 존치가 불가피한 23개 기관(참고자료 II. 2005년 공공기관 잔류 검토결과 참조)
②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제1~7호의 이전 제외기관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17개 기관,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의 잔류기관 목록에 포함된 5개 기관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차별화된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

정지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어촌 모습 보존 필요



바다와 어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안이 중요한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자원을 포함해 생활환경 전반에 걸친 어촌 정책 추진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어촌이란 좁은 의미로는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어민들의 정주공간을 뜻하고, 넓은 의미로는 어촌을 중심으로 어항 및 어장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을 뜻한다. 우리나라 어촌의 다양한 자원(2001년 기준)을 살펴보면, 356개소의 해수욕장, 20개소 철새도래지, 갯벌, 해양경관 등의 자연자원과 민속시설 전시, 지역축제, 바다음식, 어구어법 등이 있다.

최근 어촌들의 급속한 폐촌화와 어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의 문제들이 야기되면서 내륙지역과 차별된 우리 고유의 전통적 어촌 모습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해안은 잠재적인 자원(갯벌, 어촌 전통문화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한국어촌민속마을을 재현하여 전국에 개방한다면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지은, “한국어촌민속마을의 조성을 위한 세미나(CNI 세미나 2017-060)”,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2017)”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표 1) 어촌 자원의 개황(2001년 기준)

분류	자원명	주요 자원
자연자원	해수욕장	서해 110, 남해 97, 동해 147, 총 356개소
	철새 도래지	국제적 중요철새 3종 이상 연안 도래지 20개소
	갯벌	2,815km ² (세계 5대 갯벌의 하나)
	해양스포츠 장소	요트장 해안 7개소 등 종목별 다수 보유
	해양경관지	해상(안) 국립공원 2,648.54km ² , 일출/일몰지, 도서(3,200여개), 기암괴석
	바다낚시터	전국 연안
	기타	바다 갈라짐 등
문화자원	민속시설 전시 등	어촌민속관, 해양유물전시관 등
	지역축제	각 연안지역 72개
	바다음식	각 연안지역별 소재 다양
	어구어법	각 연안지역별 소재 다양
	어촌	4,000여 개의 자연부락 어촌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8,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 활성화 방안, p.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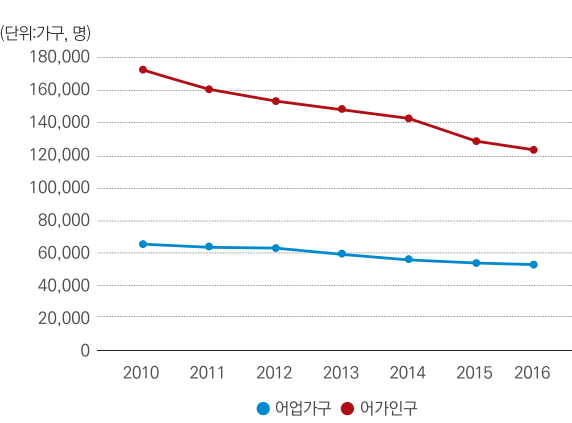
우리나라 어촌의 여건 및 현황

어업가구 및 어가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우리나라 어촌 공동체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2010년 대비 2015년의 어업가구는 26.6%, 어가인구는 19.1%로 감소하였고, 어업가구와 어가인구의 감소는 어촌지역 과소화, 어촌 전통문화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어가인구의 고령인구 비율은 32.5%로 전국 13.2%보다 약 2.5배 높고, 연안에 위치한 시·도의 고령화가 내륙지역 시·군보다 높다. 하지만 2008년을 기점으로 소득면에서 어가가 농가를 추월하여 2015년 평균소득 6,680천원의 격차를 보이면서, 어촌이 고부가가치 산업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은 높지 않고,

교통·의료·문화 등 정주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도서 어촌의 버스 미운행률은 59.6%에 달하고 문화여가시설 접근 소요시간은 47분으로 도시의 평균 21분보다 열악하며, 병·의원, 보건 진료소 등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어촌이 342개소로 전국 도서의 70%에 육박한다.²⁾ 고부가가치 산업공간으로서 주목받는 어촌의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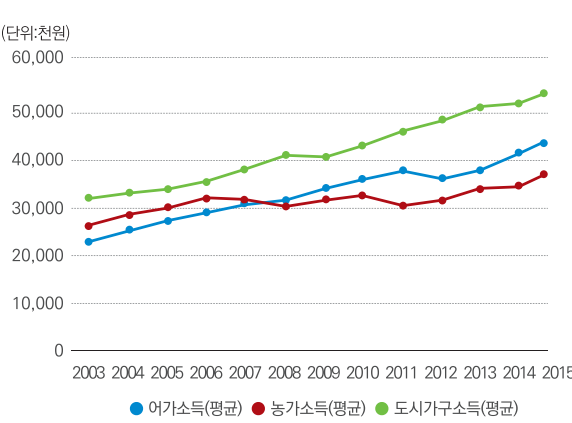
2) 제 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참고

그림 1) 우리나라의 어업 가구 및 어업 인구 수



주 : 도시가구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도시, 2인 이상, 명)에 12를 곱한 수치임
자료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그림 2) 농가 및 어가 소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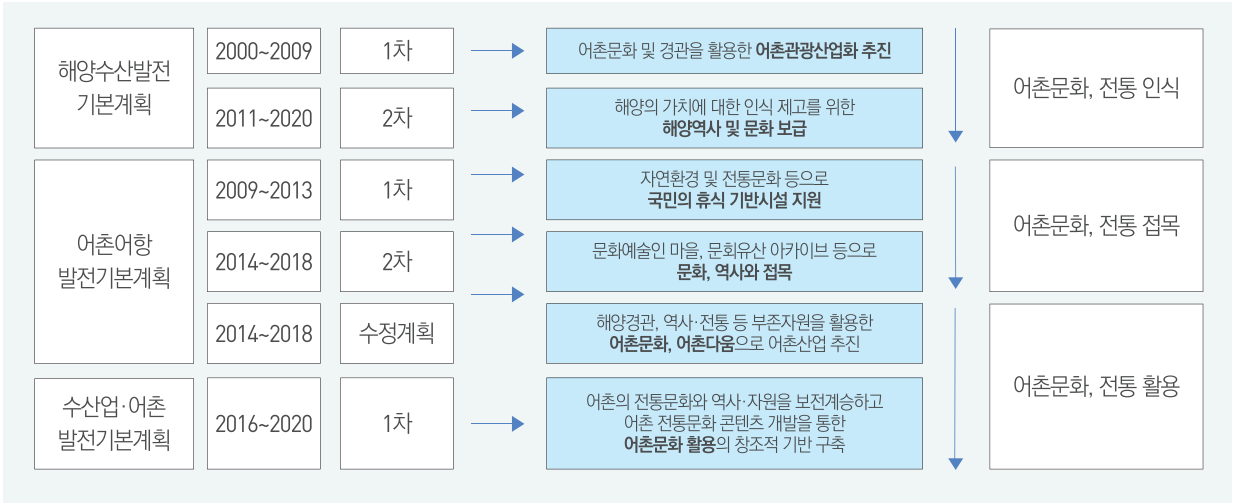


어촌 관련 계획 및 정책
어촌 민속문화 보존을 위한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의 필요

기존 어촌 관련 계획 및 정책은 ‘어촌문화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어촌관광산업화의 추진(제1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000~2009년)’, ‘자연환경 및 전통문화 등으로 국민의 휴식 기반시설 지원(제1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2009년~2013년)’ 등 어촌 공간의 개발을 통한 관광의 활성화, 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복합공간의 개발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후 ‘해양의 가치 제고를 위한 해양역사 및 문화 보급, 콘텐츠 발굴(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2011~2020년)’, ‘해양경관, 역사·전통 등의 자원을 활용한 어촌문화, 어촌다움을 통한 어촌·어항의 경쟁력 강화(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 2014~2018년)’, ‘어촌의 전통문화와 역사자원을 보전·계승하고 어촌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어촌문화 활용의 창조적 기반 구축(수산업·어촌 발전기본계획: 2016~2020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어촌 민속문화 보존’이 정책적으로 더욱 강조되는 이유이다. 한국어촌민속마을을 조성하여 어촌 민속문화자원을 발굴, 보전하고 공간·활동·생태·문화·역사 등의 가치를 높임으로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 중심의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3) 어촌어항 관련 계획에서의 어촌 문화·전통 변화



한국어촌민속마을과 기존 어촌개발사업의 차별성



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어촌관광사업으로 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 어촌 종합개발사업,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어촌관광개발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대부분 사업이 선정된 권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광 농원, 민박촌, 어촌민속전시관 등 단일 아이템 개발 및 시설조성 차원의 초기단계에서 어업인들이 경영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기존 어촌개발사업(유사시설)은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통해 지역을 특화하기 보다는 어촌의 기반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에 치우쳐 있으며,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 및 전문가 참여가 부재하고 구체적 체계가 마련되지 못해 지역 여

건을 고려한 계획으로 이어지기 힘든 구조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수산물 생산 위주의 정책 수행으로 문화·복지를 포함한 생활환경 전반의 어촌산업 정책 추진이 가졌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 과정은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전문가로 성장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생계를 잃었던 지역 거주민이 주인이 되어, 그들 스스로 지역의 유산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 전문가로 성장하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표 2) 어촌지역 관광개발사업의 개요

구분		사업 내용	사업 규모	사업 연도
초기 어촌 관광 사업	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	·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사업 시행 · 총 4개소(당진 신평면 매산리, 신악 흑산면 진리, 해남 송지면 갈두리, 보선 화천면 울포리) 개발	지역당 30억 원	1998 ~ 2001년
	어촌민속 전시관 건립사업	· 8개소에 어촌민속전시관을 건립 (완도군, 거제시, 삼척시, 안산시, 영덕군, 제주시, 울산시, 부산시)	지역당 60억 원	2000 ~ 2006년
최근 어촌 관광 사업	어촌체험(관광) 마을조성사업	· 어촌계 단위 사업 · 어촌체험 기반시설, 편의시설, 소득시설 지원 불가	어촌계당 5억 원 이상 (자담 5%)	2001 ~ 2017년
	어촌관광 개발사업	· 고품격 어촌관광단지 개발 · 2011년 18개 시범사업 완료 이후 신규 사업 추진을 계획 하고 있음	지역당 50~60억 원	2005 ~ 2011년
종합 개발 사업	어촌종합 개발사업	· 1단계(1994~2008년)에서 160개 권역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2단계(2007~2013년)에서는 65개 권역에서 사업이 진행됨	지역당 50억 원 이내	1993 ~ 2017년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09), 어촌의 잠재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명품 관광어촌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p.9.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의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한국어촌민속마을은 급속한 어민의 고령화 및 소규모 어촌의 폐촌 가속화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어촌 모습 보전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표적인 어촌의 역사, 생태관광, 민속, 문화 자원의 발굴을 통해 한국 최초로 어촌민속이 보전된 마을의 형성을 의미한다. 충남은 지리적 특성상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대중국 교류 확대로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충남 해안에는 잠재적인 자연(수산물, 생태자원, 자연경관, 지형 등) 및 문화 자원(전통풍습, 전통가옥, 전통 어

구·어법, 전통 음식문화, 전설·설화, 축제 등)이 풍성해 이를 활용한 전통어촌민속마을이 조성될 경우 어촌민속문화라는 소프트웨어와 한국의 어촌시장·어항·포구의 재현, 민속박물관 등의 하드웨어가 접목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도하고, 주 5일 여가 생활을 맞이하여 가족, 실버 세대, 학교 단체 등의 방문객이 함께하는 한국어촌민속마을은 지역의 새로운 도시발전 효과와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윤상현·김진환·이승우 외(2012), 『어촌·어항·어장을 연계한 소득창출 사업의 유형별 모델 개발』, 농림수산물부·한국농어촌공사.
 이승우·홍장원·이윤정(2008),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 활성화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승우·홍장원·이윤정(2009), 『어촌의 잠재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명품 관광어촌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충남공공체육단 1

충남 공공체육시설의 적정 운영 방안

최웅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공공체육시설의 증가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육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주변에서 등산, 조깅,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 각종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여가시간에 자발적으로 하는 체육 또는 스포츠 활동을 생활체육이라고 한다.¹⁾

생활체육의 활성화에는 1990년 전후, 중앙정부의 생활체육 육성정책 추진으로 점차 확대된 인프라가 큰 영향을 끼쳤다. 우리나라의 공공체육시설은 1990년 말 986개소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말 22,662개소로 증가하였고²⁾ 충남도의 공공체육시설은 간이운동장 731개소, 체육관 46개소, 게이트볼장 201개소 등 2015년 말 기준으로 1,099개소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생활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³⁾ 특히, 지역단위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국민체육센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다목적 생활체육관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7년 현재 도내 15개 시군에는 아래 표와 같은 공공생활체육시설이 건립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 「2015 체육백서」-146, 2016.
2) 문화체육관광부, 「2015 체육백서」-151, 2016.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활체육시설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의미한다.

표 1) 충청남도 주요 생활체육시설 현황

시설명	관리주체	연면적(㎡)	준공연도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천안국민체육센터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7,338	2001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목욕시설
천안한들문화센터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8,483	2015	수영장, 이벤트홀, 목욕시설, 체력단련장, (야외 시설로 족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공주국민체육센터	공주대학교	1,927	2003	수영장, 체력측정실
보령국민체육센터	보령시 교육체육과	2,436	2006	수영장, 체력단련장, 스쿼시 코트, 다목적 강의실
아산국민체육센터	아산시 체육육성과	1,994	2015	다목적 체육관(배드민턴, 농구, 배구), 체력단련장
서산시민체육관	서산시 체육진흥과	2,889	2001	다목적 체육관(배드민턴), 탁구장
연무문화체육센터	논산시 연무읍	3,417	2007	체육관, 소강당, 문화시설

논산국민체육센터	논산시 공공시설사업소	5,482	2009	수영장, 에어로빅장, 체력단련장, 실내체육관
당진국민체육센터	당진시 체육육성과	4,987	2013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장, 볼링장, 탁구장,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복싱장
당진교육문화스포츠센터	당진시 체육육성과, 민간(BTL 방식)	11,356	2009	수영장, 체력단련장, 어린이 도서관, 어문학실, 멀티미디어실, 평생학습실, 컴퓨터교육실
당진트레이닝센터	당진시 체육육성과	1,406	2009	다목적 연습실, 체력단련장, 세미나실
신평문화스포츠센터	당진시 신평면	2,704	2013	다목적 체육관, 체력단련장, 도서관, 주민자치시설, 공동육아나눔터
금산스포츠센터	금산군 금산다락원(사업소)	4,603	2006	수영장, 체력단련장, 건강측정실, 다목적 강의실, 체육관
서천군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서천군 공공시설사업소	1,192	2012	게이트볼 구장, 레크리에이션실, 다목적실
서천국민체육센터	서천군 공공시설사업소	5,367	2013	실내체육관, 다목적실
청양군문화체육센터	청양군 공공시설사업소	3,152	1996	다목적 경기장, 생활체육실, 체력단련장
청양군국민체육센터	청양군 공공시설사업소	2,830	2015	수영장, 복싱연습장, 다목적실
홍주문화체육센터	홍성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5,111	2006	다목적 경기장(배드민턴, 배구, 농구, 족구)
예산군 생활체육관	예산군 문화체육과	1,255	2010	다목적 체육관
삽교국민체육센터	예산군 삽교읍	2,088	2013	에어로빅장, 체력단련장, 다목적실, 체육관
봉산면농어촌복합체육시설	예산군 봉산면	760	2012	다목적 체육관
태안군 국민체육센터	태안군 문화예술센터(사업소)	2,221	2011	수영장, 다목적실

운영방안 모색

공공체육시설의 증가로 지역주민들은 다양한 체육활동을 손쉽게 즐기게 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첫 번째 문제는 운영비 부담이다.

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시설건립 비용 이외에 운영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유지보수비 등 상당한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수영장을 운영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훨씬 많은 인력과 관리가 필요해진다. 보일러 설비 및 수질여과기 운영인력, 수영강사, 수상안전요원, 락커룸 관리 인력, 환경미화 인력 등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많은 인력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수영장 소독비, 유지보수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사용료 책정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받는다. 최대한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부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서비스 이용에 저렴한 사용료가 책정되고 있다. 4)

세 번째 문제는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숙련성이다.

갈수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반면 공공조직 특성상 주민의 수요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네 번째 문제는 공무원 인력의 부담이다.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은 기간제 혹은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책임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업무는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각 시설마다 공무원이 최소 1명 이상이 배치되는데, 여유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지 못한다. 때로는 건립된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공공체육시설의
운영방식 대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크게 직접운영, 간접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운영 방식은 행정기관인 자치단체가 본청에 행정부서를 구성하거나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운영 방식의 장점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저렴한 비용의 체육서비스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설 운영 과정에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신규시설이나 노후시설 교체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이 용이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시설운영을 연계시킬 수도 있다. 단점은 합법성이 중요한 행위기준인 공공조직의 특성상, 시설운영을 통해 사업성과를 높이려는 동기부여가 제약된다는 점이다. 독점체제로 경쟁성이 없고, 직원들의 빈번한 인사 이동으로 기술과 전문성의 확보도 어렵다.

간접운영 방식은 위탁운영 방식을 의미하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위탁을 규정하고 있다. 간접운영 방식은 위탁대상에 따라 지방공기업 위탁, 체육단체 위탁, 재단법인 위탁, 민간기업 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체육단체 위탁운영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의 운영 업무를 체육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체육시설의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체육단체는 자기명의와 책임 하에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장점은 체육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조직이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인 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 체육인과 일반 생활 체육인 사이의 교류를 확대하여 체육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전문 체육인에게 훈련공간도 제공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시설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사업운영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단점은 계약을 체결한 체육단체가 전문 체육인 육성이나 회원의 체육활동에만 초점을 둘 경우이다. 일반 주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어 오히려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할 수 있다. 민간단체는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공사/공단 위탁운영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00%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기업에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공사/공단은 자기 책임하에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에게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공사/공단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해 대행 사업비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은 보통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는데, 2017년 1월 기준, 충청남도에는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다. 이 중 천안시 시설관리공단만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공사/공단 위탁운영 방식은 공공시설물 관리에 전문성과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어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공사/공단은 공공조직이라는 속성상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고, 안정적인 재정확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공사/공단은 독립적인 조직이므로 책임경영시스템을 통해 직접운영 방식보다 능동적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반면 독점적 구조로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유도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시설운영은 전적으로 계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계약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계약이 종료되어 위탁기관을 교체할 때 발생하는 시설운영의 혼란으로 인해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공사/공단위탁이 관행화될 수 있다. 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직접운영 방식에서 나타나는 관료적 비능률성이 재현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재단법인 위탁운영 방식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에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다.⁵⁾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체육

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재단법인으로는 춘천시 체육진흥재단과 수원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대표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단법인에 위탁할 경우 재단법인의 시설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자체수입으로 충당된다. 장점은 재단법인이 민간조직임에도 설립목적에 따라 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독립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므로 시설 운영이 자율적이다. 체육시설운영에 특화된 재단법인은 해당 사업에 전문화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므로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지원구조로 인해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보다는 조직의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려는 동기가 커질 수도 있고 영리보다는 목적사업에 국한된 활동 때문에 외부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민간기업 위탁운영 방식은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 기업에 맡겨 그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⁶⁾ 민간기업 위탁운영 방식은 민간기업과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민간업체는 자체수입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비용으로 시설운영비를 충당한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체육시설 관리업무에 전문화된 민간기업의 시설운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효율성 제고로 인해 운영비가 절감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전문업체 운영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절약함으로써 공무원의 증원요소가 감소된다.

반면, 민간기업은 수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설운영에서 충분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계약 업체를 구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 방식은 계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시설운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축소되어,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도 민간업체를 제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이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할 경우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고 수탁업체에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부도 상황 시 갑작스럽게 서비스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민간업체는 시설물 유지보수 동기가 약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가 부실해지고 노후화될 수 있다.

공공체육시설의 적정 운영방안 선정

이상의 다섯 가지 대안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어느 하나가 더 적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공공성과 효율성면에서 공사/공단 위탁방식이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민간위탁 방식이 확산되면서 민간위탁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공공성 훼손, 적정 수탁업체

5)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6)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 2003.

선정의 어려움, 서비스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민간위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총 467개소에 이르는 공공생활체육관의 운영방식 비중을 살펴보면, 직접운영 방식 40.7%, 공단/공사위탁 방식 34.0%, 민간위탁 방식 25.3%(민간단체 및 기업, 체육회, 재단법인 포함)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간접운영(공사/공단 및 민간 위탁운영) 방식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으로 한정하면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196개소의 공공생활체육관 중 73.0%가 직접운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17.3%가 공단/공사위탁 방식, 9.2%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등의 도시지역에서는 간접운영(위탁운영)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고, 농촌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에서는 직접운영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민간위탁 시장이 형성되는데 반해, 도 광역자치단체의 시·군에서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체육시설의 적절한 운영방안은 주어진 여건에서 가장 적합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각 지역에 어떠한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절한 평가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평가기준으로는 적용가능성, 공익성, 효율성, 전문성, 탄력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적용가능성은 현재 여건에서 적용할 수 없는 방안을 걸러내는 기준이다. 공사/공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당분간 설립하기도 어렵고 민간위탁 시장의 형성조차 어려운 여건이라면 위탁 방식이 아무리 효율적일지라도 채택하기는 불가능하다. 공익성은 운영주체가 시설운영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잘 맞추느냐에 관한 것이다.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개념으로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서는 어느 방식이 비용절감에 더 유리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전문성은 어느 방식이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 활용 및 축적에 유리한가에 관한 것이다. 탄력성은 지역 주민의 수요나 환경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기준을 통해 체육시설 운영방식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각 지역에 맞는 적절한 체육시설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면 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총 100페이지
2

세계유산,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을 위한 시론

박재용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강나현, 2009, 「지속가능발전교육 관점을 활용한 세계문화유산교육」,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옥, 2011, 「초등학교 총체적 질 경영 측정도구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현옥·김정민, 2014, 「ESD관점을 통한 초등학교 세계유산교육의 접근 가능성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4-1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1, 「실천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미래세대와 동행하기」

허권, 2012, 「세계유산의 국제이해교육으로서의 가치」 「국제이해교육연구」7-1

田淵五十生, 2011, 「ユネスコの提起する世界遺産教育の教育内容と教育方法の創造」 「科学研究補助金基盤研究 研究成果報告書」

UNESCO, 2005, 「Teaching and learning for a Sustainable Future」 (<http://www.unesco.org/education>)

세계유산 붐이 일고 있다. 공주시와 부여군은 물론 충남도 자체에서도 세계유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고, 최근에는 서울시와 함께 확장등재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가치를 이용한 지역 인지도 상승과 관광객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이다.

그러나 세계유산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즉 백제역사유적지구가 국가나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진정한 가치를 널리 인식시키는 데에는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시작은 유네스코에서 제안하고 있는 ‘세계유산교육(World Heritage Education)’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유산교육이라는 용어조차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세계유산은 그것이 속한 지역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 및 정체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탁월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해당 민족이나 국가가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지켜야 하는 유산이며,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세계유산에 대한 교육은 해당국의 이해는 물론이고 주변국의 역사와 문화, 한편으로는 과거 유산을 왜 보존해야 하며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등 사회적 당면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이다.

현재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효과적 인 학습주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학교교육에서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공주·부여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도 분명한 관점이나 체계 없이 유산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렇다보니 공주·부여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관계자들도 세계유산에 대한 충분한 철학과 실천적인 태도가 충분히 내면화되어 있지 못하다.

올해로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2년째 접어들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충남의 문화적 정체성일 뿐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문화자원이며 이제는 세계인들이 공유해야 하는 글로벌 유산이 되었다. 여기에 걸맞은 진정한 모습과 의미를 찾는 노력이 시급한데,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한 이유이다.

세계유산교육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최근 여러 나라에서 세계유산을 주로 관광 대상으로 취급함에 따라 유적의 파괴와 함께 주변 환경이나 생태계 변화 등의 심각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하회마을이 관광인프라 확충이라는 미명아래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고 있고, 제주도의 유산 주변 식생이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아직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이와 같은 피해가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유적 훼손과 주변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올바른 세계유산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유산교육은 단순히 유산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유산의 가치를 음미하고 소중히 보존하려는 태도, 미래를 위한 준비와 실천적인 지식배양 등의 통합적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영역을 중점화하여 접근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교육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세계유산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World Heritage), 세계유산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World Heritage), 세계유산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World Heritage) 등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 분류는 다분히 세계유산에 대한 교육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에 대한 교육으로도 응용·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3가지 교육유형은 분리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세계유산에 관한 교육

세계유산에 관한 교육은 세계유산협약이 체결된 이유, 세계유산의 종류와 위치, 세계유산의 역사·문화적 내용, 각 유산의 등재기준, 그리고 어떻게 남겨지게 되었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이 유산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지속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한 것이 된다. 따라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가치를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유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어떻게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른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진정성, 완전성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세계유산을 위한 교육

세계유산을 위한 교육은 세계유산의 보호·보존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승하려는 주인의식, 이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교육을 포함한다. 최근 세계유산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유네스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40%가 낙서 등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 무분별한 개발압력에 따른 주변 환경 훼손보다 더 높은 위험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적의 직접적인 훼손보다는 주변 지역의 개발에 따른 간접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기념물이나 귀중한 자연환경을 대하는 행동요령이나 태도를 학습해야 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기본적 내용이나 보존방법 등에 대한 교육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주민들에게조차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보호하고 전승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충분히 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막 세계유산이 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보호하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해당 광역단체 및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 단계에서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계유산과 이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은 지역 주민들에게 세계유산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주체가 자신이라는 주인의식도 배양시킬 수 있다.

세계유산을 통한 교육

세계유산을 통해 국제이해 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환경교육 등을 더불어 실천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기에 처한 유산의 당면 현안과 그 배경 등은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최근 시리아 내전으로 위기에 처한 팔미라 고대도시 유적은 고대 그리스-로마문화와 이후 이슬람문화를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지만, 현재는 전쟁과 파괴의 상징으로 얼룩지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공주나 부여의 도시환경 및 개발방향 등을 제시하는데 배경지식이 됨으로써 어떻게 지역과 백제유산이 상생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게 한다. 한 예로 최근 공주시에서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과 정책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중심으로 주변 역사자원까지 그 가치와 의미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소재가 되기도 한다. 부여 정림사지5층석탑은 목탑과 석탑의 기법을 모두 사용했다. 이 석탑은 신라의 사찰 건축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고대 일본 탑문화의 기원이 되었다. 이는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백제로 들어온 불교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었음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문화라는 것이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아 점차 고유한 문화로 발전되어간다는 점 등을 교육할 수 있다. 세계유산

은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문화와 정치,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효과적인 통로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유산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연계

세계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계유산교육은 분명한 목적의식, 그에 따른 교육내용과 방법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학습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교육을 통해 세계유산을 미래 세대에도 지속시키자는 것이다.

경제성장 위주의 사회발전은 자원고갈, 환경오염, 에너지 문제, 식량부족, 사회적 불평등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해 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와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가치와 태도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의 역할이 강조된다. 세계적으로 볼 때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전략이나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늘고 있으며, 관련 연구 및 논의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주제에 따라 간학문적 방법(interdisciplinary approach) 또는 다학문적 방법(multidisciplinary approach)이 있는데, 교육 영역의 범위가 포괄적인 세계유산 교육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역사와 문화는 물론이고 인권, 평화, 전쟁, 환경, 상생, 기후변화 등 다양한 주제가 녹아 있어 인류 및 지구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유산을 공통주제로 세계유산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접목시키면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보다 발전적으로 다룰 수 있다.

세계유산의 교육적 가치가 큼에도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하려는 충남도의 노력과 시도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 세계유산에 대한 교육을 단편적인 문화재교육과 유사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 세계유산에 대한 기초지식이나 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통한 세계유산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설정하는 것은 세계유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관련 유산 및 지역사회 환경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기존의 교육과 비교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지엽적인 목표에서
공동 목표로

국가는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의 발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나 자칫하면 자국의 발전과 국민만을 우선시 하게 되어 다른 국가와 민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지구촌의 지속적 인 상호발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세계유산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키워 지역간 혹은 국가간 상생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현재 지향에서
미래 지향으로

세계유산에 대한 교육내용이나 목표는 대부분 현 세대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다음 세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국제간의 공간적 공정성과 함께 세대간의 시간적 공정성도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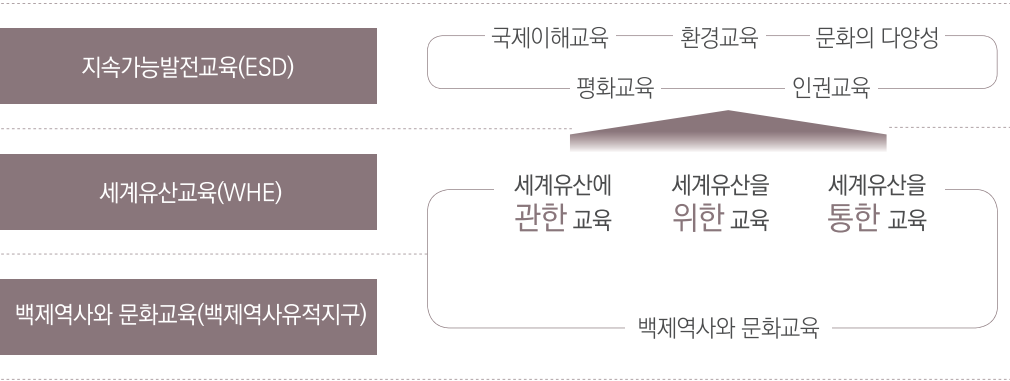
세계유산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는 세계유산을 지역 혹은 국가의 보물이 아니라 인류공동의 보물이라고 인식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차세대의 전 인류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책임 있는 인식을 위해 유산을 지켜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 시키고 내면화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역사문화교육에서
환경·과학 등
다양성 교육으로

기존의 환경에 대한 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결정적 차이는 인간도 생물이라는 범주에 있다는 자연관이다. 인간을 중심으로 환경을 구성하고 인간의 역할을 규정하며 조정하려는 관점이 기존의 교육내용이었다면 인간 역시 자연과 함께 공생한다는 것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점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그 지역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시대의 흐름과 함께 문명화는 되었지만 금강을 끼고 도성을 건설한 당시 백제의 환경과 오늘날 공주·부여 환경은 근본적인 것에 변함이 없다. 백제인들의 문화적 전통과 생활모습을 이해하고 자연이나 시대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을 아는 것은 현재 우리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내유산에 숨겨진 고대인들의 사상과 과학적 원리를 학습하는 것은 동시대를 살았던 세계의 무형유산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세계유산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계 도식화



익산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공주지역 세계유산교육 및 답사-1

익산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공주지역 세계유산교육 및 답사-2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교육을 위한 제언

세계유산은 단순한 관광자원이 아니다. 세계유산을 통해 우리는 지구의 유구한 역사와 행보를 알 수 있고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의 의미를 이해해 볼 수 있다. 세계유산교육을 유산에 대한 교육이라고 정의 내렸지만 이는 세계유산이 있는 지역에서 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유산을 쉽게 접할 수 없거나 다소 관심이 낮은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 이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경관, 사람들의 생활특성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통합적인 조망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충남도는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이어 사찰, 천주교 유적까지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화들을 왜 세계유산으로 등재시켜야하는지, 기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세계유산 관련 정책이나 세부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에는 항상 '관광 활성화'라는 키워드가 등장한다. 이는 세계유산을 활용한 효과이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궁극적 목적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와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 간학문적·다학문적 방법을 통한 총체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세계유산교육 지침서'와 같은 통합적인 연구물을 통해 세계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사과꽃 향기 가득한 청정마을, 금산 바리실마을

정봉희 충남연구원 홍보팀장



상) 바리실마을 풍경
하) 바리실마을 입구에 자리 잡은 300년 된 느티나무



〰

바리실마을은 욕심 없는 스님의 나무 밭주발인 바리에 과실이 가득 담겨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풍요로운 마을입니다. 〰

충남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에 자리 잡은 바리실마을 박인호(69) 대표의 말이다. 이 마을은 금산 소재지답게 인삼 재배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사과로 더 유명해졌다. 마을 전체가 분지 형태로 일교차가 크고 강수량이 적당해서 사과 재배에 최적이라고 한다. 특히 가을이 되면 사과 체험을 위해 찾는 방문객으로 북새통을 이룬다. 사과 체험장 12곳을 비롯해 봄 체험으로 인기 많은 왕우렁이 농법 체험을 위한 우렁이 사육장,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가공시설 등이 마련되어 있다.

넉넉한 인심과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마을 공동체’

바리실마을에는 현재 약 70가구 190여 명이 살고 있다. 이중 마을체험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가구는 12가구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란다. 아무래도 박 대표의 리더십과 다양한 사업에 마을 주민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박 대표는 “1992년 4월에 처음 시작한 능금꽃 축제를 계기로 농산물 제값받기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농산물 판로를 위해 1사 1촌 자매결연 등 다양한 직거래 유통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지난 해에만 약 1만2천 명이 방문해 체험활동이나 농·특산물 구매 등으로 약 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도농 교류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필자가 마을에 방문했을 때에는 지역기관에서 ‘농촌봉사활동’을 위해 찾아오기도 했다.

바리실마을에 처음 방문해서 놀란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마을 주민 대부분이 소형 전기자동차를 이용해 논으로 밭으로 출근(?) 한다는 것. 더불어 저농약 유기농 재배를 고집하는 사과와 왕우렁이 농법으로 벼를 재배하는 등 친환경 특산물로 마을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노력이 눈에 띄었다.

특색 넘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인기

봄에는 왕우렁이 농법 체험과 사과꽃 축제가 열리고, 여름에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겨울에는 팥이 만들기와 인삼 발 율기 등이 진행된다. 바리실마을의 체험활동은 이렇듯 사계절이 뚜렷하다.

가장 인기 있는 시기는 역시 가을이다. 사과 따기와 함께 인삼 술 만들기 체험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특히 사과축제에서는 사과를 직접 따서 담을 봉지를 하나씩 나눠주는데, 너무 욕심을 부리게 되면 이 봉지가 터져버린다는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교훈도 얻어 가게 된다고. 봄에는 왕우렁이 농법 체험과 사과꽃 축제가 열리고, 여름에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체험 등을 할 수 있다. 겨울에는 팥이 만들기와 인삼 발 율기 등이 진행된다.

박 대표는 “사실 농촌에서 사계절 체험활동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많다. 청양의 알프스 마을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천후 체험장을 하나

바리실마을의 효자인 사과나무와 인삼 재배 모습



왼쪽) 사과 따기 체험과 사과로 만든 다양한 요리 체험
아래) 바리실마을 박인호 대표



꾸미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바리실마을은 귀농귀촌도 활발하다. 최근 들어 더 활발해지고 있는데, 현재 10가구 23명이 정착해 살고 있다. 처음부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 6개월 내지 1년 정도 머물며 농업과 공동체를 배우게 한다는 것이다.

이 마을에 귀농해 살고 있는 최광수 이장은 말한다. “이제 귀농귀촌은 단순히 농사짓기 위해, 도시생활을 접고 무조건 농촌의 삶을 강요할 수 없다”며 “귀농귀촌 자체를 도농 교류의 훌륭한 완성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 1년 동안(사계절을 한번 지내보면서) 살아보면서 천천히 적응해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10 수원농원 대표 박인호



〈표 1〉 바리실마을의 1박 2일 체험코스

구분	체험명	체험소개
1일째 오전	사과 체험	마을 둘러보기, 과수원길 걷기, 사과 따기 등 과수원 체험
점심	중식	계절별 시골 밥상, 사과로 만든 음식 맛보기 (사과떡, 사과샐러드, 사과김치)
오후	사과비누 만들기, 약초 캐기 체험	사과를 이용해 비누를 만들고, 인삼, 지황 등 약초를 캐보는 체험
	사과와플 만들기	야외 바비큐 시설 이용
한밤	취침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황토로 지은 고향의 집에서의 하룻밤
2일째 오전	조식 및 주변 관광지 답사	계절별 시골 밥상, 주변 관광지(칠백의총, 금강, 서대산) 견학
점심	중식	금산 지역 특징 있는 음식점(여죽, 인삼 삼계탕 등)
오후	정리 및 귀가	방명록 작성, 간단한 청소, 마을 주민과 인사 후 귀가

분명 바리실마을은 30년 전과 비교해볼 때,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들이 서로 어울리며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고 박 대표는 말했다. 비록 마을 내부의 소소한 문제들도 있고 마음처럼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결국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바리실마을이 갖고 있는 넉넉한 인심과 꾸준함, 넘치는 정이 해결책이 아닐까 한다.



바리실마을의 과거와 현재 모습

매력 넘치는 섬 여행의 진수, 원산도(元山島)

이재언 국립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연구원



원산도는 면적 10.28㎢, 산높이 118m, 해안선 길이 28.5km로 보령시 대천항에서 서쪽으로 11km, 안면도 영목항과는 불과 1.8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부근에 효자도, 고대도, 안면도 등이 있다.

고려 25대 충렬왕 때 대사성 최해 부자가 이곳에서 귀양살이를 하면서 시를 지어 인물과 풍습을 읊었다는 원산도. 1914년에 구릉이 많고 산이 높으며 뒀 산(山)자 모양을 닮았다 하여 원산도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 섬은 고만도 또는 고란도라고 불리기도 했다. 대천항에 가면 원산도에 닿는 배를 탈 수 있다.



원산도 근해를 달리는 등대호

원산도와 안면도 영목항과의 인연

보령시에 소속된 원산도는 태안반도에 있는 안면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연륙된 안면도는 태안반도에 위치해 있으며 원산도와 불과 1.8km 떨어져있어 안면도 영목항에서 원산도까지 수시로 여객선이 다닌다.

필자가 영목항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94년도 가을이다. 탐사선 등대호를 몰고 혼자 인천으로 행해하던 중 원산도에 들렀다. 비교적 큰 섬인 원산도에서 차를 빌려 섬을 돌아보고 효자도로 천천히 가던 중 그만 해도를 잘못 봐 얇은 암초에 배가 부딪혔다. 스크류 손상을 입어 아주 천천히 안면도 영목항에 배를 대었다. 배 수리 때문에 답사비가 다 떨어졌는데 마침 공무원 친구가 도와줘 무사히 인천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안면도 영목항에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놓았다. 2004년도 가을, 초전리에서 1박을 하며 원산도를 답사하였다.

원산도 둘러보기

원산도에는 저두 선착장을 비롯, 선촌 선착장, 초전 선착장까지 모두 3개의 선착장이 있다. 초전선착장에는 국가주요시설물인 '지적삼각점'이 있다.

초전은 원산도의 서쪽에 있는 마을로 윗말과 풋살, 안동네로 나뉜다. 초전마을은 그리 큰 마을이 아니다. 선착장 앞에 구릉지가 있어 좌우로 해안길이 있다. 오른쪽은 초전마을 가는 길이고 왼쪽은 큰 마을로 들어가는 해안도로다. 마을 뒤로 밭이 있다. 마을입구에 표지석과 함께 버스정류소가 있다. 섬의 유일한 마을버스. 배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 운행된다. 마을버스 한 대가 섬을 오가고 하루 대여섯 번 배가 들어오는 게 전부인 조용한 섬이다.

해안도로를 달리면 왼쪽으로 드넓은 해안이 펼쳐진다. 이곳에 양식장이 있다. 썰물이 되면 서해의 자랑 ‘갯벌’이 드러난다. 물이 빠지면 조개를 잡는다. 원산도는 ‘맛조개’가 유명하다.

섬의 모양은 동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다. 배를 타고 섬을 일주하면 모래밭의 흰색 띠가 섬 전체를 휘감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섬은 원래 식수가 귀한데 원산도는 다섯 개의 산봉우리가 자리하고 있어 지하수도 풍부하고 물이 짜지 않아 주민의 식수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

초전 남쪽 오봉산 산꼭대기에는 봉화대가 있다. 고만고만한 다섯 개의 봉우리를 나란히 지니고 있다고 해서 오봉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이 봉화대는 외부의 침략이나 긴급한 상황시 오천성의 수군절도사에게 연락을 취하던 곳이다. 밑에는 관가(관개)라는 마을이 있다. 옛날 봉수대를 관리하던 관아 건물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홍주관할인 이 관청 아래에 당

산이 있는데 큰당과 작은당이 있다. 해마다 여기서 당제를 지낸다고 한다. 관청 건물이 있던 곳이라고 전해지는 자리는 넓은 평지로 남아있으며 지금도 많은 기와가 출토된다고 한다.

다섯 형제가 어깨동무를 한 것 같은 오봉산의 최고봉은 서쪽에 있는 오로봉(118m)으로 이곳에서 서해의 여러 섬들을 내려다보는 것도 좋다. 오봉산의 반대쪽에 오봉산해수욕장이라 불리는 백사장이 펼쳐져 있다. T자형 섬의 독특한 형태 때문에 작은 섬이지만 백사장은 무려 30km나 된다. 남쪽 해안선을 따라 굽이굽이 꺾어지면 백사장이 나타나니 작은 해수욕장이 계속되는 셈이다. 원산도 내 해수욕장은 오봉산, 원산도, 저두 등 3곳으로 섬 남쪽 해안에 몰려 있다.

오봉산해수욕장은 오봉산 남동쪽에 위치해 있다. 백사장 규모는 폭 150m, 길이 2km 정도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모래가 인천의 유리공장으로 실려 나가면서 해수욕장으로 재탄생했

고 백사장을 따라 소나무 숲이 우거져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백사장 주변 갯벌에서 바지락, 맛조개 등을 잡아볼 수 있다.

진촌을 지나면 원산도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사창이 있다. 사창 쪽에서 바라보는 해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만큼 찬란하다. 마을 남쪽 사창해수욕장은 외부인의 손길을 많이 타지 않아 아직도 태초의 자연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진촌에서 구치를 지나다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작은 구릉과 다랑논, 밭을 지나면 눈이 부시도록 하얀 백사장을 만난다. 원산도해수욕장이다. 섬에 있는 해수욕장이라고 만만히 볼 크기가 아니다. 넓은 백사장은 모래가 곱고 해안 경사가 완만하다.

원산도에 있는 해수욕장들은 물이 따뜻하며 웬만큼 걸어 나가도 깊어지지 않는다. 물살이 거세지 않고 모래가 부드러워 해수욕엔 그만이다.

원산도에는 해수욕장 이외 패총, 봉수대 터 등 볼거리가 많다. 모두 3곳인 패총 유적에선 무문토기, 마제석검, 석부 등이 출토됐다. ‘백발가’, ‘시집살이 노래’ 등의 민요가 전해지며, 매년 정월 초에는 당제를 지냈다고 전해오고 있다.

원산도해수욕장 북쪽에 점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광명초등학교, 원의중학교 및 보건지소와 지·파출소는 물론 자가발전 시설도 있다.

원산도는 전체가 낚시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갯바위 어느 곳에서나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다. 간단한 채비만 해가면 섬 곳곳의 갯바위에서 놀래미, 우럭, 살감성돔 등을 잡을 수 있다.

섬의 북쪽은 갯벌이 발달되어 있으며 조개와 낙지가 많이 잡히고 있다. 저두 해수욕장 북쪽으로 저두선착장이 있고, 진고지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선촌이다. 가장 큰 마을

오봉산 해수욕장 모습



원산도 초전 모습



이다. 경찰서 원산도 분소가 있고 농협과 함께 우체국도 있다.

이곳에 여객선을 탈 수 있는 선착장이 있다. 선착장에는 빨간 등대가 있다. 그리고 마주보이는 섬이 효자도. 북쪽으로 보이는 섬이 소도, 그 옆이 바로 안면도 영목항이다.

선촌의 선착장에 서니 발전소와 멀리 보령 화력발전소가 보

인다. 선착장 끝에서는 온가족의 관심이 낚시대 하나에 집중됐다. 원산도는 조개잡이 외에도 우럭양식, 꽃게잡이, 주꾸미 잡이를 한다. 섬 안쪽엔 번듯한 식당도 별로 없고 좋은 놀이시설도 없어 마치 시간이 70년대에 멈춘 듯 개발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런데 선착장 주변에는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눈에 들어온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 ‘귀츨라프’의 기념비석

원산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해수욕장 남쪽에 우리나라를 최초로 방문한 귀츨라프(1803~1851)라는 독일 출신 루터교 선교사의 기념비가 있다. 좀 특이한 장소이기에 두 번이나 가 보았다. 귀츨라프 선교사 일행은 1832년 7월 17일 장산(장산곶)에 도착한 다음 남하하여 22일 대천의 녹도와 불모도를 거쳐 26일 고대도에 정박하였다. 그들은 홍주 목사 이민회를 만나 외국인으로서는 처음, 조선 국왕에게 정식 통상 청원 서한을 보냈다. 26종의 책자와 망원경 등 많은 선물을 순조 임금에게 진상하였다. 조정의 회답을 기다리는 20일 동안 고대도에 머무면서 주민들에게 한글 성경과 전도문서, 서적 및 약품을 나

눠주고, 감자를 심어주고, 감자와 포도주 재배법을 가르쳐 주었다.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가르쳐 주고 한글 자모를 받아 적어 이를 세계에 알리기도 하였다.

이 시기는 영국의 토마스 목사가 평양을 방문하여 대동강변에서 주민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다 순교한 1866년보다 34년 앞섰으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에 상륙한 1884년보다 52년 앞섰다. 최초의 가톨릭 선교사인 불란서 신부 모방(Pierre Maubant)이 내한한 1836년보다도 4년이나 앞선다.

원산도의 미래

‘휴양하기 좋은 섬 베스트 30’에 선정되기도 했던 원산도는 충남에서는 안면도 다음으로 큰 섬이었으나 안면도가 육지와 연결되면서 충남에서 가장 큰 섬이 됐다. 원산도 역시 보령시에서 원산도를 지나 안면도까지 연결되는 연륙교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몇 년 후에는 육지가 될 예정이다. 보령~안면도

연륙교(총연장 14km·왕복 2~4차로)사업은 천수만을 사이에 둔 보령 대천항과 태안군 안면읍 영목항을 연결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연륙교는 대천항에서 5.7km 떨어진 원산도를 통과한다. 원산도 부근 2.4km 구간은 해저터널로 건설된다. 연륙교 사업의 여파로 섬이 발전될 것이란 소식에 벌써부터 부동

산 중개업소가 들어섰다. 덩달아 콘도와 별장, 레포츠 시설 등도 속속 갖추어 지고 있다. 새로 들어선 펜션들로 섬의 숙박업은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원산도는 충남권 제일의 관광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이 건설공사는 2018년 5월 완공되며 완공과 함께 상수도가 공급된다. 원산도 1000여 명의 주민들은 평소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어 주는 5개의 해수담수

화시설로부터 수도물을 공급받고 있다. 여름철 관광객들이 몰리는 때에는 물이 부족했었는데 앞으로는 보령댐의 상수도를 공급받아 물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안면도~원산도~보령간 연육교와 해저 터널의 착공으로 서해안고속도는 더욱 더 차량수효가 늘어날 것이며 제2의 서해안고속도로가 건설되는 호재들이 나올 것이다.

섬을 떠나면서

원산도는 동서로 길게 뻗어 논과 밭, 염전과 해수욕장이 여러 개 있고, 식량을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축복받은 섬이다. 육지와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바람이 많이 불어도 안면도 영목을 통해 가볍게 빠져 나간다. 인근 바다와 광활한 갯벌에서 다양한 어종을 채취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인구도 많아지고, 관광지로 변하다 보니 원산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2016년에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과 2018년 완공 예정인 대천항~원산도-안면도 연륙교 해저 터널 건설 공사 소식에 원

산도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원주민보다 외지인들의 땅점유율이 높다. 투기꾼들이 몰려와 오래 전에 주민들에게 할 값으로 땅을 사들였다. 섬 내부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돈이 순진한 예전의 섬마을 모습을 잃게 만들었다.

평생 바다만 바라보고 법 없어도 살아가던 섬 주민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원산도의 개발은 환영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파괴해서는 안되며 개발의 이익도 원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원산도 마을모습

홍성, 오리농법의 부활을 꿈꾼다

박용식 아하홍성생활기술협동조합 이사장



2008년 조류독감 확산으로 5만 마리에 달했던 홍동의 오리농법은 급격히 쇠퇴하였다.

2014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운영하는 ‘조류인플루엔자와 야생조류 과학특별전문위원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철새는 죄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이미 전국의 오리농법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은 뒤였다.

현재 유기농 쌀농사는 우렁이농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렁이농법은 제초에는 효과가 있지만 오리처럼 해충을 없애지는 못한다. 또한 외래종인 우렁이가 월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존 생태계에 대한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남부지방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논 제초 효과와 병충해 방지에 탁월한 역할을 하고 배설물을 통해 다시 논에 양분을 공급해 주는 오리농법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다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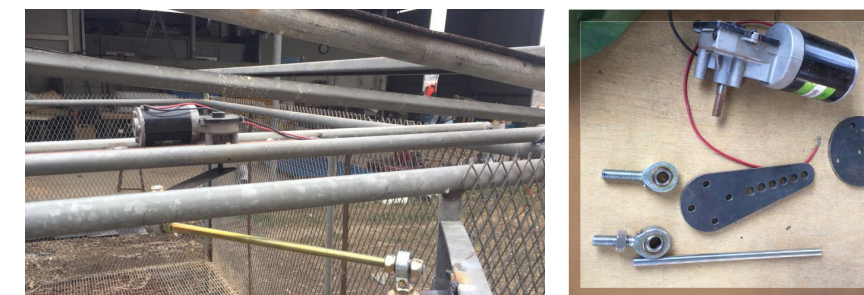
오리농법의 개선을 통한 활성화 기대

충남연구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과제는 오리농법을 개선하여 친환경 논농사에 가장 적합한 오리농법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적정기술을 통해 매일 오리먹이를 주어야 하는 오리농법의 불편함을 개선해보고 농가 수익창출을 위한 오리 비육과 가공사업의 가능성도 모색하려고 한다. 또한 오리농법을 친환경 농업에 기여시킴과 동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오리농법을 진행시킨 후 한 달 정도 벼가 자라면 오리가 더 이상 필요없게 되지만 식용으로 이용하려면 비육기간이 더 필요하다. 과제 진행을 위해 방치되었던 오리집을 수리하였고 오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논에서 오리의 비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손이 많이 가는 오리농법의 자동화를 위해 세 가지 장치가 필요하다.

● 자동개폐장치

첫 번째는 자동개폐장치인데 자동화를 위해 여러 종류의 모터를 구입하여 속도와 출력 등을 점검하고 독립적인 전원을 위해 태양광을 사용한다. 적당한 속도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속도조절을 위한 제어기 또는 감속기어 등의 제작을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 자동급수장치

두 번째는 자동급수장치인데 물을 자동으로 급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류의 장치들을 알아보고 오리에게 적합한 급수장치를 제작중이다. 전기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수장치는 수동으로 작동된다. 물통의 높이차와 급수용 니플밸브를 사용하면 전기없이 자동으로 오리가 마실 물을 공급할 수 있다. 향후 좀 더 많은 양의 급수가 필요할 경우



모터를 장착한 자동식 장치 또는 직선으로 된 물통에 일정시간 동안 물이 공급될 수 있는 장치로 교체할 예정이다.

●●●
자동 사료 투입장치

세 번째는 자동 사료 투입장치이다. 아침저녁 일정시간 사료가 자동으로 투입될 수 있는 기존의 장치는 회전분사식으로 가격이 비싸다. 먹이를 제한적으로 주어 부족한 부분은 논을 돌아다니며 찾도록 해야 하는데 기존 방식은 제한공급을 할 수 없어 새로운 구조의 장치가 필요하다. 먹이 공급장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 중인데 첫 번째는 먹이를 송풍장치와 연결해 불어주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모터와 연결하여 일정시각에 개폐되는 방식이다.

가동실험을 통해 사료 투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다. 먹이 공급 장치는 저녁에 문이 닫히기 전에 먹이가 공급되어야 오리를 오리집 안으로 유인할 수 있으므로 문 개폐 장치와 연동하여 작동시킨다. 문이 닫히기 전에 버저(알람)를 일정시간 동안 작동시켜 오리를 불러 모으는 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오리농법 활성화의
필요조건,
‘비육과 가공 판매’

설문을 통해 오리농법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리농법을 통한 수익창출임을 확인하였다. 때문에 오리의 비육과 가공사업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 오리쌀에 대한 브랜드 가치 확보와 오리농법의 관광 상품화(홍보), 오리가공식품을 통한 수익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인 식용오리는 6주간 키워서 도축하기 때문에 육질이 연하여 모든 가공식품(훈제, 로스 등)을 만들 수 있다. 오리농법에서는 2주령의 오리를 4주간 논에서 활동하게 하고 중간업자 매입 후 다시 2~3주간 비육하여 도축한다. 비육기간이 8~9주 정도로 길고 풀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식용오리에 비해 육질이 질겨 훈제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백숙용 또는 떡갈비, 소세지용으로 가공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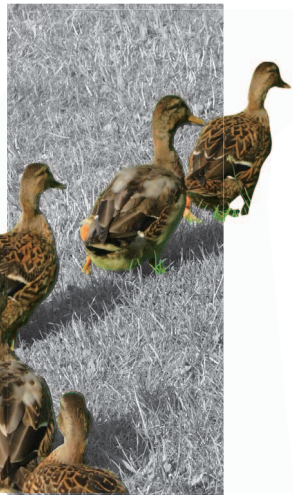


항목		단가	비고
새끼 오리 구입		2,000원/마리당	청둥오리기준 흰오리는 조류독감으로 인한 품귀로 구입 불가
사료비		4,000원/마리당	마리당 총 사료비 (추정치)
오리 도축		1,000원/마리당	도축 마릿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오리 가공비	백숙	500원/마리당	최소 마릿수 없음
	훈제	2,500원 +700원(뼈 제거)/kg당	기본 300마리 이상
	떡갈비	3,500원/kg당	기본 200마리 이상
운반비		50만원/1500마리	오리 마릿수가 적을 경우 마리당 단가가 상승

현재 오리농법 농가의 경우 새끼오리 구입비와 중간업자에게 넘기는 판매비가 같아 사료비가 고스란히 농가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하다. 위의 표를 참고하여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판매 가능한 오리로 사육할 경우 6,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도축과 가공까지 합산하면 가공식품의 종류에 따라 총 7,500~10,5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가공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마리당 20,000원 이상에 판매된다고 가정하면 직접 판매할 경우 10,000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비육과 가공 판매는 오리농법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오리농법 시범사업
성공을 위한 숙제들



오리농법 시범사업이 성공하는데 있어 풀어야 할 숙제들이 더 있다. 전원을 공급할 수 없는 논에 적용할 독립형 컨트롤러 제작이 필요하다. 문 개폐장치, 먹이 공급장치 등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러와 독립형 태양광 패널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아직 규격화되지 않은 작동장치의 표준화를 통해 오리집 자동화 제작단가를 낮추어야 한다. 오리농법에서 가장 번거로운 작업인 오리망 설치작업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규격품의 개발과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조사업도 필요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는 500마리 정도의 오리로 오리가공사업을 실험해 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육과 가공, 판매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실제 농가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또한 비육과 가공사업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려한다. 예를 들면 판매 가능 예상 지역의 식당, 문당환경교육관¹⁾ 등과 협력을 통한 판매상품 개발과 판매계약 등의 체결,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내 가공업체와의 협력 또는 가공시설 설치 등이다.

본 과제는 농민사와 함께 진행되는 특수성 때문에 아직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전문성이 부족한 탓에 장치개발과 진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다. 아직은 희망사항이지만 올 한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까지 오리농법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고민이 있었고 실패도 있었다. 때문에 오리농법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때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였던 오리농법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은 전국의 수많은 유기농 쌀과의 차별화와 수익창출을 위해 필요하다. 무엇보다 유기농업의 올바른 방향을 다시 찾아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어가는 마을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오리가 노니는 논을 계속 보고 싶기도 하다.

1) 홍성 홍동면 문당리 환경농업마을



충남인터뷰

바야흐로 균형 발전의 시대, 금산 발전이 곧 충남 발전

김석곤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약력

금산중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현) 2014.07~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지원특별위원회
 현)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현) 금산문화원 이사
 현) 금산초등학교 총동창회장 외 다수

정치 입문 배경은?

Q & A

건축을 전공하고 건설회사를 다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우디 근무를 신청했다. 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1986년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금산에 설계사무소를 개소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06년 지방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지역전문가가 의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입문하게 되었다. 유태식 전 충남도의원 등의 추천으로 국민중심당 창당에 참여했고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의 기쁨도 맛봤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3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도 저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충남도의회에 한 축을 맡고 싶다.

금산군의 가장 큰 현안은?

Q & A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인구증대와 일자리 창출이다. 금산의 많은 인재들이 고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문제에 대해 학부형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인근 대도시로 이전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대도시로 이전한 학생 중 금산에서 공부했으면 충분히 갈 수 있었을 대학보다 하위권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을 때면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10대 전반기 교육위원으로서 미약하나마 금산 학교시설 현대화, 교육환경 개선, 우수 교사 확보 등 다각적이 노력을 기울였다. 학생과 학부모, 교육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본다. 아울러 금산은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이다. 아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두 우리 지역의 소중한 인재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훌륭하게 자라 장차 금산과 충남도의 발전을 이끄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보겠다.

더불어 청정지역 금산에 걸맞은 기업체의 유치와 공단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을 위해 도, 군과 협의해 도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

세계인삼엑스포 개최, 금산인삼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등 금산이 세계적인 인삼산업 메카로서 충남을 이끌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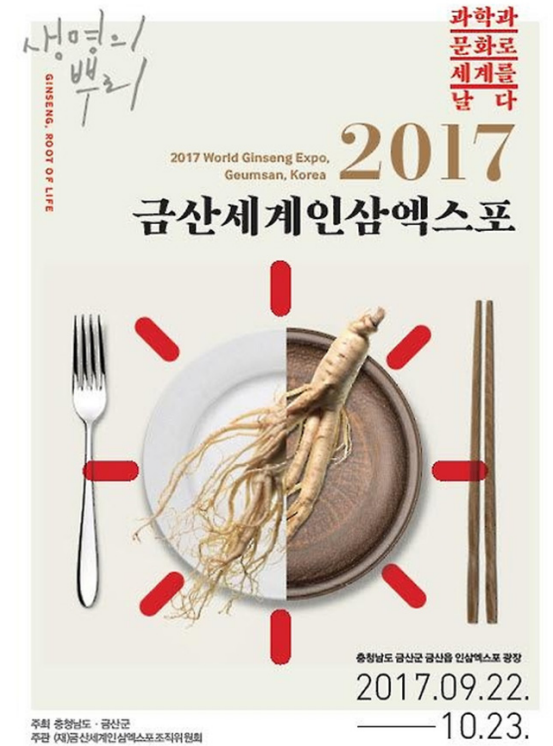
금산은 세계적인 인삼산업의 메카다. 금산인삼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최고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오랜 역사와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2006년, 2011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국내 인삼이 ‘인삼산업법’에 의해서만 관리되었던 것과 달리 현재 일반 건강식품용 인삼은 일반 농산물로 분류되어 인삼산업법 적용을, 한약재용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사법 적용을 받는다.

한약재용 인삼류 제조업자들은 우수약품 제조공정(GMP) 시설 및 한약사 고용 의무화 등 한층 더 강화된 규제를 받는다. 이런 부분 때문에 소농업인이나 영세업자의 경우 인삼 재배와 판매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인삼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령 적용은 인삼을 의약품에서 식품으로 전환해 인삼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세계화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한약사 인건비 등을 포함한 유통과정에서의 추가 비용 발생 증가로 소비자 가격이 상승될 것이며 농민과 소비자들의 피해만 커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반면 세계 최대 인삼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은 지난 2012년 의약품에서 식품으로 규제를 풀고 인삼산업을 확장하는 추세. 최근 3~4년 사이 4개의 전문 연구소에 1,000여 명의 연구 인력을 배치하는 등 공격적으로 인삼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인삼중주국으로서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과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또 국제 인삼 거래의 중심인 홍콩시장에서 정작 한국 인삼 점유율은 매우 낮다. 올해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에 관련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하고 한국인삼을 다양한 각도에서 재조명하여 우수성을 다시 상기시킴으로 세계적 인삼거래시장인 홍콩에서 우리 인삼의 점유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금산군의 지역적 소외감에 대한 의견은?

Q
&
A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금산은 도청과도 인접하지 않은 외곽지역이 되었다. 이로 인한 금산군민의 상실감과 소외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왕복 4~5시간이 걸리는 도청업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청 금산출장소 설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참고로 충북도청의 경우 2개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어 도내 모든 지역이 행정적 혜택을 받고 있다.

방우리 도로 개설사업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방우리 같은 도계마을의 경우 도청으로부터 소외당하거나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다. 수십 년에 이르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의정활동기간 많은 노력을 했으며, 수차례 도정질문 등을 통해 도지사의 약속을 받아냈고, 드디어 수통리-방우리 간 연결도로 개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방우리 종합발전계획에 맞춰 무사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바야흐로 균형 발전 시대. 금산의 발전 없이는 충남도의 발전도 없다. 금산 군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도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향후 의정활동 계획은?

Q
&
A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 재정, 조직, 인사, 감사, 홍보 등 도정의 중추적인 핵심부서에 대한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담당하고 있어서 도정에 대한 견제는 물론 감시 역할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며,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는 충남도가 되도록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끝으로 충남연구원이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하는지?

Q
&
A

충남연구원은 개원 이래 충남도와 시군의 정책입안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동안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린다.

충남연구원은 세계적인 조류를 이용하여 우리 충남의 미래를 위해 먹거리 창출 등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환경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해양수산 분야 연구도 절실하다. 이런 거시적 연구와 더불어 도민들이 피부로 겪고 있는 많은 부분, 지역 소상공인의 지원 및 활성화 문제, 우리 도의 주력 산업인 농축산업의 발전문제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충남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이 우리 도 정책에 입안되어 충남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되고,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충남의 미래를 함께 나누다

충남의 미래 2040
지역 미래상 도민 간담회 2017. 01. 24

진행 송두범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단장 정리 강수현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연구원



지자체들마다 유행처럼 미래의 계획, 비전 수립 등 지역의 중장기 발전에 관련된 많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역의 주인인 도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 관심이 없다.

충남연구원은 도민들이 바라는 지역의 미래 모습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엮어보자는 취지로 ‘충남의 미래 2040’ 출간 사업을 시작하였다. 2016년 출간된 1권에서는 ‘충남은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주제로 지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어 ‘충남은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2권 출간을 준비 중에 있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지역별, 연령별로 각자의 삶을 지켜가고 있는 충남도민 분들을 한자리에 초대하여 직접 목소리를 들어 보았다. ‘내가 겪어보니까, 나를 위해서 혹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지역의 이런 점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답 없는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01 : 우리 지역에 대한 개인의 의견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도시 지향적인 것 같다. 풍요로움의 상징인 도시를 지향한다. 충남은 대전시 행정 분립 이후 천안, 아산 등 북부권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다. 지역 원주민들은 개발 중심의 도시 지향적 성향을 띄고 있고, 복잡한 도시의 삶에 지쳐 귀촌 귀향한 분들은 옛 정서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유의 것을 지키고 싶어 하는 성향을 띄고 있어 두 집단 간 갈등이 있다. 이곳에 모인 분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지역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다.

박진섭
60대 _ 서산

귀향인의 시선 #
지역의 성장과 집단 간 갈등

45년의 타지 생활 후 고향이 그리워서 돌아오게 되었다. 고향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의 정서나 인심에 대한 기억들이 있다. 그동안의 사회경험을 풀어놓을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고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고향에 오니 고향이 그림더러’라는 느낌이 많았다.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닌 모습에 팽배해진 개인주의화, 여러 집단 간 갈등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충남은 성장하는 지역과 후퇴하는 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어서 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정서적 유대감만은 유지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이상윤
20대 _ 천안

취업 준비생의 시선#
학교생활만을 위한 지역 거주, 지역과 화합하지 못하는 학교

서울에 살다가 천안에 오니 처음엔 너무 작은 지역이라 적응하기 힘들었다. 7년여 동안 천안은 급격히 발전했다. 천안 아산 지역의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지역의 학생 유치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기 중에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어느 지역이나 존재한다. 학교만을 위한 생활로 인해 지역에 화합되지 못하는 지역 대학의 학생들은 지역에서 소비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박영숙
50대 _ 청양

귀향인의 시선 #
지역민들과의 화합, 노인을 위한 소일거리 필요

귀농한 지 20년째이다. ‘청양 사람 다 됐네’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청양 사람이 된다고 대답한다. 귀농하면서 지역의 보수성을 정말 많이 느꼈다. 어느 지역에서나 존재하는 정서 문제이다. 그래도 나는 비교적 잘 살아남은 케이스이다. 청양의 끝 마을에서 지내고 있는데 순박한 주민들이 잘 대해주신다. 청양에 살면서 서울 생활을 병행했고, 6년 전 완전히 귀농했다. 청양은 인구가 3만 명으로 굉장히 작은 지역이지만, 도시와 비교하면 살기 좋은 점들을 많다. 인구가 적기 때문에 더 알차게, 더 재미나게 살아가는 방법들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지혜를 젊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농촌의 노인들은 단돈 1,000원이라도 좋으면서 ‘일자리’도 아닌 ‘소일거

리'를 찾고 있다. 최근 로컬푸드 협동조합을 만들어 할머니들이 농사지은 텃밭 채소들을 직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된다면 소일거리만이라도 꾸준히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원래 고향이 부여인데 결혼 후 서울에서 지내다가 귀향하였다. 장류 사업을 시작하며 고향에 돌아왔지만 계속 타지 같은 느낌이 들었고, 외지인에 대한 지역민이나 공무원들의 배타적 모습에서 상처를 받았다. 공주로 이사를 해서도 같은 상황이었다. 인구가 부족하다면 외지인을 포용하여 인구를 늘려야 할 것인데, 지역의 따가운 시선은 전입자들에게 소외감을 준다. 귀농자의 지역 융화가 비교적 수월한 반면 사업을 하는 외지인들에 대한 배타성이 커 융화가 어렵다고 느꼈다.

대학생활을 제외하고 50년째 보령 지역을 지키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와 시골의 격차가 큰 만큼 혜택의 차이도 너무 크다. 중부발전의 본사가 보령으로 이전하면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보령시는 기업 근로자 5천 명이 점심에 지역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였다. 주변에 식당이 많이 생겼지만, 근무자가 없는 주말엔 길거리가 텅 비어있으니 경제 흐름이 이어지지 못한다. 주거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내려와서 주 중에만 생활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어느 지역이든 인구가 없으면 발전할 수 없기에 지역 거주에 대한 혜택을 바탕으로 인구 유입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 지역의 도로 상태는 타 시도에 비해 굉장히 낙후되어 있으며, 보령화력의 영향 및 미세먼지 문제로 굴 양식이 되지 않는 환경문제도 발생하였다. 보령시는 인구 유입을 기대하며 정부에 부지를 내어주었는데, 오히려 피해만 입었다. 정부 계획에 따른 혜택은 커녕 피해만 늘어가고 있는 지금 지역민들을 위한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이 귀농하셔서 논산에서 자라며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했다. 대학에 진학하며 예산에 거주 중인데, 내 입장에서 리 단위였던 논산보다 읍 단위였던 예산이 더 큰 지역이었으나, 도시에서 온 친구들은 예산도 답답해했다. 친구들은 주말마다 도시로 가는데, 가장 부족을 느끼는 부분이 먹거리, 놀거리의 다양성이었다. 예산에 문화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학생들도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변 도시와 접근성이 좋아 지역민들은 도시로 나가기가 수월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 지역 내에서 가능한 것들을 굳이 타 지역에 가야 하는 것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에 게 가장 큰 소외는 문화혜택에 대한 부족함이다.

노기순
60대 _ 공주

전입자의 시선 #

**외지인에 대한 배타성;
그들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신민호
50대 _ 보령

지역민의 시선 #

**지역민들의 실질적 혜택을 위한
세밀한 정책 필요**

강신아
20대 _ 예산

지역 대학생의 시선 #

**지역의 차이는 문화적 소외감,
지역 대학과의 유대감 필요**

임 준
30대 _ 당진

지역 회사원의 시선 #

**지역에 대한 소속감 보다는
소외감이 먼저**

황보라
30대 _ 부여

전업주부의 시선 #

**지역을 너무 사랑하지만,
일자리 때문에 떠나야 하는 현실**

성영순
40대 _ 홍성

워킹맘의 시선 #

**올바른 공교육 환경,
의료시설, 문화시설,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필요**

주말부부이며 직장 때문에 주 중에만 당진에 거주하고 있다. 1시간이면 서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족 전체가 지역에 내려와서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 당진시는 급격한 경제발전 때문인지 물가가 너무 비싸다. 수도권과 비슷한 물가이기 때문에 굳이 지역에 살아야 될 이유를 못 느낀다. 지역사회와 일원화될 수 없는 이유는 회사에서 체육관도 지어주고, 장학금도 주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사람들을 지역에서 받아 안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의 일에 참여할 때마다 지역민들로부터 배타성과 소외감을 느낀다.

육아 때문에 6년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부어를 굉장히 좋아하며 앞으로도 쪽 살고 싶다. 지역이 작아서 도보로 모든 생활이 가능한 것이 좋다. 모든 생활을 쉽고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육아를 맡아 줄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해도 걱정이다. 보육비를 감당할 만큼의 일자리 수요가 없다. 지역을 좋아하면서도 이러한 여건들 때문에 지역을 떠나야 하는 시점에서 지자체의 활력 있는 정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육아문제에 있어서 어린이집 노동자의 환경과 수요자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고 느낀다. 이 간극은 지자체 정책으로 반드시 채워줘야 한다. 지역민들 간 반사회 등 소통의 현상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생활환경은 만족하지만 사회관계에 만족하지는 못한다. 지역민들 간 육아협동조합에 대한 시도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예산이 고향이며, 공무원 생활을 충남에서 하고 있다. 가장 큰 불편은 자녀의 교육 환경이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사교육보다 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립학교 교사의 마인드가 너무 소홀하게 느껴진다. 의무감만 있고 정서적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의 교육은 당연히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치부된다. 그다음은 의료시설이다. 애가 아프면 병원을 갈 곳이 없어 대전, 천안 등의 도시지역으로 가야만 한다. 직장생활하는 주부로서 문화생활을 할 여력이 없지만 자녀들 입장에서 당연히 필요한 영역이다. 학생들이 건전하게 놀 수 있는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는 지방에 내려와 학교생활을 하면서 도시 학생들보다 더 정겹고 순수한 모습의 친구들을 좋아했고, 정서적으로 만족해했다. 충남이 곧 자치시대가 올 것이라 생각되는데, 지역공동체, 지역 대학을 통한 정보공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각기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주민들이 한 곳에서 찾아 적용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이 있었으면 한다.

02: 2040년에도 충남지역에 남아 있을 것 같은가?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크다.

예산지역만 해도 생산직만 구하는 상황이고,

젊은 사람들이 전공을 살려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정서적으로는 살고 싶은 마음이 크다.

전공이 농업경제인데 관련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다.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역과 상관없이 일자리에 따라서
거주지를 정하게 될 것이다.

{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자리 }

농촌에서는 로컬푸드와 관련한 일꾼들을 구하고 있는데
들어온 친구들이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나간다.

외식업이나 마케팅 등 젊은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서로 힘든 것 같다.

일자리만 해결된다면 계속 거주하고 싶다.

{ 자녀들을 위한 교육 환경 }

산골이 너무 좋아서 이 지역에서 꼭 살고 싶다. 교육문제가 큰데,

청양에 인문계 학교가 신설되면서 실제로 아이들이 지역에 남는 경우가 많아졌다.

확실히 농촌에서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

{ 고령세대를 위한 의료시설 }

2040년이면 개인적으로 70대가 될 텐데,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그때에는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이동할 것 같다.

그것이 충남에 갖추어져 있다면 남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남고 싶지 않다.

얼마 전 백내장 때문에 동네 안과에서 수술을 했는데 잘못되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갔다.

진료 절차 및 의료약품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약값은 서울이나 지역이나 동일한데, 품질이 다른 것을 느끼기 때문에 병원은 이왕이면

큰 곳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시골 생활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함 때문에 서울이 그리운 때가 많다.

대중교통의 이용만 해도 너무 번거롭고 불편하다.

문화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생활의 불편함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충남에 계속 살고 싶다.

{ 대중교통 등 생활편의시설 }

2040년에는 도농이라는 개념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모든 지역에서 서울대 강의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역에 대한 관점의 전환 }

농촌에 거주하면서 2040년에 어떤 마을이 되어 있을까를 상상해 보곤 한다.

이미 마을의 초등학교는 폐교 수준에 있다.

현재 농촌마을에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아이들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다.

미래에는 그 아이들이 이 지역에서 청년활동을 하게 될 테고,

이주 여성들은 지역의 중심 역할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을 대비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이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03: 우리가 바라는 지역 미래상은?

농촌이 경쟁력이 되는 지역사회

박진섭

농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면 지역 브랜드 가치를 살려내는 것이 답
이라 생각한다. 자연환경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고, 1차 산업인 농업을 3차 산업으
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적절한 곳이 충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지역
커뮤니티 차원에서 마을회관을 다기능화 시켜서 외부인들을 위한 숙박시설, 마을 사
람들을 위한 북카페, 식당 등 모든 생활기능이 한 곳에 집중되는 장소가 되었으면 한
다. 농촌의 입장에서 농업을 살리기 위해 4계절 내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
이 고민한다. 유럽처럼 농업 체험형 숙박시설을 충남에서 먼저 만들어서 산업화 시켰
으면 좋겠다. 2040년에는 정말로 1차 농업은 기계가 하고 3차 산업을 사람이 하는
미래,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정책지원이 마을의 리 단위까지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교통이 편리해졌으면 한다. 배차간격도 좁아지고, 수소차, 전기차, 무인택시 등의 대중교통이 더 편리하게 발달되어 시골지역까지 접근성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식당이나 농촌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같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에는 노동에 따른 소득의 차이가 적으며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강신아

**마을 단위 정책이
이루어지는 지역,
일자리의 차별이 없는 사회**

우리의 정서상 사람끼리는 자주 보고 자주 소통해야 한다. 음식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식문화에서도 요즘 현대인들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낀다. 현실의 삶은 ‘빨리빨리’를 추구하는데, 음식은 옛것을 추구하고 슬로우 푸드를 찾는다. 머리와 손가락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인데, 이렇게 사는 삶이 편하긴 하겠지만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 같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한다 해도 사람 간의 관계는 옛것을 추구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노기순

**옛것으로 회귀하는
우리의 정서**

젊은 세대들은 문명의 발전에 빠른 적응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세대들은 그렇지 못하다. 서로 살을 부대끼며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더 찾게 될 것 같다.

박영숙

2040년까지 살아있다면 80살이 되는데, 베이비부머 세대로서 공통적인 고민은 자녀 교육, 결혼, 부모 부양 문제 등이다. 건강한 노후의 삶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건강해야만 자식 세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송두범

**건강한 사회,
노인세대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

2040년쯤 되면 젊은 사람들 소득의 60~70%가 세금일 것 같은데, 대부분이 출산, 육아, 노인부양, 복지를 위한 것으로 자립능력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의 보호 때문에 젊은이들의 부담이 당연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박진섭

서글프지만 노인 세대들은 오래 살면 살수록 젊은이들에게 부담만 되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후손들이 재해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부의 분배가 잘 이루어져서 노인 세대들이 건강한 삶을 마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송두범

박진섭

예방의학이 많이 발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과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뉘게 될 텐데,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종으로 사회에 부담이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송두범

일본의 선진사례 중 학교 체육이나 사회체육에 대해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강에 대한 교육 및 투자가 결국 의료비용을 줄 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건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박영숙

일본 요코하마 탐방을 갔을 때 ‘모두의 집’ 세대 간 공동체의 장을 다녀왔었다. 아이들과 노인들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삶을 통해 얻은 지혜를 나누면서 살고 싶다.



젊은 세대는 일자리가 관건인데, 자녀가 생기면 교육, 나이가 들면 건강, 의료문제로 이어지는 내용이었다. 그래도 희망은 사람들이 무조건 대도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생활시설들이 개선되었을 때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처한 환경이 모두 다른 지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던 귀한 자리였다.



베트남 지역 환경 현황과 미래

정종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베트남 연수활동, 다양한 경험과 값진 배움

베트남 농업농촌환경연구원(IEAC)의 고급자문관 직함으로 농촌공동체의 유기농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환경오염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연계하여 미생물제재 도입,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통합형 설비의 도입 가능성 타진 이외에도 물 관련 산업 엑스포에서 시장 개척 상담회 참여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베트남 자연환경부(MONRE), 베트남과학원(VAST), 환경전략연구소(ISPONRE) 등 국가기관 외에 한국의 현지 사무소인 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KOICA 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다이옥신 오염지역 환경정화, 푸퍽섬 생태관광지 개발사업, 광치성 행복 프로그램의 특성을 개략적이거나 살펴볼 수 있었다.

물 관련 엑스포로 호치민에서 개최된 '비엠티 워터'는 기후적응형 물 공급, 염수 침투 방지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환경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 외에 베트남농업대학의 유기환경농업, 양봉시험 시설과 개교 60주년을 맞이한 하노이과학기술대(HUST)의 유기성 폐기물 탄화시설, 이륜차 바이오연료 개발 및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는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역사문화인식을 위해 역사, 여성, 민족, 전쟁, 현대미술국립박물관 외에 성(省) 단위 박물관, 자연생태 자원의 국립공원(바비, 땀다오, 꾁프엉, 깃바)과 목쩌우 생태

관광지, 드엉림 전통역사문화마을, 디엔비엔푸 전적지, 국토해양방위 거점인 남중국해의 쓰영사 등을 둘러보았다.



상) 베트남 농업농촌환경 연구원 회의
하) KOICA 지원으로 설립된 폐기물 재활용 기술센터

#2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

베트남의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본인 마을 단위 조직 형태는 국민성을 반영하고 있다. '마을 전통이 왕권을 능가한다'¹⁾는 믿음이 있는 베트남 농부는 마을에서 조화를 추구하지만, 이를 벗어나면 고슴도치 자세를 취한다.

역사적으로 베트남은 프랑스의 다낭 점령(1858)을 시작으로 하노이 점령(1873)과 아르망조약(1883)에 따른 홍강 개방 이후, 코친차이나, 안남, 톤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5개 지역을 보호령으로 결합한 인도차이나 연방(1887)이 결성되어 1945년까지 식민지의 길을 걷게 되었다. 프랑스 식민세력은 인도차이나 정복 이후 1900년을 기점으로 식민정부가 마을 경제를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세부 정책으로 정부가 토지를 수용해서 프랑스 기업가에게 불하하여 운영하였고, 농업소득세를 수확량의 1/5로 인상해 근대국가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였는데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식민화에 따라 광산, 농장, 도시 노동자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마을에서 지주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식민주의자들의 마을에서 지지기반은 확대되었다.

북베트남 토지개혁운동(1945~56)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마을 공동 토지가 폐지되었고, 사회주의 대생산체제 4대 요소로 계획경제화, 정치 사회주의화, 기술 근대화, 집산화 과정의 지휘체계가 구축되었다. 한편 남베트남은 공산화 방지 전략의 일환으로 인구의 재분포를 위한 분산화 정책과 신경제구역 설정으로 인구 균일화, 미개척지 개간, 도시 실업 해소, 국토방위, 작업분배 제도화, 유목민 정주화 기능을 추진하였다. 그러한 대표적 사례로 베트콩의 지역공동체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Stanley Taylor Plan'이라는 전략촌(strategic hamlet) 건설(1961)²⁾ 수행 과정에서 이농과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하이퐁 시내의 부교. 전쟁으로 파괴된 철교를 수리하여 이용한다.

지하자원, 에너지, 삼림, 인적자원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의 열대 및 아열대 삼림은 금림은해(金林銀海)의 자원이라 할만하다. 대표적인 수자원으로는 연간 유출량이 1,200억 톤에 달하는 북부의 홍강과 5,500억 톤(세계 12위)에 달하는 남부의 메콩강이 있다. 반면, 인구 대 토지 비율이 불리하고, 환경오염, 인구 폭발, 국가 과제도 대두된 지역 간 경제 격차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그리고 통일 과정(1975~83)에서 7천 명이 전범(戰犯)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며, 정치적 숙청 추정치는 최소 6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문화와 가치관을 보면 베트남은 유교의 영향으로 노인 공경과 조상을 모시는 효도 정신이 우리나라 보다 강하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형태를 갖는 정치적 특징이 있다. 불교와 마르크스 주의는 공통적으로 보편 평등, 개인 부정, 무계급을 지향하지만, 마르크스 주의는 해방철학과 물질주의 위주의 카르마와 모순되는 운명결정주의 성향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 Phep vua thua le lang
(왕의 명령이 마을 규칙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격언이 있음.
2) 전략촌은 말레이반도에서 1950년대 영국군이 공산화 방지를 위해 설치한 방어적 마을 집단 개념에서 도입되었음. 이는 1933~36년 일본군과 만주군이 항일유격대의 침투를 방지하고 마을 주민의 활동을 감시하던 바라크 배열 형태의 집단부락과 유사한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음.

#3 베트남의 흥망성쇠를 한눈에, '드엉럼 전통마을'

드엉럼 전통마을은 하노이 시내에서 서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홍강 옆에 위치하여 베트남의 흥망성쇠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전통적인 마을 입구의 패방(牌坊; 베트남 전통 건축양식으로 구성된 4개 기둥의 문)을 지나면 마을의 고요함과 옛날의 문화가 담겨있다. 오래된 패방 뒤로 300년 된 벵골보리수(banyan tree)와 견고한 적갈색 라테라이트(laterite) 벽으로 만든 기와집, 골목, 마을 공회당, 오랜 우물, 사원, 교회당 등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모든 공간에서 한 농촌마을의 풍습과 쌀 문화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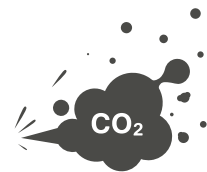


드엉럼의 보까이다이브엉 사당

전통적으로 베트남 농촌마을은 외부의 적 침입에 대한 방어가 용이하도록 외각은 대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가옥배치와 마을 안길은 외통수(cul-de-sac)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마을의 자연경관 구성요소인 벵골보리수, 우물터, 패방, 전통가옥, 공회당 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중에 몽푸(Mong Phu) 정자는 1984년 문화정보부에 의해 국립문화유적으로 지정되었다. 몽푸 정자는 마을 주민들의 공동생활 중심으로 마을 중앙에 위치해 있어 공동체의 집(communal house) 역할을 하는데 남서향의 입구가 있다. 이 건물은 1684년 레왕조 히퐁(Hy Tong) 왕 시절에 세워진 후 응웬 왕조 민망(Minh Mang) 왕 시절에 중건된 북부 농촌의 대표적인 고전 건축물이다.

풍수학적으로 드엉럼 마을은 용의 형상을 한 땅에 자리 잡고 있는데, 용의 머리는 몽푸 정자에, 눈은 정자 옆 두 개의 우물, 수염은 골목길이며, 꼬리는 이웃한 사이(Sai)라는 마을에 해당한다. 이 마을은 중국으로부터 처음 독립을 선언한 8세기 보까이다이브엉(布蓋大王)으로 불리는 풍흥(Phung Hung), 10세기 중국의 침략을 물리친 응오꾸옌(Ngo Quyen) 등 두 명의 왕과 베트남 독립여걸 하이바쥔의 어머니인 만티엔(Man Thien)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곳을 '두 황제의 땅'이라고도 부른다.

#4 대기오염과 오토바이



하노이시의 인구는 700만 명이지만 시에 등록된 개인용 차량은 오토바이 490만 대를 포함해 총 550만 대에 이르고 있다. 도로 1km당 오토바이가 평균 700대로 자동차 70대의 10배에 달한다. 베트남 전체로는 오토바이가 4,430만 대(2016년 9월 베트남 교통부 등록 기준)에 달하지만 자동차는 200만 대에 불과하여 도로의 오토바이 물결은 도시의 활기를 상징하는 풍경이 되었다. 베트남 인구 9,400만 명의 약 60%를 차지하는 만 18세 이상만 오토바이를 소유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성인 4명 중 3명이 오토바이를 보유한 셈이다. 여기에는 과중한 자동차 세금, 불편한 대중교통수단, 미흡한 도로시설 등이 오토바이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베트남 오토바이제조협회(VAMA)에 의하면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 최소 5년간은 오토바이가 국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2020년 3,600만 대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예측을 훨씬 뛰어 넘는 데다가 연간 6%대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자동차 구매력이 향상되고 있어 오토바이 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트남 교육훈련부 청사 앞의 오토바이 행렬

하노이시의 응웬득쥔 인민위원장은 앞으로 4~5년 내에 하노이시의 오토바이가 700만 대로 늘어 교통체증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하여 개인용 차량 억제와 대중교통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교통난과 대기오염 악화를 막기 위해 2025년 도심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현대화 계획을 밝혔다.

대기오염의 원인으로는 매연, 먼지 및 질소산화물 증가가 꼽히고 있는데, 도시 외곽의 택시 개발 등 공사현장, 대형 트럭 운행, 오토바이의 절대적인 숫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오염 심화에 따라 대기질 측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도시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베트남에서는 폐암이 남성 사망률 1위, 여성 사망률 2위를 기록할 만큼 매년 22,000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19,5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뚜오이체 뉴스, 2016. 9). 평균수명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10만 명 당 폐암 발생률을 비교하면(한국 남자 16,750명, 여자 7,277명, 2014년 기준) 한국 47명에 비해 베트남은 24명이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한국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폐암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건강 위협의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

#5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인구 900만인 남부의 호치민시는 도심에 보행자 거리를 만들어 버스처럼 대중교통수단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주말 저녁에 개인용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노이시는 2026년까지 도시철도 8개 노선 건설을 통해 도시 교통량을 처리하고 대기오염을 완화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시행할 구간이 깃랑~하동, 논~하노이역 2개 노선으로, 2016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특히 논~하노이역 구간은 도시를 관통하는 곳인데 우리나라의 포스코 건설과 대림산업이 공사를 맡고 있다.

효과적인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운영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일 노선만으로는 도시철도 건설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3~4개 노선이 서로 연결되어야 도시철도의 진정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급행버스 시스템(BRT) 운영을 위해 2013년부터 신도시 지역에 정차역이 세워진 곳도 있으나 버스 전용차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중앙분리대, 교통신호체계, 안전차단시설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대규모 도로교통 기반시설 설치 운영 소요비용 조달이 외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의존하다 보니 정책적 통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노이 시내에 건설 중인 도시철도.우리나라의 주요 건설회사가 시공중이다.

#6 전력수요 및 에너지 정책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2015년 발표한 ‘베트남 전력수요조사 2015’ 보고서에서는 전력수요가 매년 전년대비 1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산업 발전은 경제성장과 맞물려 있어 1인당 GDP는 1995년과 비교할 때 2015년에 7배가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전력설비 역시 10배 정도로 늘어났다. 베트남 정부는 2011년에서 2020년까지의 전력개발계획인 제7차 국가전력마스터플랜(PDP7)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총 330,000~362,000GWh 수준을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수치는 2014년 대비 2.3~2.5배 증가한 수준으로, 해마다 약 14%의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을 전제로 전원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을 견인할 원동력으로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PDP7에서는 2020년까지 농촌지역 전 세대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베트남의 전력화율은 96.5%이나 산악지역은 70% 수준에 불과하다.



박닌성의 연풍산단. 삼성전자, 오리온 등 한국계 기업이 주로 입주하고 있다.

베트남의 풍력발전 잠재 능력은 513,000MW로 이는 2020년 전력 수요량의 10배에 달하는 용량에 해당한다. 풍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우선순위가 높는데, 전력생산

비중을 2020년까지 4.5%(1,000MW), 2030년까지 6%(6,200MW)로 상향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단위 전력량 kWh 당 10~12센트의 높은 생산단가를 갖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단가의 장비와 첨단기술 도입료에 기인한다. 바람 날개의 자체 조립, 콘크리트 터빈 기둥의 자체 생산, 운영인력의 양성을 통해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단가를 kWh 당 7.8센트 정도로 점차 낮추면 수익성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7 환경산업 성장 가속화 전망

2010~16년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6~7%로 급성장을 이루었으나, 2017년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결정으로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대미 수출 감소로 경제성장률도 하락할 전망이다. 베트남의 수출 규모 중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2%인데, 베트남을 원가절감의 생산기지로 삼아 임가공산업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

2016년 말 기준 베트남에 진출한 5,0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있고, 현지 기업 설립 형태로 시장에 진출했지만 이제는 베트남 기업 지분 확보가 가능하여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베트남의 농촌지역에는 우리나라의 농공단지와 가내수공업 공장의 중간 정도 규모로 도자기, 벽돌, 비단 염색, 식품 가공을 주로 하는 소규모의 공예마을(craft village)이 3,500여 개가 있다. 여기에서 미처리되는 폐수가 실개천과 작은 연못으로 흘러들어 악취와 수질오염 주범이 되고 있다.

고형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5년 연간 1,280만 톤 가운데 대도시 지역이 699만 톤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여 대도시지역 집중도가 높다. 2020년에는 생활폐기물이 연간 2,20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수집 및 운반 처리율은 83%에 불과하여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상) 하노이 하수처리시설
하) 공사 중인 하노이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전국 755개 도시지역 중 80~85%의 매립지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침출수 및 악취 등 생태환경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북부 하틴성에 위치한 대만계 포모사하틴제철(FHS)의 공장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에 즉각 대응으로 국민적 원성을 샀던 베트남 환경당국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환경영향 감시와 처벌 관련 법령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환경측정제어 및 분석 기기 등 환경산업 성장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 증가로 가구 지출 규모가 경제성장률을 웃돌게 되어 유기농, 안전한 먹거리, 소형자동차, 생활소비용품 산업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2017년 베트남 경제전망 및 주요 이슈 점검, 한국무역협회).

#8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베트남은 기다란 국토와 3,260km에 달하는 해안선, 남중국해에 연해있는 자연환경 여건상 기후 변화에 따른 풍수해에 취약한 편이다. 강우 여건은 통상적으로 11월~3월 건기와

4월~10월 우기로 나뉘는데, 급격한 패턴 변화로 이러한 구분도 별 의미가 없어졌다. 건기에는 강우 부족으로 인한 저지대 염수 침투로 농작물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특히 남부 메콩강 델타 지역은 2016년 유량 감소와 함께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의 맹그로브림 감소와 토양침식도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메콩강 델타 수계의 13개 성시(省市)에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공급사업도 2020년까지 100만 톤/일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세계은행보고서(2014)에서는 2050년까지 베트남은 2000년 대비 기온 1℃ 상승과 해수면이 28~33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와 극심한 홍수 빈도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 토지이용 변화와 삼림에 의한 영향을 제외한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2000년 135,795천 톤에서 2011년 274,230천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할 만큼 크게 늘어났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70톤으로 주변의 아세안 국가보다는 높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청정개발체제(CDM)에 의해 2000~2010년까지 1,750만 CO₂톤에 이를 정도로 대형 공장, 화력발전, 산림 흡수원의 조림 및 재조림 등 다양한 감축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외에도 기후 변화 적응사업으로 맹그로브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메콩 델타 수자원정보, 국가 생태회복 개발, 댐 건설과 재해 관리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신재생에너지 확보용 수력댐 건설투자는 베트남이 세계 5위를 기록하였다(REN21, Renewables Global Status Report, 2016).



우유꽃(화쓰어)은 향이 좋아 대기오염이 심한 도시의 청량제 역할을 한다.



런던 도시 디자인 정책

이충훈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준홍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장

#1 도시 개요

런던은 영국의 수도이며, 템스강 양쪽 기슭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다. 2,000년 역사 고도로서 영국의 정치·금융·공업·문화·교통의 중심지이며, 오늘날 세계 금융 중심지, 정치와 문화·교육·미디어·패션·스포츠 및 예술 분야 등에서 대표적인 세계도시로 위상을 지니고 있다.



신고딕 양식의 국회의사당



런던 랜드마크 건축물 더 샤드(The Shard)는 390m 높이로 템스강변에 위치

본 내용은 2016년 9월 22(화)~29일(목)까지 런던도시재생 및 도시디자인 사례지역에 대한 현지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2 도시 특성

런던은 빅토리아 여왕 시기와 세계대전 사이에 급격히 성장했으나, 세계 2차 대전의 발발과 그린벨트의 법제화에 따라 1940년대에 공간적 확장이 중지되었다.

런던은 EU 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도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300개에 달할 정도로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있다.

런던은 뉴욕, 동경과 더불어 세계 3대 업무 및 상업중심지로 런던 최대 산업은 금융으로,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은 유럽 최대의 금융 및 업무 중심지이다. 국제적인 교통중심지로 히드로(Heathrow)공항을 포함한 5개의 국제공항과 하나의 대규모 항만이 위치하고 있다.



1. 런던의 금융 중심지인 '시티 오브 런던(City of London)'
2. 시티 오브 런던 안내표지판

#3 도시 디자인 추진 정책



런던은 1980년대부터 경제재건의 주요한 수단으로 디자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으며,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재생사업과 거주자, 방문자, 투자자를 모두 만족시킬 도시 내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도시 디자인이 부각되었다.¹⁾

밀레니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993년 밀레니엄 커미션을 설립하고, 산업화 시대를 주도한 영국 대표도시들의 쇠퇴를 극복하는 도시재생전략을 도시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런던의 리버풀과 카나리워프를 들 수 있다.

1) (재)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도시 2012

낙후된 템스강 이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추진한 런던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2000년 이후 런던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세계 최대의 회전관람차로 사우스뱅크의 대표적 상징물이 된 런던 아이(London Eye), 화력발전소를 현대미술관으로 탈바꿈한 벅크 사이드의 테이트 모던(Tate Modern), 낙후지역이었던 서더크 지역 재생의 성공사례인 보행자 전용교 밀레니엄 브리지(Millennium Bridge)등이 대표적이다.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 디자인 전문가 피터 비숍 등 전문가로 구성된 런던시장 직속 기관인 ‘디자인 포 런던(Design for London)’이 도시 디자인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런던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을 위해 건축과 도시 디자인이 중요한 틀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이 조직을 구성하였다.

‘디자인 포 런던(Design for London)’은 런던 전체의 도시 디자인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개발 전 과정에 건축가와 도시디자이너가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심미성, 접근성, 친환경성 및 다양한 인종과 문화유산 존중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런던은 런던시장 직속에 도시 디자인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 전문가가 개입하는 방식의 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재개발과 관련해 주민들의 참여를 돕는 커뮤니티 센터 기능을 수행한다.

- 1. 1996년 밀레니엄 기념사업으로 건설된 밀레니엄 브리지(Millennium Bridge)
- 2. 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를 개조한 테이트모던(Tate Modern) 갤러리 내부
- 3. 높은 산이 없는 런던에서 반경 40km까지 경관 조망이능한 런던아이(London Eye)



#4 공공시설 디자인의 핵심, 거리 디자인



영국 해리티지 재단, 영국을 위한 디자인 등 다양한 단체들은 런던의 큰 그림을 제시하였으며, 공공프로젝트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Design Enabling, Design Review, 건물의 디자인 퀄리티 향상과 관리도구, 디자인 퀄리티 평가(DQI) 등을 통해 검증되어 추진되었다.²⁾

해리티지 재단은 거리를 문화재처럼 생각하며 국가나 지역 문화재 관리·보호 수준으로 연관된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 거리계획, 관리, 조율의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³⁾

해리티지 재단의 ‘모두를 위한 거리(Street for All)’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가 쉽게 참조할 수 있는 디자인 지침서이다. 거리포장을 거리의 특성과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핵심으로 생각하고 전통적 거리포장 재료, 형태, 색상, 방식 및 구체적인 시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해리티지 재단에서 관리하는 런던 구(舊) 트루만 양조장 지역의 브릭레인 역사지구 재개발 사례

2) (재)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 도시 해외리포트 2012
3) 김정후, 영국의 공공디자인 정책과 시사점, 월간국토, 2008

#5 우리의 거리 구하기 Save Our Streets

시민들이 거주 지역의 공공시설물을 직접 평가하고 해리티지 재단에 알려 적절한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참여제도이다. 평가대상은 도로포장, 사인, 가드레일, 전화부스, 경계석, 쓰레기통, 버스정류장 및 휴게소, 광고판, 가로등, 벤치, 화단 등의 11가지 공공시설물이다.



1. 런던 시내 가로 시설물
2. 트루만 양조장 지역의 상가 간판
3. 시내 버스정류장 디자인

4. 시티 오브 런던 지역 소공원
5. 런던 중심지 파카디리 서커스 지역
6. 런던 도크랜드 지역의 금융중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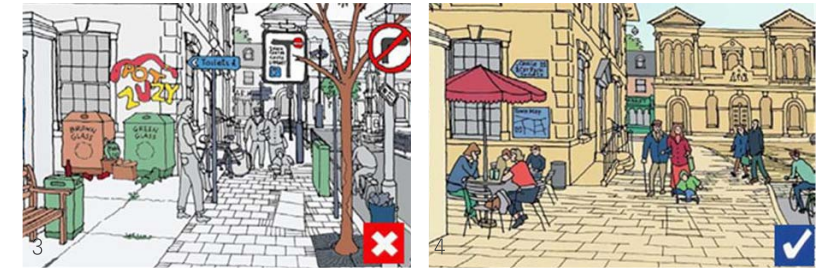
#6 모두를 위한 거리 Street for All

런던의 거리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으로서 영국 해리티지 재단에서 2000년에 추진하였다. 런던 전체를 대상으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지구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런던시의 전체적인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다.



1. 가이드라인에 의한 보행로 포장재 시공
2. 공공공간의 복잡한 시설물 통합으로 쾌적성 향상

3. 거리의 가로 시설물에 의한 혼란
4. 공간의 시설물 정리로 쾌적성과 안전성 확보



자료 : www.publicRealm.info. Street Design for All

#7 주요사업

런던 아이(London Eye), 테이트 모던(Tate Modern) 갤러리 등 재개발사업 추진과 낙후된 100개 지역에 도서관, 광장, 공원 등 주민들을 위한 공공공간을 조성하며, 행정기관 중심의 안내표지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안내표지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1.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가로 시설물
2. 과거와 현대의 건물이 대비되는 런던브리지 지역과 더 샤드(The Shard)빌딩
3. 종남미 스타일의 색채가 돋보이는 노팅힐 지역 건축물

참고문헌

1. 김정후, 영국의 공공디자인 정책과 시사점, 월간국토, 2008
2. 구자훈, 공공디자인의 도시설계적 의미
3.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도시 2012
4.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43>
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15/2014091502401.html
6. <http://practica-practice.tumblr.com/post/67553366041/the-cottrell-house-unlocked-empty-space>
7. www.publicRealm.info. Street Design for All



상생과 협력

평화 문제, 강정해군기지 갈등을 통해 보다

조영배 제주대학교 교수, 문학박사



01 : 강정 해군기지의 갈등은 어떻게 발생하였는가?¹⁾

해군기지 유치문제로 강정마을에 갈등이 시작된 것은 2007년도이다. 해군기지 유치는 찬성하는 측에서도, 반대하는 측에서도 나름의 이유와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강정마을의 경우에는 이 점에 있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특히 찬성 측의 이유와 논리가 전혀 합목적적이지도 않고, 합법적이지도 않았다.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이 타당한가라는 물음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면 과연 강정마을이 최적지인가 하는 점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국책사업으로 해군기지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①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해당지역이 군사적인 최적지인가?
- ② 자연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인가?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보호대상지역은 아닌가?
- ③ 건설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곳인가?
- ④ 그러한 최적지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주민 동의를 얻었는가?
- ⑤ 추진 과정이 합법적이고 윤리적이며 다수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가?

강정마을은 위의 물음에 대하여 그 어느 하나도 충족된 것이 없다.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필요하다면, 군사전문가들이나 제주도민들이 최적지로 거론하는 곳은 바로 제주 화순지역이다. 강정은 만(灣)의 형태로 된 지역이 아니다. 도리어 돌출되어 있는 ‘곶’이다. 그래서 예전부터 커다란 배들이 지나가다 좌초하기 쉬웠다. 반면 화순 항은 이미 군사 항으로 활용되었고, 만(灣)의 형태로 되어 있어 군사시설의 최적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자연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 강정인가? 이것도 아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게도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면, 자연파괴

가 가장 심하게 일어날 곳이 바로 강정이며, 또한 결코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보전지역’이 바로 강정 앞바다이다. 이러한 점을 뻔히 알면서도 해군기지 건설이 강정 앞바다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지는 ‘강정천 인근인 구름비 중덕바다’ 지역이다. 이곳은 제주도 조례에 의하여, 자연재해 등으로 자연 그 자체의 큰 변화와 변경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어떤 이유로도 자연을 개발하거나 파괴할 수 없는 지역으로 지정된, 소위 ‘절대보전지역’이다. 이곳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붉은발말뚝게’가 서식하고 있고, 멸종위기보호2급인 금빛나팔돌산호와 나팔고둥이 서식하고 있다. 그 이외의 보호 종들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예정지 바로 옆에는 연산호 군락이 있어 문화재로 보호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강정바다는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는 곳이다. 더군다나 이곳은 거대한 암반(하나로 연결되어 몇 만평은 뒹직한 거대한 바위)이 구름비 해안을 형성하고 있어서 지질학적으로도 보존할 가치가 매우 뛰어나며, 바다 경관도 최고 등급인 1등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역지를 쓴 해군이나 당시 도지사와 건설세력들을 이해할 수 없다. 제주도민들도 찬반을 떠나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라도, 결코 강정은 아니다’라는 의견에 입을 하나로 모은다.

‘절대보전지역’은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다. 제주도의 10% 정도가 지정되어 있고, 대부분은 한라산 국립공원이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주로 해안에 있는데, 그 중

1) 이 짧은 글을 통하여 10년 동안 갈등 속에 휩싸인 강정마을의 현실을 다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강정마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양상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참고로 ‘강정마을’은 필자의 고향으로, 강정 해군기지 갈등을 처음부터 지켜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밝힌다.



강정 중덕 삼거리 근처에서 시위하는 주민들



◀ 해군(해병대)과 대치하고 있는 장면



◀ 전경과 대치하고 있는 장면

강정 앞바다가 있다. 그런데 당시 도지사와 한나라당 도의회 의원들이 날치기로(당시 도의회 회의록은 이 날 회의가 불법 회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강정 앞바다의 '절대보전 지역' 해제를 결의한 것이다. 이 해제결의는 그 자체가 불법이다. 왜냐하면, '절대보전지역'의 해제는 자연환경의 커다란 변화로 인하여 변경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시 제주도정 자체의 보고 자료는, '절대보전지역 변경사유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도지사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해제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이에 대한 소송에서 법원도 희한한 판결을 하고 말았다. 강정주민들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각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은 의미가 없게 된다. 도지사와 도의회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했다 해제했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판결 자체를 피해버린 것이다.

건설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이 강정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군사시설 면에서 적절지가 아닌 곳, 더군다나 절대보전 지역인 곳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면, 그 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강정 앞바다에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했던 것이다.

합법적이며 일정한 절차를 밟아 강정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그렇게 강정주민들이 반대총의를 전달하였건만, 당시 마을회장이 유치신청을 했다고 하면서 역지를 부렸다. 합법적인 절차나 동의 과정을 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 동안 해군과 건설세력들이 벌인 부도덕하며 비윤리적인 행태들로 강정마을의 공동체적 공감대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필자는 2007년 강정 해군기지 찬반 갈등이 시작될 때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쓴 바 있는데,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07년 3월 31일, 강정마을회장(필자의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강정 마을을 생태마을로 만들어 널리 알리고 이를 토대로 강정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외지에 나가 있는 강정출신들이, 강정이 생태마을로 발전하는데 힘을 보태 주었으면 한다'는 내용이었다. 들던 중 기쁜 소식이라, 만사를 제쳐두고 고향을 방문하였고, 마을의 여러 주민들과 함께 물 좋고 땅 좋고 바다 좋은 강정을 생태환경마을로 발전시켜 나가자 하였다. 너무나 기쁜 자리였고, 마을 청년들로부터 장년들과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강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자 하는 의지를 보고, 필자는 부족한 힘이지만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다고 약속하였다.

얼마 후, 필자는 강정마을 사람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과 지금껏 어떻게 서로 공동체를 이루며 조화롭게 살아왔는지를 알리고, 나아가 제주도가 강정 마을사람들이 꿈꾸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제주도가 되기를 빌며 어느 일간지에 '4월은 살고 있다'라는 칼럼을 썼다. 칼럼이 실린 것이 4월 25일이다. 강정마을 회장이 필자에게 생태마을을 만들겠으니 도와달라고 한 3월 31일부터 20여일이 지난 때였다. 4월 26일, 고향 후배인 Y교수로부터 긴박한 전화가 걸려왔다. '선배님, 칼럼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전화 드렸습니다. 지금 강정마을회장이 생태마을은 고사하고, 해군기지를 강정에 유치하겠다고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필자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아 한 동안 멍하니 있었다. 여러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타지에 사는 강정출신들 앞에서, 더군다나 동창들 앞에서, 생태마을을 해야 우리 마을의 미래가 발전될 수 있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했던 마을회장이, 어떻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생태마을과는 너무

나 거리가 먼 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고 할 수 있는가? 필자의 상식과 머리와 가슴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혹시 후배교수가 잘못 알고 전화한 것은 아닌지... 전화를 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를 물었다. 그는 해군기지 유치를 해야 한다고만 했다. 필자는 생각했다. 혹시 마을 유지들과 대다수 주민들이 해군기지 유치를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래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마을 분에게 전화를 드렸다. 그 분은 펄쩍 뛰었다. '다른 마을에서도 반대하는데, 왜 갑자기 강정마을이 거기에 끼어들려 하느냐'며 분명히 반대했단다. 뭔가 잘못된 일들이 강정마을 사람들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마을 주민 1,800여 명 중 겨우 80여명을 모아 놓고 그 야말로 '후다닥' 해군기지 유치 찬성을 결정하고는, 바로 다음 날 아침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이니...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강정 해군기지 유치 건이 강정마을 전체주민들의 공감대와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과 비민주적이라는 것, 심지어 부도덕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군기지 유치신청에 대한 문제가 강정과 관계된다는 것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뒤늦게 알게 된 대부분의 강정마을 주민들은 '어찌 그럴 수 있느냐?'라며 조직적으로 해군기지 반

대 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힘없는 사람들도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그리고 고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욱 더 강하게 결집하여 그 고통을 극복하려고 한다. 강정 마을 대다수 주민들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반대운동에 나섰던 것이다.

필자는 2007년 당시, 소위 ‘반대대책위’로부터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군기지에 관한 강연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반대파와 찬성파 마을 주민들 간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필자가 강연을 할 때에는 큰 갈등 없이 강연이 이루어졌고, 찬성하는 쪽에서도 참석하여 질의를 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필자는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문제를 삽시간에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역사에 무책임하다. 따질 것들을 잘 따져본 다음, 마을 전체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적인 비밀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가 찬성이든 반대든 따르도록 하는 것이 강정마을 공동체를 깨지 않는 일’이라고 강연을 하였다. 필자는 해군 기지를 유치하였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차근

차근 따져 보도록 호소하였다. 이미 상당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마을주민들의 적법한 민주적 총의를 모아, 강정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강연 후, 당시 마을회장과 오랜만에 함께 자리하였다. 필자는 마을회장에게 말하였다. ‘마을회장이 중립의 위치에 있어

야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된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면, 과연 문제가 제대로 풀리겠는가?’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동창이 ‘조교수 말이 맞다’고 했다. 거듭 마을회장에게 부탁하였다. ‘제발 마을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마을 총회를 소집하여라.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야 한다.’ 마을회장은 분명히 말하였다. ‘총회는 곧 개최하겠다. 반드시 총회를 소집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것이다.’ 그 자리에는 마을 감사가 있었는데, 그 역시 ‘마을회장과 총회를 열어 주민들의 총의를 모으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마을회장은 끝내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약속을 저버렸다. 마을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자, 향약을 근거로 감사 3인이 합의하에 마을총회를 소집하였고, 설촌 이래 최다의 마을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찬성 측 사람들이 회의를 방해하고 투표함을 빼돌리는 등 상식 밖의 일을 저질러 회의가 무산되었다. 마을 감사 3인이 절차를 거쳐 새롭게 마을회장을 선출하였고,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친 마을총회에서 절대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반대를 결의하였다. 해군기지가 완성된 지금(2017년)까지도 강정마을은 공식적으로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 해군기지 반대 집회 현장

02: 강정마을의 갈등과 공동체 파괴의 본질적 원인은 무엇인가?

다양한 관점에서 강정마을의 갈등과 공동체 파괴의 원인을 진단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평화의 참된 의미’라는 관점에서 그 원인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앞서 필자는 평화란 ‘서로 다른 생각의 함께 살기’라고 말한 바 있다. 어느 한 가지 생각

만의 통일을 원하는 것은 ‘동일자 폭력’을 낳을 뿐이다. 평화와 화합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과정을 중시할 때 가능해진다. 강정마을의 문제는 바로 ‘동일한 생각 만들기’로 인한 것이었다.



▲ 강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역할치료극 장면

03: 마치면서

지금 강정은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이 극단적으로 대결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어찌 4.3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필자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강정을 정치적인 이념 대결의 장으로 만들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여 왔다.

‘제발 강정을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무지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곳으로 남게 해 달라’.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강정사람들의 목소리일지 모른다.

필자가 반대운동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찬성 측의 사람들조차도 필자에게 반갑다고 인사를 건넨다.

심지어 찬성 측의 어떤 사람은 ‘강정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까지 한다. 나는 그럴 때마다 어떤 희망 같은 것을 느낀다. 그것은 비록 서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웃끼리 함께 어울려 온 ‘살아있는 문화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이 강정마을 사람들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 강정 땅에는 희망이 있다. 찬성과 반대를 떠나 ‘강정이라는 문화공동체’가 회복되고 지켜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도 강정 사람들과 함께 기도된다. ‘강정공동체를 되살려주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생활계·플라스틱계 SRF 제조산업 현황

최연석 한국기계연구원 박사

개요

국내에서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중에는 발열량이 높은 플라스틱이나 종이와 같은 가연성 폐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에너지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도시에 주로 설치된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로는 소각폐열을 지역난방의 형태로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 지자체에 설치된 약 120여 개의 소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폐열은 대부분 버려지고 있다. 이렇게 버려지고 있는 폐기물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 광역화와 그것에 적합한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근래에 여러 선진국에서 폐기물 에너지 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 고형연료 품질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아울러 폐기물 고형연료 제조 및 이용 분야 산업의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약 15년 전부터 폐플라스틱 고형연료(RPF; Refuse Plastic Fuel), 생활폐기물 고형연료(RDF, Refuse Derived Fuel), 페타이어 고형연료(TDF; Tire Derived Fuel), 목재칩 고형연료(WCF, Wood Chip Fuel) 및 슬러지 고형연료(SDF, Sludge Drying Fuel) 등의 품질기준을 제정해왔고, 2013년부터는 여러 폐기물 고형연료를 SRF 및 Bio-SRF 두 종류로 분류하여 새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육성에도 계속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이 폐기물 에너지의 효과적 이용과 친환경적 처리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다양한 원료로부터 만들어지는 폐기물 고형연료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계 SRF(이하, M-SRF) 및 플라스틱계 SRF(이하, P-SRF) 제조산업의 국내외 동향을 소개한다.

M-SRF 산업 동향

동향 분석

1. 국내 SRF 제조산업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인 M-SRF는 신재생에너지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으로도 유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M-SRF는 연소 시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소각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외국의 실험 결과 70kg/hr 소규모 유동층 소각로에서도 M-SRF를 연소했을 때 다이옥신 농도가 0.2ng-TEQ/ Nm3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폐기물 소각 시 다이옥신이 생성되는 De-novo 합성 과정에서 중요한 촉매제인 철 및 구리 등의 금속이 M-SRF 제조 시 선별공정에서 제거되고 또한 M-SRF 성형 시 첨가하는 석회성분이 염소를 중화하며, 아울러 M-SRF는 고온에서 안정적인 연소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각로는 가동을 시작하거나 정지할 때 저온 구간을 지나면서 다이옥신이 다량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소 지자체에서 주로 설치되는 중소형 소각로는 매일 가동과 중지를 반복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중소형 소각로의 다이옥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에서는 중소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을 M-SRF로 만든 후에 연속운전을 하는 대형 발전소로 일괄 수집하여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에너지 회수의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중반에 1,500톤/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대규모의 M-SRF 제조 플랜트가 유럽에서 도입되어 난지도에 건설되었으나 당시의 생활폐기물은 연탄재가 40% 이상이었고 수분이 매우 많아서 유럽 폐기물과 성분의 차이가 많았으므로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 청주시에 40톤/일 규모의 M-SRF 플랜트가 지어졌으나 성형품의 지름이 100mm 정도로 커서 연소성이 나쁘고 설비의 잦은 고장으로 실패하였고, 그 외에도 일부 소규모 민간기업에서 수차례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를 거듭하였다. 그 후 2000년대 초반에 한국기계연구원과 국내 기업이 공동으로 M-SRF 제조설비를 개발함으로써 비로소 안정적인 국내 기술이 확보되었다. 2000년도부터 국내에서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수거 제도가 실시되고 음식 폐기물도 분리수거하여 자원화함으로써 종량제 봉투 속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불연물과 수분의 함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결과적으로 M-SRF화하기에 유리한 상태로 변화되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 2006년에 환경부의 시설자금 지원으로 원주시에 국내 최초의 M-SRF 제조시설이 국내 기술로 완공되었다.

원주시의 M-SRF 제조시설을 보면, 폐기물 저장투입부, 주공정부, M-SRF 반출부의 3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으며 열풍직접건조 방식의 건조로, 분진 발생이 거의 없는 공기밀폐순환형 풍력선풍기, Ring- Dies 방식 성형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된 M-SRF는 인근의 RDF 전용 발전소에 유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공급량이 부족한 상태이다.

정부는 2002년경부터 폐기물 재활용 향상을 위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서 2003년 8월에 페플라스틱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페플라스틱 고품연료제품의 품질기준·사용처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고시 제 2003 - 127호)을 고시하였다. 동 제도에 따라서 현재 약 200개 이상의 P-SRF 생산업체가 생겨났고, 수요처도 많이 증가하였다. (표 1)은 2016년에 민간업체에서 생산한 P-SRF 통계로서, fluff 형태의 파분쇄품이 57%로서 펠릿 성형품보다 다소 많이 생산되고 있고, 또한 산업체가 많이 있는 수도권과 충청지역에서 전체 P-SRF의 67% 정도가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지역별/제품별 P-SRF 생산현황(2016) (단위:톤)

	성형품(pellet)	비성형품(fluff)	합계
수도권	130,934	109,873	240,807
충청도	82,629	181,429	264,058
경상도	67,842	53,207	121,049
전라도	36,640	85,066	121,706
강원도	5,368	0	5,368
합계	323,413	429,575	752,988

비성형 P-SRF는 대부분 시멘트 소성로에서 연료로 사용되고 있고, 성형 P-SRF는 염색공단이나 제지공장 등의 보일러에서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양질의 P-SRF는 발열량이 석탄보다 높고, 환경성도 좋아서 톤당 1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으나, 근래에서 국제 유가의 하락 및 세일가스 보급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2. 해외 SRF 제조산업 동향

(그림 1)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기구인 UNF CCC에서 2016년 기준으로 세계 79개국의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선진기술을 요청한 내용을 나타낸 것인데, 폐기물 에너지 분야의 기술 요청이 11.3%를 차지하고 있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전체의 수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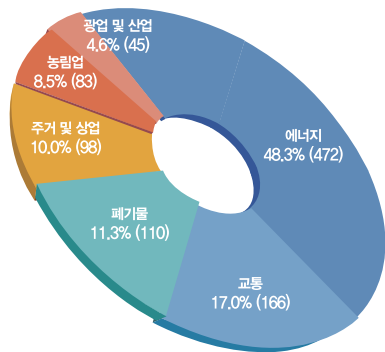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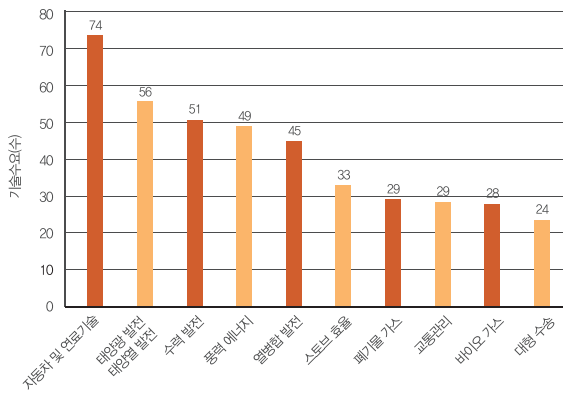


그림 1) 개발도상국 기후기술 수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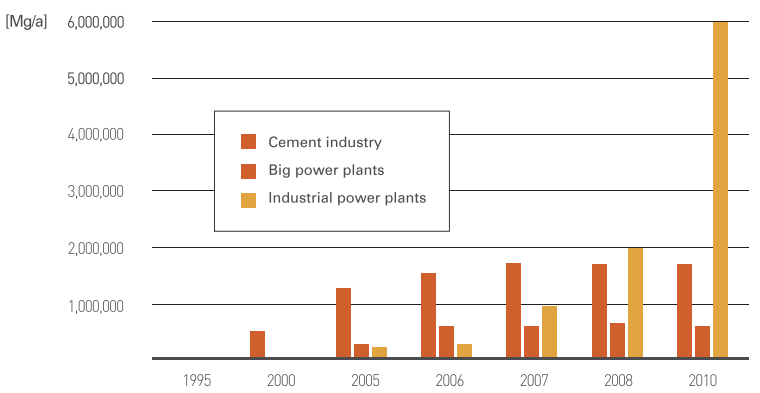
48.3%임을 감안할 때, 폐기물 에너지의 비중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폐기물 에너지 활용방법은 소각로 폐열회수이고, 다음으로는 SRF로 나타났다. 페플라스틱 오일화, 폐기물 가스화 및 매립지가스 이용 등은 아직까지 실적이 많지 않은 편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과 같이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는 폐기물을 주로 매립 처리하고 있으나,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경우에는 소각 및 SRF화 처리를 많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지역 여건이 비슷한 유럽에서는 근래에 폐기물 처리 방법에 커다란 변화가 있는데, 소각 및 매립 처분 대신에 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시설에서 폐기물을 고품연료로 생산하는 방법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MBT 기술’은 M-SRF 공정에 유기성 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공정이 추가된 기술로서, 정원 폐기물이나 음식 폐기물과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분리배출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유럽연합은 교토의정서 의무 준수 방법의 하나로써 가연성 폐기물 및 유기성 폐기물이 가진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회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해서 매립장 반입 폐기물에 대한 기준 강화와 회원국의 연차별 매립량 감소 목표치 할당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 매립 지침(Directive of Landfill waste, 99/31/EC)’을 1999년에 제정하였다. 아울러 유럽표준협회가 4년 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2006년 초에 SRF의 연료적, 환경적 품질기준값을 결정하고 유럽공동기준(CEN/TS 15359)으로 제정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그 결과, 유럽에서 SRF 생산량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국가 간 교역량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영국에서 생산된 SRF가 타 유럽 국가로 많이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2)는 독일의 SRF 사용 분야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시멘트 공장, 공공 대형 발전소 및 산업체 발전소에 주로 사용되고, 특히 산업체에서 발전용 연료로 사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이것은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하여 신재생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열병합발전을 하면 단순히 전기만 생산하는 것보다 열회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 노이원스터 시에는 700톤/일 비성형 생활폐기물 고품연료를 순환유동층 보일러에서 석탄과 혼합 연소하여 지역난방과 전기 생산을

그림 2)
독일의 SRF 사용 현황
및 추세



동시에 함으로써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와 폐기물 성상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현재 약 70곳의 생활폐기물 M-SRF 제조 플랜트와 다수의 P-SRF 플랜트와 함께 M-SRF 전용 발전소 5곳과 사업장 폐기물 연료 발전소 11곳이 가동되고 있다. 이 밖에 시멘트 소성로, 제철소 등에서도 M-SRF를 이용하고 있다. 일본의 M-SRF 전용 발전소는 인근의 여러 지자체가 생산한 M-SRF를 수집하여 한 곳의 대형 M-SRF 발전소에서 일괄 연소하는 체계이며, 공해 가스의 분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폐기물 광역화 처리 시스템의 중심시설이다. (표 2)는 일본의 M-SRF 전용 발전소 현황으로, 발전소 1곳에서 하루 200~320톤 정도의 M-SRF를 사용하고 있고 발전능력은 3~21MWe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2) 일본의 대용량 M-SRF 전용 화력발전소 현황

주요항목	이바라키현	미에현	후쿠오카현	이시가와현	히로시마현
사업주체	카시마 공동 자원화센터	미에현기업청	오오무타시 리싸이클발전	이시가와북부 M-SRF광역처리조 합	후쿠야마 리싸이클발전(주)
참가시정촌 수	3시정, 수미토모 등 75회사	26시정촌 (M-SRF;7개소)	28시정촌 (M-SRF ; 7개소)	24시정촌 (M-SRF ;5개소)	15시정촌 (M-SRF ;7개소)
M-SRF 연소능력	200 t/d (M-SRF 100, 산폐 100)	240t/d(120x2로)	315t/d(1 기)	160t/d(80t x 2로)	314t/d(17기)
발전 능력	3,000 kW	12,050 kW	20,600 kW	7,000 kW	약 20,020 kW
발전 효율	17.5%(증기 有)	28%	약 30%	약 21%	28.1%
총 사업비	약 54.5억엔 (시설 40억엔)	89.6억엔 (토지 포함)	약 105억엔	약 102억엔	약 110억엔 (시설 89억엔)
매전단가 (2003. 7)	7엔/kW	약 9.4엔/kW	약 8엔/kW	년간가중평균 6.9엔/kW	약 8엔/kW
전소로 형식	킬른스토커	외부순환 유동상	내부순환 유동상	유동식가스화용융	샤프트로형 가스화용융
제작업체	히타치 조선	후지전기	가와사키중공업	히타치 조선	JFE 엔지니어링
저장 사일로	옥내 피트 (1,070 m³)	사일로(1 기) (4,000 m³)	사일로 (17기) (14,000 m²)	사일로 (27기) (5,000x 2m³)	사일로 (27기) (10,000x2m³)

SRF 제조산업 전망

현재 국내의 폐기물 에너지 자원량은 약 900만toe 정도이고, 이 중에서 약 50%정도의 폐기물 에너지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도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약 39%를 폐기물 에너지에서 확보하고 있고, 폐가스를 포함하면 63.5%에 이른다.⁽⁸⁾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폐기물 에너지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통계이다. 국내 산업 규모의 팽창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비례하여 폐기물량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폐기물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원이다. 미사용 폐기물 에너지 중에서 M-SRF화 방식으로 최소 100만toe 정도는 1차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을 발전소에서 사용할 경우에 약 450MW 발전 능력에 해당하며, 총 발전량으로는 약 500만MWh/년으로 한국전력 총 발전량의 약 2.0%에 해당하고 석탄 수입을 대체함으로써 연간 1,500억 원의 효과가 발생한다.

근래에 우리나라는 폐기물 분리수거 정책에 힘입어서 가정생활폐기물에서 음식물과 재활용품의 분리선별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종량제 봉투 속에 담겨서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성상이 M-SRF화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계속 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M-SRF의 품질과 생산경제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P-SRF 생산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플라스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개인기업체인 폐기물 배출업체와 위탁처리업체 사이의 계약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폐기물 분리배출과 같은 제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배출업체에 따라서 페플라스틱 폐기물의 수분과 이물질의 차이가 매우 크고 간혹 음식 폐기물이 함유된 사례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과 인도 등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석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석탄 가격이 계속 인상되는 추세이므로 석탄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저렴한 석탄 대체연료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이며, SRF가 좋은 해결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분석되는 SRF 산업이 예상대로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로, 국민의 호응 속에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음식 폐기물의 분리수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야 하고 둘째로, M-SRF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고 셋째로, 고효율의 SRF 제조 및 사용설비를 개발하기 위하여 이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로, 장기간 보관 가능하고 사용이 편리한 고품질의 SRF 생산을 정책적으로 장려함으로써 국민들에게 SRF가 석탄처럼 안심할 수 있는 연료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SRF 수요가 창출되기 시작하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SRF 기술이 외국보다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수출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한다.

참고 문헌

[1] 2016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수입 실적현황, 한국환경공단, 2017

[2]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2015년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2016

[3] 2016 춘계기술워크샵 프로시딩,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2016

[4] 환경부령 제 497호, 2013. 2.

[5] CEN/TR(Technical Report) 14745, Solid Recovered Fuels, 2003

[6] Jan Theulen, Standardization as a help to facilitate SRF acceptance and use, ERFO, 2013

[7] prCEN/TS 15359,'Solid recovered fuels-Specification and classes' final draft, CEN, 2005

[8] Report on RDF/SRF utilization applications an technical specifications, LIFE09 ENV/GR/000307, 2011

우리에게 농촌은, 무너진 삶의 원형을 기억하는 기회의 공간이다

이용원 월간 토마토 편집장

1

조우산 카페(Zousan Cafe)에 돌아왔을 때, 이즈츠 토모히코 씨는 드럼통을 만지고 있었다. “이게 새롭게 만든 화로입니다. 불이 훨씬 오래 가요. 기존 것보다 최소한 세 시간은 더 탈 거예요.”

설명은 진지했다. 화로는 연탄구이집에 가면 볼 수 있는 드럼통 보다 조금 작았다. 드럼통 양 옆에는 구멍 여러 개가 있었다. 대보름 쥐불놀이 할 때 강통에 뚫었던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구멍의 간격과 마무리한 매무새를 통해 훨씬 정교한 작업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아무래도 그 구멍에 불이 오래 타는 비밀이 있는 모양이다.

드럼통 안에는 세로로 꽃아 넣은 장작이 가득하다. 위에서 불을 붙인다. 시간이 얼마 지나자 불은 서서히 아래로 옮겨 붙었다. 불이 제대로 붙은 것을 확인하고 토모히코 씨는 부엌에서 야생 멧돼지 넓적다리 한 짝을 들고 나온다. 도마 위에 넓적다리를 올려 두고 일행에게 먹기 좋게 자를 것을 요구한다. 정육점에서 볼 수 있는, 파르르 날 선 식육 칼도 아니고 정글에서 사용할 법한 투박한 나이프다. 쉽지 않아 보인다.

잠깐 보이지 않던 토모히코 씨가 어린 썩 튀김 같은 음식을 가져와 건넨다. 씹새름한 맛과 짠 맛이 술안주로 제격이다. 조리법을 개발해낸 모양이다. 산에서 채취했다는 식물과 조리법을 설명하는 모습 역시 진지하다.

2

일본 게이호쿠에서 만난 풍경이다. 히로시마현 야마가타군 기타히로시마정에 속한다. 인구 2,000명 남짓의 작은 산골짜기 마을이다. 히로시마 공항에서 게이호쿠까지는 차를 운전해 두 시간쯤 걸린다. 충청북도 단양이나 강원도 영월과 비슷한 풍경이다. 고지대이고 눈이 많이 내려 곳곳에 스키장이 있다.

우리가 찾아간 조우산 카페는 과거 스키숍이었다가 문을 닫아 비어있던 곳이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히사시 우에다 씨는 도쿄 생활을 정리해 이곳 게이호쿠로 이사왔다. 우리에게 화로를 설명하고 멧돼지 넓적다리를 가져다준 토모히코 씨는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이다. 도쿄대학에서 우주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로 좋은 자리가 있었지만, 거부하고 홀연히 게이호쿠에 들어왔다.

우에다 씨는 마을과 공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우산 카페’를 운영한다.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판매하는 일반적인 카페다. 하지만, 마을 주민에게는 커뮤니티 공간이기도 하다. 이 공간에서 다양한 강연과 토크쇼, 공연, 강습이 열린다. 한쪽에서 그의 본래 사업이었던 스리랑카 코끼리 똥을 활용해 만든 공정무역 상품을 진열해 판매한다. 이외에도 지역 주민과 합심해 농업과 임업, 별자리 관찰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만들어 제공한다. 최근에는 카페 2층에 출판사를 차려놓고 자신의 이야기부터 책으로 출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게이호쿠는 우에다씨 할아버지의 고향이다. 이곳은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자급자족하는 삶 등을 추구한다. 우에다 씨가 도쿄에서 이 작은 산골 마을로 옮겨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한 것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결정적이었다. 더 오래 타는 화로, 멧돼지 사냥과 발골, 산나물 채취와 조리 등이 모두 진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스스로를 ‘비즈니스맨’이라고 정의하는 우에다 씨는 이곳 게이호쿠 마을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곳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실증적 성공 사례를 보여주어야 해요. 더 많은 사람이 마을에 관심을 갖고 이곳에 찾아오고, 필요하다면 거주지를 옮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이요. 우선, 이 마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지요.”

우에다 씨의 이런 생각과 다양한 활동은 일본 과소지역 문제 해법과 얽혀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고 인구가 급격하게 늘지는 않았다. ‘우에다 씨의 의지와 결단, 시도’ 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상황이다.

3

우에다 씨가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보며,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 확보하는 이 시대의 삶을 되돌아본다. 이런 형태의 삶이 지닌, 얇은 유리처럼 한없이 가볍고 쉽게 깨질 것만 같은 ‘위태로움’은 현실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앞에 무기력하게 내려앉은 일상, 너무 가벼워 당혹스러웠지만 우에다 씨는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대안을 모색했다. 과거 어느 시점, 내 손으로 내 삶을 일구었던 기억을 간직한 공간이 바로 ‘게이호쿠’였다. 여전히 맑은 공기와 물이 있는 이곳에서 직접 사냥하고 산나물을 채취해 조리하며 산에 있는 나무를 잘라 집을 만들고, 좀 더 효율이 좋은 난방 기구를 개발하는 데 몰두한다.

이들은 ‘과소지역’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그곳은 오히려 왜곡된 이 시대, 우리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다. 그러니 과정보다 무겁지 않다. 문제로 바라보며 대상화 시켰다면 논리를 가져다 붙이느라 애를 먹어야 할 지도 모른다. 또 기존 시장 경제 질서 안에서 결국 차별성도 경쟁력도 없는 대안을 모색하려 헛심을 빼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삶의 올바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접근 방식은 전혀 달라진다.

대한민국의 농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 단순히 귀농·귀촌만 장려할 것이 아니다. 농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그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농촌은 문제의 땅이 아니라 무너진 삶의 원형을 기억하는 기회의 공간인 것이다.

멀미 체질의 해외여행 마니아

권오덕 前대전일보 주필

지난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자는 총 2,238만 명이다. 국민 2명당 한명이 해외여행을 한 셈이다. 올해는 대통령탄핵과 구속, 조기대선, 경제 불황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자가 사상 최다인 2,5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5월 황금연휴에 이어 10월에도 9일간의 연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 마니아들에게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을 듯 싶다.

필자 역시 해외여행이건 국내여행이건 가리지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가방을 싸는 여행 마니아다.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가능한 한 군데라도 더 가보려 한다. 올 해도 세 번은 나갈 것 같다. 남들은 여행 잘 다니는 우리 부부가 부러운 눈치다. 특히 내 또래 친구들은 더욱 그런 것 같다. 여행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먹은 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특히 나 이 들어선 더욱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 세계
40여 개국 여행,
중남미 못 간 게 恨

해외여행을 즐기려면 몇 가지 갖춰야할 것이 있다. 돈과 시간, 그리고 건강이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도 해외여행 한 번 못 해본 사람이 솔하게 많다.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많은 연금을 받는 친구 중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본 사람이 부지기수다.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돈이 아까워서, 또 자신과 부인의 건강이 안 좋아 가지 못하는 경우도 적절하다.

해외여행 못 가는 걸 “자식들 유산 때문”이라는 친구도 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자유롭다. 벌여놓은 돈이 적어 유산 걱정이 없으니, 있는 돈을 해외여행에 쏟아 부을 수 있다. 나는 세계 40여 개국을 누빈 마니아로 유명한 곳을 많이 다녀왔다. 특히 파리·로마·빈·부다페스트·프라하 등은 3~5번 가봤다. 자식들은 “아빠엄마 여행 좋아하다 재산 거덜 나게 생겼다”며 태산 같이 걱정이다.

나는 올해 이미 2번 해외에 나갔었고 가을에 한 번 더 나갈까한다. 지난 2월 세계 3대종교 성지가 있는 이스라엘·요르단, 5월에는 베트남의 다낭·후에·후안을 다녀왔다. 예루살렘과 요르단의 페트라, 다낭·후에는 ‘평생 꼭 가봐야 할 세계 50대 명소’이다. 나는 50개 명소 중 27곳을 가봤다. 계획했던 중남미와 아프리카를 못 가 아쉽지만 돈이 많이 들고 일정이 길어 포기한지 오래다.

체력이 도저히 뒷받쳐주지 못할 거라는 판단도 없지 않았다. 그 돈이면 차라리 짧은 일정 5~6군데를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젊었을 때 못 가본 게 후회될 뿐이다. 앞으로는 가까운 일본, 중국과 동남아 일대를 간간히 돌아보고 유럽의 안 가 본 소국을 능력 닿는 대로 가 볼까 한다. 나이를 감안해 후진국이나 오지, 너무 많이 이동해야 하는 곳 등은 피할 생각이다. 교통편과 잠자리가 편하고 식사가 어느 정도 입맛에 맞는 곳을 고르려고 한다.

버스와 배를 이용한 이동이 많은 여행지는 꼭 피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바로 멀미 때문이다. 여행할 때 언제나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멀미이다. 이런 치명적 약점을 가진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 것은 아이러니요, 패러독스다. 멀미만 없었어도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곳을 다녀왔을 것이다. 50여 년 전 대학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그때 완전히 죽었다 살아났다. 최근 울릉도와 홍도에 갈 때 심한 멀미로 여행을 망쳤고, 15년 전 가족과 발리여행 때도 불과 1시간여 배를 타고나서 두 딸과 나는 인사불성이 되었다.

내 멀미는 선천적이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빼 닮았다. 아버지는 전혀 멀미가 없어서 조선팔도를 한량처럼 누비고 다니셨다. 그런데 내 멀미에 신통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버스·승용차·배 멀미는 하지만 비행기와 기차 멀미는 안 한다는 점이다.

여행의 아킬레스건
‘멀미 체질’



둘째는 버스의 경우 하루 멀미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멀미를 덜 한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여행을 즐기는지도 모른다.



가족과 함께한 발리·코타키나발루 섬 여행 '가장 환상적'

잊지 못할 해외여행은 1979년 11월 3주간의 미국 서부여행과 2차례 걸친 가족여행이다. 미국여행은 최초의 해외여행(UC버클리대학의 충남대 여자배구초청경기취재)으로 스탠포드대, UC버클리대, USC, 워싱턴 주립대, 하와이대 등 미국 서부지역의 명문대학을 두루 방문했다는 점이다. 물론 유명관광지도 둘러 전무후무한 여행이 됐다. 교민·유학생들의 열렬한 환영은 지금까지 잊지 못한다.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 다섯 식구가 함께 한 2002년 7월 발리 섬 여행은 진하게 뇌리에 남는다. 2015년 2월 5명의 손자 손녀와 두 사위·며느리 총 13명이 함께 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가족여행 역시 앞으로 두 번 다시 없을 여행이었다. 손자·손녀와 함께 배를 타고 좁은 강을 살피본 반딧불투어와 원숭이 탐사, 패dnp러세일링 등은 지금 생각해도 환상에 젖을 정도이다.

이런 가족여행은 앞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손자손녀들이 성장해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고, 자식들도 직장생활로 바빠 동시 휴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시간이 맞는다 해도 온가족이 다함께 가는 여행은 피하고 싶다. 자칫 사고가 나면 일가족이 큰 참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우려로 부부간도 따로 여행한다는 한 지인의 얘기를 듣고부터 하게 된 생각이다.

충남 소식

#1

올여름 '만리포 가는 길' 편리해진다

국도 32호 확포장 마무리 단계
해수욕장 개장 앞두고 임시 개통



도는 태안~만리포 국도 32호선 확포장이 7년여의 공사 끝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따라 이달부터 임시 개통한다고 7월 2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총 1,0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이 도로는 태안을 장산리에서 소원면 모항리까지 13.1km를 연결하고 있다.

이 도로 확포장은 태안이 사계절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상황에서 주말을 비롯한 성수기에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고, 서해안 유류 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 집중 투자 필요성에 따라 실시했다. 현재 공정률은 95% 수준으로, 교통 안전시설과 표지판 등에 대한 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12월 준공한다.

#2

원·하청 근로자 모두 안전한 일터 만든다

도-대전고용노동청-삼성DP
'산업안전 공동선언' 실천 협약



충남도, 대전고용노동청,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산업재해, 안전 사고 없는 일터 정착과 원·하청 동반성장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7월 3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1캠퍼스 회의실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정착을 위한 노·사·정 산업안전 및 사회적 책임 실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범 도 경제통상실장과 고용노동부 오복수 대전고용노동청장, 삼성디스플레이 이재열 환경안전상무이사, 윤병일 근로자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근로자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원·하청 산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사업장 안전보건 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3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60억 원 지원

전국 광역도 최초 도민 제안사업 공모

충남도가 7월 3일부터 28일까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60억 원 규모의 도민 제안사업을 공모했다. 이번 공모는 자문, 아이디어 제공 등 사업제안 단계에 머물렀던 도민 참여 수준을 계획 수립, 실행, 평가·환류 등 사업 전 단계로 확대해 도민 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도민이 직접 발굴한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도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도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평가는 도내 시·군 소관 부서가 사업 구체화 과정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제출하면 4개 분과위원회가 재평가 작업을 실시한 후 도와 시·군 참여예산 위원 전체 회의에 상정,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4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 개선에 총력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처우·차별 개선 등 투트랙 추진

충남도가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비정규직 132명을 향후 3년 간 단계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 계약직 등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한다. 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 '제1차 충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3차례 걸쳐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3차례에 해당하는 이번 '2017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대책'은 그간 도청 및 사업소 중심에서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말 기준 도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비정규직 316명 가운데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184명을 제외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근무 중인 132명은 모두 무기 계약직 등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한다.

이외에도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자에게 복지 포인트 시행 권고 △동종·유사 직종 간 순환근무 실시 △비정규직 교육기회 부여 등을 통해 고용 개선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그간 충남도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였던 만큼 앞으로도 관련 부서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차별 개선에 노력하고 정기적인 공공기관 직무분석을 통해 비정규직이 양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5

‘충남판 제2국무회의’ 만든다

‘도지사-시장·군수 정책협의회’ 설치 추진
현안 논의 정례화



충남도가 도지사-시장·군수 간 상시·전체 소통 채널을 가동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2국무회의’ 설치를 공식화한 가운데, 도지사-시장·군수 간 논의 기구 마련 및 회의 정례화로 ‘충남판 제2국무회의’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역 정책 및 현안 공유·논의를 위한 ‘(가칭)도지사-시장·군수 정책협의회’를 설치,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6월 27일 밝혔다. 그동안 도지사-시장·군수 전체 회의는 상반기 신년 영상 인사와 하반기 1차례 회의 등 연간 두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갖는 것에 그쳐왔다.

안희정 지사의 의지에 따라 설치를 추진 중인 도지사-시장·군수 정책협의회는 도지사가 위원장을, 시장·군수협의회장이 부위원장을, 시장·군수가 위원장을 맡고, 도 자치행정국장이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지사-시장·군수 정책협의회에서는 도와 시·군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각종 재난이나 위기 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6

충남 수출 연중 최단기간 300억 달러 돌파

1~5월 306억 9,900만 달러 기록
월중 무역흑자 최대치

충남지역 수출이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최근 10년 내 가장 이른 시점에 3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도내 총 수출액은 306억 9,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5억 3,400만 달러에 비해 25.1%(61억 6500만 달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수출은 2,280억 30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동기 1,960억 300만 달러에 비해 320억 달러가 늘었다.

수입은 석탄(109.7%)·석유제품(112.0%)·원유(76.9%) 등 원자재 수입 증가로 전년 동기(79억 1,500만 달러) 대비 45억 7,300만 달러(57.8%)가 늘어난 124억 8,8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올해 5월 말 기준, 충남 무역수지는 182억 1,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억 9,200만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무역흑자 344억 700만 달러의 절반이 넘는 수치로, 충남이 전국 무역흑자를 이끌며 5개월 연속 ‘전국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연구원 소식

#1

충남도,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 머리 맞대'

6월 26일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한국어촌민속마을 본격 조성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충남도 정낙춘 해양정책과장은 “도내 어민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사라져가는 어촌마을의 경관과 문화를 보존하고, 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할 때”라며 “이 사업은 2022년까지 99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어촌 전통가옥 단지와 어촌민속박물관, 어촌 체험 및 생태관광 시설 등을 갖춘 ‘바다의 한국민속촌’”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충남연구원 정지은 책임연구원은 “전통적인 어촌 모습과 자원 보존을 통해 어촌의 잠재력을 끌어낼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은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어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코 뮤지엄 형태 또는 테마파크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승우 어촌정책연구실장의 좌장으로 충남도 정낙춘 해양수산과장 등 관계관, 농어촌연구원 윤상현 책임연구원,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원 이재언 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임선빈 선임연구원,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유보경 연구교수,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황순주 차장, 충청투데이 이종원 본부장 등이 참석해 한국어촌민속마을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

충남연구원 개원 22주년 기념 ‘데이터에 눈뜨다, 스마트 충청남도’ 학술 세미나 개최

충남연구원은 6월 15일 ‘데이터에 눈뜨다, 스마트 충청남도’라는 주제로 개원 22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대응의 일환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의사결정’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실현 가능한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는 지역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효과적인 데이터 수집과 융·복합 정보 생산은 새로운 정책수요를 발굴하고 미래를 예측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VW Lab의 김승범 박사가 시각화 기법을 이용한 충청남도 정책도출 사례와 활용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박사는 “데이터의 시각화는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사 결정에 효과적”이라며 “실제 지역 연구에 필요한 세부 데이터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 연구원 가족,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리고 개원 2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실제 충남지역 데이터 분석 사례를 아이디어 북 형태로 엮은 충남정책지도 특별호를 제작하기도 했다.

#3

충남연구원, ‘지도로 보는 충남 농어촌 마을 이야기’ 펴내

충남연구원이 개원 2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도로 보는 충남 농어촌 마을 이야기’를 펴냈다고 6월 13일 밝혔다. 총 62쪽 분량의 이 책자는 충남도 농어촌 마을이 처한 상황과 정책 필요성을 알기 쉽게 ‘지도’와 ‘도표’로 시각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한 충남연구원 윤정미 연구위원은 “연구성과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바로 소통이자 신뢰”라며 “충남 농어촌과 관련된 기존 연구성과 중 정책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분석해 이미지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 책자는 충남연구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누구든지 볼 수 있다”며, “충남 농어촌 분야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정보 제공과 활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4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지역 대기 질 측정 및 건강실태 조사

충남연구원과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 지역에 대한 대기 질 측정 연구와 건강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연구 대상 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된 충남 보령시(보령화력 1·2호기)와 서천군(서천화력 1·2호기). 산업통상자원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만큼 셧다운 시행 전후 대기 질 분석과 건강실태 조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연구진은 6월부터 7월 말까지 해당 지역 대기 질 측정과 지역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환경 변화 체감도, 대기 질과 관련된 건강 상태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농도 측정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과를 분석해 오는 8월 말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충남연구원 관계자는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 발전량의 48%를 차지하는 등 그동안 환경과 건강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연구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3월~6월)에 따른 환경과 건강실태 조사 의 사전 연구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에서 셧다운 된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한 지 30년이 넘는 노후 발전소 10기 중 호남 1·2호기를 제외한 8개다.

#5

도내 하천 수질 인포그래픽 제작 “충남 하천 수질 깨끗해지고 있다”

충남 하천 수질이 지난 2008년에 비해 깨끗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월 2일 충남연구원은 도내 하천 수질(2008년, 2016년)을 비교 분석한 인포그래픽을 통해 “지난해 기준 1·2등급 하천은 74.4%로 2008년 64.5%에 비해 약10% 늘어났다”며 “충남도의 지속적인 물 통합관리 정책에 따른 모니터링과 수질 개선 노력으로 오염원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각 수계별 주요 오염원을 분석해보니 공통적으로 축산계와 생활계 오염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은 천안시와 아산시, 그리고 서산시 등은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배출 부하량이 높았고, 홍성군, 예산군, 논산시 등은 축산폐수 비중이 높았다.

수계별 수질을 분석한 결과, 금강수계와 삼교호수계, 안성천수계 수질은 깨끗해진 반면, 서해수계 수질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 김홍수 전임책임연구원은 “서해수계의 수질 개선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특히 홍성군, 보령시 등 축산계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6

“금강하구 생태복원,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로 해결해야”

충남연구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금강하구 생태복원에 관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효율적인 하구관리 법제 마련과 하구관리 통합관리 계획수립 등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를 제언했다.

충남연구원 정옥식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서해안은 지난 천 간척사업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가장 위험한 철새 이동경로로 전락했지만, 사실 금강하구(서천 갯벌)는 넓적부리도요, 청다리도요사촌 등 10여 종 이상의 전 세계 멸종위기 조류가 서식하는 곳으로 그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생명력 있는 갯벌을 확대시키기 위해 금강하구독 해수유통은 물론 생물자원 확보, 금강생태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충남 문화유산 48

청송선생유묵(聽松先生遺墨)

김소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소재지 | 충청남도역사박물관
시대 | 조선시대(16세기)
규모 | 세로 35cm 가로 17cm

[청송선생유묵]은 청송(聽松) 성수침(成守琛, 1693~1564)이 두보, 백거이, 두목, 이상은 등이 쓴 중국의 당시(唐詩) 68수를 필사한 서첩이다. 성수침의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중옥(仲玉)이며, 청송이라는 호 이외에도 죽우당(竹雨堂), 파산청은(坡山淸隱), 우계한민(牛溪閔民) 등 다양한 호를 사용했다. 퇴계 이황과 더불어 16세기를 대표하는 도학자로서, 아들인 우계(牛溪) 성훈(成渾, 1535~1598)을 비롯하여 수많은 석학들을 배출하였다.

그는 당대 명필가로서 이름을 날렸지만, 아쉽게도 현존하는 그의 필적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희소성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남아있는 청송의 필적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필치를 보여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청송 심씨 집안이 아닌 충남 논산의 파평윤씨 팔송(八松) 윤황(尹煌, 1571~1639) 가문을 통해 전해져왔다.

윤황은 충청지역 우계학맥을 잇고 노서 윤선거와 명재 윤증 부자의 사상적 부리가 되는 인물로, 바로 우계 성훈의 사위였다. 따라서 성수침의 필적이 윤황가에 남겨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대가 아닌 1808년(순조 8)에서야 그의 후손인 윤자찬(尹滋贊, 1784~1822)이 누군가의 집에서 물에 젖고 종이 슬어 방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묵을 발견하고 수습한 것이다. 그는 이러한 수집 과정과 유묵을 접하고 난 후의 감상평을 적어 유묵의 앞뒤에 배치하고 지금과 같은 첩장 형태로 만들었다.

이 자료에는 16세기 성수침의 유묵과 19세기 윤자찬의 시문 이외에도 20세기 충남 공주지역에서 활동했던 방랑화가 '두산(斗山) 정술원(鄭述源, 1885~1959)'이 그린 산수화와 화훼화도 실려 있다. 수 세기에 이르는 우리 선조들의 숨결과 자취가 고스란히 담긴 [청송선생유묵]은 충청남도역사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